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1

해양수산부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1 핵심 민생과제 선정, 민생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 체감도 향상

○ (**핵심 민생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 국정과제 연관성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핵심 민생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추진**

- (**집중관리**)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에 따라 **가점**(+3점)을 **부여하고, 담당부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생현장 의견수렴**) 현장중심의 성과견인을 위해 관리과제별로 **민생현장 의견수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소통관리**)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 민생현장 의견수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

2 협업과제 발굴 등 부서간 협업 촉진 및 협업 성과 창출

○ (**협업과제 발굴**) 부서간에 업무중심·일중심·아젠다 중심의 협업 활동과 성과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과제' 부문을 신설하고 협업과제 발굴에 따라 가점**(+0.5점)을 **부여**

* 소속기관 등 수직적 협력, 인사·예산 등 지원부서와 협력, 일회성 관계적 협력 등 제외

- (**협업성과 창출**) **자원 절감, 갈등해소,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창출 등** 협업과제 추진성과에 따라 **추가 가점**(+1점)을 **부여**

3 성과지표 사전검토를 통한 성과지표 개선 및 발굴

○ 관리과제의 핵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양질의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성과지표 후보군 작성,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 정책대표성, 신뢰성, 목표치의 적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 및 발굴하여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

4 자체평가 미흡 · 부진과제 관리 강화

○ (**미흡·부진과제 관리**) 자체평가 **미흡·부진과제**(6·7등급)를 대상으로 **지속적 개선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미흡·부진과제**에 대한 **반기별 실행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반기별로 점검**

* '23년도 자체평가 미흡과제(9)·부진과제(3개) 개선계획을 '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5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 (**운영 내실화**) 활동의 충실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타 부처 **중복 선임** 및 장기간 **연임**을 **제한**

- (**중복 선임**) 원칙적으로 우리 부를 포함하여 **2개 부처까지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임기 일시적 중복 등)는 3개 부처까지 허용

* 우리 부 자체평가위원의 타 부처 평가위원 중복 활동 여부 등 점검

- (**연임**) 2년 임기 기준, **3회까지 허용**(최대 6년)

○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부서에 대한 **평가 제척**

- 총괄평가협의회*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과제를 평가하지 않는 4분과 위원을 전체 위원장******으로 별도 지명**

* 위원장, 소분과·분과위원장이 참여하며, **분과별 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최종 등급**을 **결정**

** 전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전체 업무를 통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①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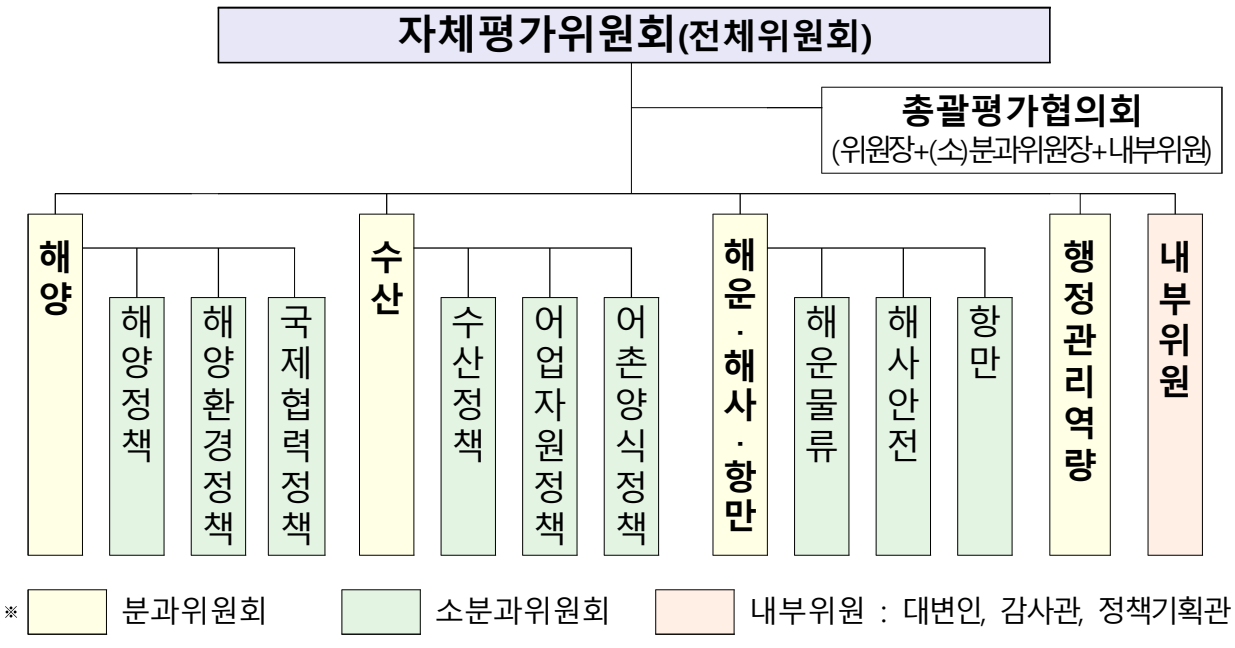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담보를 위해 민간전문가(27명)와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해수부 훈령 제496호) 운영

- (**전체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 대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분과위원회**) 전문 분야별 분과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과 **소관 관리과제 평가**

  * (1분과) 해양(해양정책/해양환경/국제협력), (2분과) 수산(수산정책/어업자원/어촌양식), (3분과) 해운물류·해사안전·항만

- (**총괄평가협의회**) 위원장, (소)분과위원장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 분과별 **평가결과 조정** 및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 등을 수행



○ (**평가지원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점검 실시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총괄지원팀과 분과별 지원팀**을 구성·운영

② **평가 절차**

< 2024년도 성과관리과제 평가 일정 >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대면 평가	총괄평가 협의회(1차)	이의신청	총괄평가 협의회(2차)	전체 회의 (등급 확정)
'24.12.16~12.23	'25.1.7~1.9	'25.1.11	'25.1.16~20	'25.1.24	'25.1.24

<서면평가 및 사전질의>

○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성과지표의 부합도는 서면평가 실시

- 자체평가위원별로 제출한 사전질의서와 부서의 답변을 전체 분과위원에게 공유

<대면평가>

○ 소분과 단위로 대면회의를 통해 부서별 정책성과를 상대 비교(5단계 등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총괄평가협의회>

○ 평가 등급 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치밀한 검토로 평가 공정성 확보

- 7단계(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로 과제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수용여부 검토

<전체 회의>

○ '24년도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방법

○ (**소분과 평가**) 관리과제의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5단계(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로 평가등급 강제 배분

【소분과별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순위누적	~20%	20%~35%	35%~70%	70%~80%	80%~

○ (**등급결정**) **총괄평가협의회**를 통해 **7단계 등급**(분과단위)으로 상대 등급화

【최종 평가등급 분포 기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부진
순위누적	~5%	5%~20%	20%~35%	35%~70%	70%~80%	80%~95%	95%~

○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총괄평가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 결정

○ (**결과확정**)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결과 **확정**

- 평가결과는 전체회의 개최 이전에 모든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제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본부 **45개 부서(과, 팀)**의 **50개 관리과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5	15	50	94

○ 평가지표

구분 (100점)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정책추진 노력 (30점)	○ 추진계획의 충실성	○ 상위 정책과제와 연계 정도 ○ 분기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 전년도 평가 개선보완 필요사항 반영 등
	○ 정책이행 노력도	○ 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 정책소통·확산 노력도	○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 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도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 성과지표의 부합도	○ 대표성있는 지표 설정 및 목표치가 과거 실적,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통상적 기대수준을 상회·미달하는지 여부
	○ 목표(지표)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
정책효과 (35점)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종합적 정책효과
		○ 향후 기대효과
가감점	○ 가점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대내외기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 ○ 획기적인 성과로 사회적 주목, 부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 등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장(장·차관)의 현장 중심 성과점검 및 소통 노력 ○ 우리 부 소관 민생 과제를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민생 핵심과제**로 선정('24년 추가) ○ 우리 부 소관 **주요정책과제의 성과지표**를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 ○ 정책효과가 **주요정책평가 부문 실적보고서에 반영**된 경우 ○ 정책현장 점검(국조실, 자체평가위원)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완료한 과제 ○ **부서·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및 **우수협업과제**로 선정된 경우('24년 추가)
	○ 감점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 등 이행계획 지연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외부기관, 언론 및 내부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입력, 회의·교육 등 참여도 등

2.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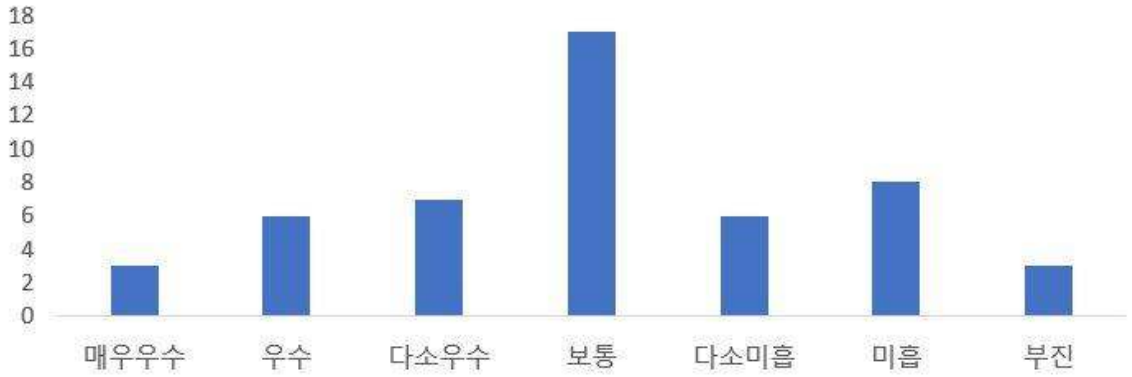
(1) 총 평

□ ‘24년도 총 45개 과(팀)의 5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3개(6%), 우수 6개(12%), 다소 우수 7개(14%), 보통 17개(34%), 다소 미흡 6개(12%), 미흡 8개(16%), 부진 3개(6%)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9개(18%)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11개(21%)임

<’24년도 자체평가 결과 등급별 과제 분포도>



□ 총 50개 관리과제의 9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0.4%로,

- 중국어선 불법 대응건수(건) 등 8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해양수산 ODA 사업 예산(억원) 등 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률>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4.4	94.8	90.4
총 성과지표 개수(개)	108	96	94
총 성과관리 과제수(개)	57	53	50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및 기상악화로 인한 연안여객선 운항 통제일 증가,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실증 실적 달성률(%)	100%	87.5%	87.5%	-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제도개선 사항이 내부 방침결정 정도에 해당하여 자체평가계획 평가기준에 따라 일부달성으로 목표치에 반영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100%	75%	75%	- 관계기관의 선행 행정조치가 연기됨에 따라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사업계획 수립용역 재착수를 연내 달성하지 못함
재해안전항만 사업 집행률(%)	94%	93.5%	99.5%	- 기상악화 등으로 현장 공사 진행에 장애요인 발생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해양사고 피해 저감실적(지수, 하향지표)	3.58	3.69	97.02%	- 올해 기상악화 등으로 어선사고 및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증가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해양수산 ODA 사업 예산(억원)	500억원	464.09억원	92.8%	-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기조로 인해 목표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ODA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율(%)	100%	87.5%	87.5%	-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협상전문가 대상 필수교육 중 일부를 미이수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건수(건)	8건	6.8건	85%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1건은 제정을 완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완료)과 관련 행정규칙(내부 방침 완료)은 법제처 등 심사일정 지연으로 제·개정을 완료하지 못해 자체평가계획 평가기준에 따라 일부달성으로 반영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천명)	12,440천명	11.949천명	96%	-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운항 통제일 증가로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추진율(%)	100% (155개국)	99.4% (154개국)	99.4%	- 통상환경 등 대외여건으로 인해 '24년 연말 기준 목표치인 수출국가 국가 155개국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2) 주요성과

□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Ⅲ-4-②)**

○ (**해양방사능 감시**) 해양방사능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 정점**을 127→**165개로 확대***

* (23년) 남해·서해남부·제주 등 5개권역(75개) → **(24년) 23년 + 동·서해 등 9개 권역(105개)**

- **긴급조사 대상**을 동·서해 포함 **전 해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8개 정점)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10개 정점) 조사 실시

○ (**데이터 확대**)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해양방사능분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양방사능 관련 자료**(해수욕장, 선박평형수 분석 결과 등) **확대** 제공,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결과 DB 등 **신규 구축**

-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모바일웹 기반 해양환경정보 지도 서비스** 구축(10.31)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모바일 환경에서 해양환경정보지도 이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

○ (**대규모 훈련 확대**)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 강화 훈련**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 대폭 향상

- 행안부, 해경청, 민간 방제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합동훈련(6회, 전년 대비 100%↑), 악천후 훈련(4회, 전년比 100%↑), 해양사고 상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출동 **단계별 선박 행동요령*** **마련**

* 엔담호 기술운영 매뉴얼 개정(6.7): 준설구역 축소(동서남해→남해권 限)로 국내 36시간 방제대응

수 산 **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Ⅳ-2-③)**

○ (**신규어장 확보**) 현장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조업 대책**을 **마련**하고, **조업금지 규제 해제***로 서해 5도에 꽃게 어장 등 **신규 어장**** 169㎢을 확보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E어장 신설, 연평도 주변어장 확장, '24.4.1) 시행
** 어장 신설(E어장, 144㎢) 및 확대(연평어장, 25㎢) → 꽃게 성어기(4~6, 9~11월)에 조업 가능

○ (**불법조업 감소**)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등 강력 대응으로 **중대위반 어선**** **단속건수**(19건, 11월 기준)가 '23년 동기(23건) 대비 **17% 감소**

* 봄철 산란기(5월)·가을철 성육기(10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경·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추진(5.1~31, 10.1~31)

** 무허가어선,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조업 등으로 불법조업 강도가 높은 위반어선

○ (**불법어구 퇴출**) 제주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어구(범장망) 25통(155톤)**을 **철거**하고, 조기·갈치 등 **어획물 약 99톤**을 **현장 방류**하여 **약 27억원*** 규모의 우리 수산자원 보호

* 어구제작 비용: 25통×0.6=15억원 / 어획물 방류 : 99톤×0.12=12억원(참조기 12천원/1kg당)

해운·해사·항만 **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Ⅰ-1-①)**

○ (**국가 운송능력**) 지속적인 선대확충 노력을 통해 **해상수송능력 1억톤(DWT)**을 초과('24.1), **국적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HMM의 선복량 확충(10만TEU 이상) 등에 힘입어 **134만TEU**까지 확대('24.11 기준)

* 해상수송능력: 국적선사가 운용(소유·임대) 중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

** 국적 '컨'선사 선복량 120만TEU에서 '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 목표 수립(4.15)

○ (**수출선복 확대**) 국적선사(HMM)와 협력해 미주·유럽 등 주요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총 18회**(8.1만TEU 규모)를 투입

* 美서안(7회), 美동안(4회), 유럽(5회), 중동(2회) **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구성(`23.12~)

- 단독으로 선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전용 선적 공간**을 **'23년 대비**(328회) **60% 증가**한 **총 527회**(4.5만TEU 규모) 배정

* (중소기업: 353회) 美서안(116회), 동안(94회), 유럽(81회), 지중해(56회), 동남아(4회)
(농수산: 174회) 美서안(38회), 동안(32회), 호주(27회), 유럽(27회), 베트남(26회), 대만(24회)

○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컨설팅·금융·보조** 등 지원패키지를 신청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지원**(5.23)

* (지원현황) ▲한전발전자회사의 혼소발전을 위한 암모니아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액화이산화탄소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메탄올 DF 케미컬운반선 건조 금융 지원

(3) 개선·보완 사항

□ 분야별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해 양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Ⅲ-4-③)**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상대적으로 저조한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연안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실시('25년 연중)
- 과제 목표와 연관성이 높고,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검토·반영('25.5)

수 산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Ⅱ-3-③)**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정책이행 노력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5.3)
- 성과지표 목표 조정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5.4)

해운·해사·항만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Ⅰ-2-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25.3)
- 정책효과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항만물류산업 및 항만운영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계류선박 관리방안 마련('25.3) 등

(4) 평가결과 종합

성과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평가등급명)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 수송망을 구축한다.		
	①[민생]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	매우우수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다소미흡
	②[민생]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보통
	③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	다소우수
	④[민생]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⑤[민생]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	보통
	⑥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부진
	⑦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미흡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①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	보통
	②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미흡
	③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	보통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①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다소우수
전략목표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①[민생]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	우수
	②[민생]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①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다소미흡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①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우수
	②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보통
	③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부진
전략목표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①[민생]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다소우수
	②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미흡
	③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우수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①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	보통

성과목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평가등급명)
	②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	보통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①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우수
	②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	보통
	③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미흡
	④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다소미흡
	⑤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	보통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다소미흡
	②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	매우우수
	③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부진
	④[민생]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다소우수
	⑤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	보통
전략목표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①[민생]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우수
	②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	보통
	③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우수
	④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다소미흡
	⑤[민생]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보통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①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	보통
	②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다소미흡
	③[민생]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강화	매우우수
	④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보통
	⑤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미흡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①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미흡
	②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미흡
	③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	다소우수
	④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보통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	다소우수
	②[민생]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보통
	③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	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해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입물류 활성화(Ⅰ-1-①)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종합전략 수립**) 공급망 불확실성, 해운분야 국제 친환경 규제 강화, 얼라이언스 재편 등에 대응해 기존 **3조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 본격 가동, 민간투자 촉진**, 친환경·ESG 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발표(4.15)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4.15, 비상경제장관회의)

○ (**중소선사 지원**) 중소선사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규모 2배 확대**(5년간 2,500→5,000억원) 및 **금융조건 개선**(4.15),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지원사업**(연 2%) **신설**

* 지원한도: (외항) 연 4천만원(대출액 20억원), (내항) 연 2천만원(대출액 10억원)

○ (**국적선사 지원**)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55% 많은 **2조 3,679억원**(34개 선사, 40척) 규모의 **정책금융(투자·보증) 집행**('24.10 기준)

* ('21) 1조 9,683억원 → ('22) 1조 4,341억원 → ('23) 1조 5,191억원 → ('24.10) 2조 3,679억원

- 해운·항만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을 위해 유럽·아시아 등 대상으로 **14.8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외화 조달('24.4~7, 3차례/ 해진공)

* 해진공 외화조달규모(억달러) : ('22) 0 → ('23) 7.1 → ('24) 14.8

○ (**국가 운송능력**) 지속적인 선대확충 노력을 통해 **해상수송능력 1억톤(DWT)**을 초과('24.1), **국적 컨테이너선사 선복량**은 HMM의 선복량 확충(10만TEU 이상) 등에 힘입어 **134만TEU**까지 확대('24.11 기준)

* 해상수송능력: 국적선사가 운용(소유·임대) 중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
** 국적 '컨'선사 선복량 120만TEU에서 '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 목표 수립(4.15)

○ (**ESG 전환 지원**) **ESG 지원 펀드**(2,500억원 규모)를 통해 **선사**(SK해운, KSS해운)가 발행한 **녹색채권 인수**(5.29,총 500억원)로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 **「해운산업 ESG 경영 가이드북」** 신규 발간·배포(8.20), 전문기관 컨설팅 제공을 통해 **5개 국적선사**의 **ESG 등급 획득 등을 지원**

○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컨설팅·금융·보조** 등 지원패키지를 신청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지원**(5.23)

* (지원현황) ▲한전발전자회사의 혼소발전을 위한 암모니아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액화이산화탄소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메탄올 DF 케미컬운반선 건조 금융 지원

- **3개** 국적선사의 **15척** 친환경선박(총선가 2.4조원) 도입을 위해 **총 226억원 지원**('23년 대비 지원규모 70% 증가)

* ('23) 130억원 보조(3개 선사, 12척 지원) → ('24) 226억원 보조(3개 선사, 15척 지원)

○ (**민간자본 유입 촉진**) 해운분야 투자 위험성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보증 강화 등을 추진

- **국외 항만개발, 해운물류 필수자산 확보** 등을 위해 **공공·민간** 합동 **PIS**(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9.11, 국토부 등 협업)

* 1.1조원(공공 4,400억원 + 민간 6,600억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물류시설 등 투자·보증 지원
** 해진공이 국내외 항만 개발, 선박연료공급업 등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1.25 시행)

○ (**수출선복 확대**) 국적선사(HMM)와 협력해 미주·유럽 등 주요 수출 항로에 **임시선박**을 **총 18회**(8.1만TEU 규모)를 투입

* 美서안(7회), 美동안(4회), 유럽(5회), 중동(2회)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구성(`23.12~)

- 단독으로 선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전용 선적 공간**을 **'23년 대비**(328회) **60% 증가**한 **총 527회**(4.5만TEU 규모) 배정

* (중소기업: 353회) 美서안(116회), 동안(94회), 유럽(81회), 지중해(56회), 동남아(4회)
(농수산: 174회) 美서안(38회), 동안(32회), 호주(27회), 유럽(27회), 베트남(26회), 대만(24회)

○ (**자동차 수출 지원**) 자동차 수출시 운반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선주사업으로 **자동차운반선(약 1만대×4척) 확보 지원**(~'27, 신조 중)

- 컨테이너에 자동차(3대)를 적재·고정시켜 **컨테이너선**으로 이송하는 **대체방법**을 활용하여 **57.6만건 수출 성공**('24.9 기준)

○ (**우수선화주 인증제 확대**) 정기 '컨'선 외에 **주요 전략물자** 및 **부정기 화물선**도 인증대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상생 화주기업 선정**(9.24)

* 국내 LNG 수입량의 80% 이상(34백만톤)을 차지하는 가스공사가 부정기 우수 화주기업으로 선정되어 국적선사와의 상생 확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최종 정책수요자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 해상 물류망 확보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운의 양적 성장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효과가 우수함. 또한 안정적인 양적 성장, 친환경 전환 등 질적 성장 안정화와 같은 향후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우수함

2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Ⅰ-2-①)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술개발·실증)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Lv3)' 사업*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하여 **국제항로 실증**(9.23~, 1년간)

* 기간: '20~'25 / 예산: 1,603억원(해수부 587억원, 산업부 610억원 등)/ 개발기술 : (해수부) 최적항로 자율운항시스템, 사이버보안 등/ (산업부) 핵심기관 모니터링·고장예측기술 등

** R&D 성과물(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할 실증 선박은 민간 선사(팬오션)에서 제공

<자율운항선박 개념>

○ (개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선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선원 개입을 최소화해 운항하는 선박

○ (IMO 분류) (Lv1) 의사결정지원 → (Lv2) 선원승선원격제어 → (Lv3) 선원미승선원격제어 → (Lv4) 완전자율

○ (기술고도화) 1단계 R&D 이후, **완전자율운항선박(Lv4)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후속 **사업기획 본격 착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4.5~, 5회*)

*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의(3),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1), 해운선사 간담회(1)

○ (연계기술개발)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진공 흡착판을 활용한 자동 정박 시스템 등 제반 기술도 개발 중,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11.13,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 '21~'25년/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연계기술개발 / 289억원

○ (제도마련)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한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24.12)으로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개선모습>

법령 시행 전		법령 시행 후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근거 미비	→	·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관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근거 부재	→	·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해상물류체계** 구축 사업, **국제협력** 사업 및 **국제표준 대응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실증 시 기존 선박 관련 규제 준수	→	· 운항해역 지정, 안전성평가, 운항 승인 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특화 기술 실증 지원** 가능

○ (**성과 확산**)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 **명명식**(3.8, 차관), **실증 출항식**(9.23),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기술·제도를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주도**

* '아시아·태평양 자율운항국제콘퍼런스(2.28, 방콕)', '함부르크 조선해양박람회(9.3)' 등

○ (**국제협력**) **'韓·IMO 공동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개최**(5.14, 영국) 및 성과 발표* 등 국제협약(MASS code)** 개발 논의 선도

* 우리나라 기술의 해상시험 결과, 관련 제도·정책 현황 등

** 비강제 코드('26.5), 강제코드 채택('30.7) 및 발효('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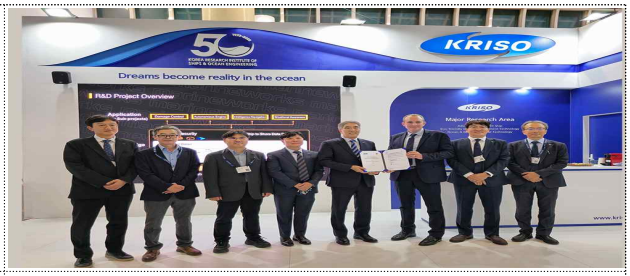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로 아시아·태평양 미래 선박 상용화 주도한다

해수부, 유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주관 '자율운항 국제 발표·토론회(콘퍼런스)'에서 기술개발 현황과 제도 등 소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자율운항 국제 콘퍼런스(Autonomous Shipping in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가해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실증 및 규제혁신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핵심 과제로서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2.28, 물류신문>



<함부르크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계획의 충실성·구체성 보완('25.4.)하고 홍보 강화('25.8.)를 통해 성과 확산 등 정책효과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자율운항선박건조 및 실증운항 시작 등 성과의 종합적 정책효과는 보통 정도이며, 기술개발 지속 및 제도시행에 따라 향후 기대효과 우수함

3	물류거점 항만개발과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Ⅰ-2-②)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산항**)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의 연계개발을 위한 **송도개발 기초조사 착수(6.26)**, 해경의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한 **소형선 부두 착공(11.27)**

○ (**광양항**) **부두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낙포부두 개축사업**을 **착공**(4.17)하고,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항로 구축사업***도 적기 추진

* 묘도수도 직선화(1,422억원): **('24.8.) 기초조사 완료** → ('25) 발주 및 착공 → ('30) 완공
특정해역 암초제거(1,124억원): ('20.11.) 착공 → **('24.8.) 완공**

○ (**동해신항**) **기타광석·잡화부두**(2선석) **착공**(12월), **석탄부두**(1선석) **실시설계** 완료(12월) 등을 통해 **체선율**('23. 17.3% ⇢ '30. 10.6%) **개선**

*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 12시간 이상 항만 밖에서 대기하는 비율
(`20년 전국 평균 3.1%)

○ (**새만금신항**) **박지준설(1-2단계) 착공**(7.19.),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11월말) 등 **'26년 부두 개장**(2선석)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15, B/C 0.98, AHP 0.594)로 **물류비 절감** 및 인천 송도 **정주여건 개선**

* (사업내용) 연장 5.3km / (총사업비) 2,962억원 / (사업기간) '25~'29년

○ (**평택당진항**) **대중국 물류처리 및 여객운송 여건 개선**을 위한 **국제여객부두 준공(3.15)**, 안전한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한 **유지준설 착공(5.31)**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국내 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을 도입·실증하기 위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4선석) 구축 **본격 추진**

* (기간/총사업비) `22~`29 / 7,800억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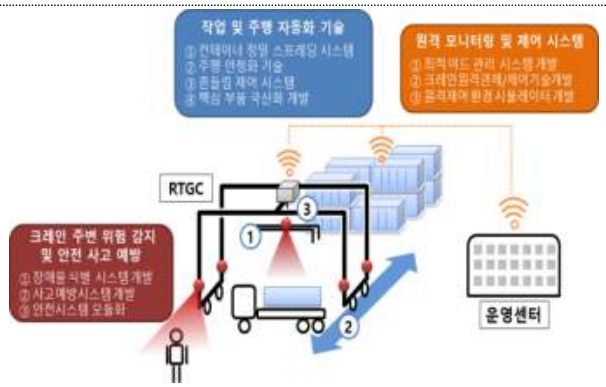
○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전략('23.1.)'에 따라 '30년까지 스마트항만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R&D***, **연구과제**** 적극 추진

* (R&D) 자율협력주행기반 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22~'24),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기술개발('22~'25)

** (연구용역) 부산항 스마트화 추진방안('24~'25,), 자동이송장비 적용 확대 방안('23~25),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24~'25), 항만분야 BIM 적용지침('22~'24)



<자율협력주행 화물운송시스템(R&D)>



<타이어형 자동화 항만크레인(R&D)>

○ (**스마트 메가포트**) 확보된 **국내 기술**을 토대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 착공**(남방파제 등 4개 사업)

- 준설, 임항도로 등 **선박·차량이동 지원**을 위한 **설계 추진**

○ (**산업육성기반 구축**) 스마트항만 장비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3)**

* '25.1월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추진(9.20, 하위법령 제정계획 수립)

- 항만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대출·투자·보증) 지원**('24, 3,500억)

○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도입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법령 제개정**으로 **민간 투자여건 개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24.1.24), 하위법령 개정('24.7.24.)

○ (**기본계획**) 수출입 물동량 처리와 함께 스마트·친환경, 관광·친수 기능 강화 등 **권역별 특화항만 구축**을 위한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산항 메가포트 구축과 광양항, 인천항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화 항만개발 적기 추진으로 안정적 수출입물류 기반 마련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중 일부를 일정보다 늦게 완수하거나 미완수하여 정책이행 노력도 보통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스마트항만과 관련산업 기반 마련 등과 관련해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항만 실현(Ⅰ-2-③)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글로벌 거점항만**) 미·중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해운물류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여 **항만 개발과 운영 전략**을 포괄*하는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2.11) **통합 수립**

- (**개발**) 기존 운영중인 부산항 신·북항과 진해신항 연계 **운영**을 **고려**한 진해신항 및 항만 연관 **인프라 구축 개발 계획 마련**

* 세계 최대 항만시설 규모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자급인프라 개발, 산업기술 개발 등

- (**운영**) 진해신항의 상·하부 **개발시기·규모 등**을 **고려**한 진해신항 운영사 선정계획을 포함하여 **부산항 운영 효율화 전략 마련**

* 진해신항 Mega 운영체계, 신항 통합 유도방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항만기본계획**)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래 항만시설 수요, 항만시설 개발 등 **중장기 항만개발 전략**을 위한 기본계획(수정) 수립 추진

- (**소통**)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발굴·검토하고**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 실시

* 지방청, 지자체, 항만공사 등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 개최(10.7~10.11), 항만 내에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해경, 해군, 어업관리단 대상 개별 설명회(3.14, 7.18) 개최

- (**특화항만 개발**) 각 항만의 **주요 취급 화물**(컨테이너, 석유화학, 철재 등), **배후 산업여건**, 인근 지역의 신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항만별 특화 개발방안 마련**

-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맞춰 장비현대화 및 항만 자동화 등 **여건 변화를 종합 반영하기 위해** 전국 항만의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실적 등을 분석하여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 항만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연구('23.12~'25.6)

○ (**탄소중립 항만**) 탄소중립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항만 내 **장비, 선박** 등에 대한 **탄소저감 방안 마련**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한 **안정적인 수입·저장 시설 도입 추진****

* 2050 탄소중립('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50년 청정수소 자급율 6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LNG+수소, 석탄+암모니아 등 혼소발전 확대) 등

** '탄소중립 항만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22.5~'24.9)을 통해 전국 항만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탄소중립 항만 구축 전략 마련

- (**제도 개선**) 항만 내 탄소중립 시설(수소, 암모니아 등) 확대 등을 위한 **항만법 개정안***, 해상풍력 지원 등 **기존 부두활용을 위한 절차안** 등 마련

* '22대 국회 항만법 개정안 재발의('24.10)

○ (**신규 연안항 기본계획**) 격렬비열도항(충남 태안)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 관광특화 연안항인 진촌항(경남 통영)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시설보강 및 확충계획을 수립

○ (**규제개선**)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열린 방식(negative)으로 규정**('25년 1분기 개정 예정중)하여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설치 가능 시설 확대**

○ (**항만 SOC 투자**) **부산항 진해신항** 및 **광양항 특화전략 사업** 등 **신규·주요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25년 예산은 **1조 6,525억원**으로 전년(1조 6,009억원) 대비 **3.2% 증액 확보**

- 이에 따라, **항만 SOC 적기 확충** 및 **안전 강화**, **신산업(스마트·친환경化) 육성** 등 항만의 **신성장 여건 마련** 기대

○ (**대외협력 강화**) **제24회 동북아(한·중·일)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지엄**(10.29~31 참석, 중국 친황다오) 참석·발제·토론을 통한 상호 항만정책 교환, 동북아 항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탄소중립 항만구축 방안, 특화항만 개발 등을 반영해 항만기본계획(수정) 수립 완료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모두 일정대로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회의, 간담회, 현장점검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배포, 해수부 블로그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이상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탄소중립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항만기본계획 수정,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5	항만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Ⅰ-2-④)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완전자동화 부두 개장**) 하역부터 반출까지 **全과정**이 **원격·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국내기술** 기반의 **완전자동화 부두 성공적** 개장('24.4), 오염물질 배출 없는 **100% 친환경 동력** 운영으로 **항만 환경 개선**

* 7부두는 개장('24.4) 이후 약 6개월간 44만 TEU 물동량 처리(6부두 개장 당시와 2배 차이)

○ (**글로벌 메가포트**) 공급망 리스크, 해운동맹 재편에 대응하여 '32년까지 **부산항 하역능력 48%**(1,018만TEU) **증대, 세계 최대 수준* "스마트 메가포트 부산항"**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 (**선석 수**) (現) 40 → (改) 66개(1위), (**선석 길이**) (現) 18.8km → (改) 25.5km(2위)
**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수립('24.12.11,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상정)

○ (**항만물류 네트워크**) 해외 **신흥시장 물류거점** 확보, 축구장 500개 규모 **배후단지 신규 공급, 육해공 연계 복합물류 협력체계** 구축

- 美, 동남아 등 글로벌 **신흥 공급망 거점** 공공 물류센터 확대(現 5개 → 16개), 배후단지 내 **글로벌 유망기업 유치, Sea&Air 복합물류** 활성화

○ (**항만산업 생태계**) **항만장비산업 지원체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구축,** 항만 **건설·관리 신기술 도입**

- **국산 하역장비** 진해신항 **도입**, 친환경 선박 **벙커링 산업 육성**, 항만 **설계기준 강화** 및 **디지털 트윈 도입** 등 항만관리 체계 고도화

○ (**항만이전**)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컨' 터미널 운영사 **연쇄 이전 프로젝트,** 개항 이래 최초 '**부산항 기능 재배치**' **성공**

- 이전기간 동안 **듀얼포트**(자성대, 신감만) 동시 운영으로 **부산항 물류기능의 공백**을 **예방**하여, 2~3분기 물동량 처리실적은 전년 比 5% 증가

○ (**100% 전기동력**)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기술 중심의 100% 전동 하역장비*를 구축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 직접배출 Zero 항만**으로 운영

* 컨테이너 크레인 9기, 야드크레인 34기, 무인이송장비 60기 전량 전기 동력 운영

○ (**해외 물류거점 확대**) 美 **LA**에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신규 개장**(9.5, 8,514㎡ 규모)하고, **인니** 프로볼링고 물류센터 **확장 이전**(6.24, 10,120㎡ 규모)

* ('23) 4개소(인니 2, 네덜란드 1, 스페인 1) → ('24) 5개소(美 LA 추가) + 인니 확장 이전
**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투자로 확보 → 우리 기업에 10~15% 저렴한 이용료 제공, 물량 우선유치

- 해외 물류시설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26개사)에 **연간 8억원 물류비 절감**, 안전재고 확보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업 해외 진출지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물류기업 10개사 대상 **타당성 조사·컨설팅**을 지원하여 **6개사, 547억원 규모 진출 성공**

* 미국(2), 베트남(2), 인도(1), 대만(1)/ 물류센터 5개소 확보 및 해외법인 1개사 설립

○ (**해양산업 클러스터**) 광양항 클러스터 임대료 감면, 1:1 마케팅 등 추진, **최초**로 **민간기업**(친환경 항만R&D 수행) **2개사 입주, 233억 투자유치**

* (기존) **해수부 R&D 수행기관 2개 입주**(원인: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낮은 인지도)
⇨ (개선) **민간기업 2개사 유치**(총 233억원 규모)

- (**규제 완화**) **해양신사업 육성 및 산업 융복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클러스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핵심산업)을 **해양산업연관기업**까지 확대

○ (**배후단지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및 전대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및 **공급 부지 대형화**** 추진으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2개 필지(7.4만㎡, 12.6만㎡)에 **1,73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신규 **유치**

* 「항만법」 시행령 및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우선 입주 대상 확대, 편의시설 입주 허용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평균 임대면적(3.27만m2)보다 2배 이상 확대된 필지를 입주기업에 공급(7.4만m2, 12.6만m2)

○ (**특화구역**) **세관**과 **연계**한 **원스톱 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1개 필지(4.2만㎡)에 **1,230억원 신규 투자** 유치,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내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특화구역**'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해외 물류거점 확대,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이상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부산 신항 개장, 해외물류시설 확대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6	민간참여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및 해외협력 기반 마련(Ⅰ-2-⑤)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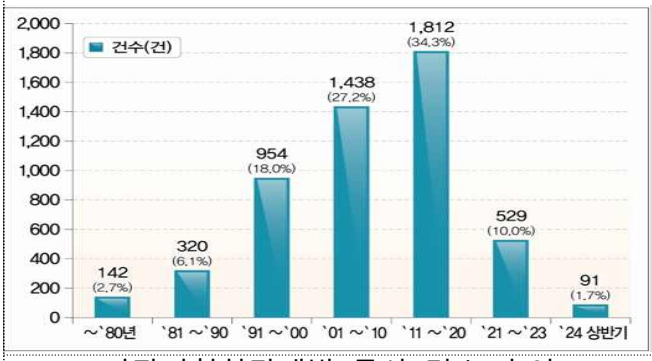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만개발 민간투자)** 고금리 등 불안한 외부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2조원(150여건)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로 항만개발 수요에 대응

* ('22) 2조5,420억원(171건) → ('23년) 2조 1645억원(156건) → ('24) 2조 3천억(174건) 예상

****** 비관리청인 민간이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인 해수부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



< 비관리청항만개발 공사 건수 추이 >



< 비관리청항만개발 규모 추이 >

○ **(배후단지 민간투자 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적기 공급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는 유지하되, '허가' 기반의 「항만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

* 민간사업자가 취득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평가 기준·방법 개선, 분양가액을 총사업비의 115% 이내로 제한 등

○ **(인천신항)**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 협상('24.4.~9.)을 통해 실시협약(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 선정(11.27), 총사업비 2,119억원, 항만배후단지 조성 94.2만㎡(민간취득 34.2만㎡, 공공용지 60만㎡), 인천 신항의 부가가치 향상 기대

○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항 소재 기존 양곡부두를 부산항 신항으로 적기 이전 필요, 실시협약체결(4.30)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사 착공(12.30)

○ (**해외항만개발**) 국내기업 수주 가능성, 후속 사업화 방안 등 고려하여 사업 발굴하여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 등 4개 사업 추진 중(가나,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시장 개척 및 진출 사업 다변화 기대

* 협력국의 항만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국내 항만 설계·건설·운영·물류기업 해외협력국 항만개발 지원

- (**가나**) 가나 정부의 **요청**('23.11)에 따라 가나 남측 4개 지역에 대한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와 **KETA항 사업화 방안 검토 지원**

* 가나 남측 Greater Accra, Central Region, Volta Region, Western Region

** 가나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KETA항 투자 요청이 있었으나, 관심 기업이 없어 KETA항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 주기로 협의

- (**탄자니아**) 탄자니아(잔지바르) **정부**의 **요청**('24.1)에 따라 잔지바르 웅구자섬 및 펨바섬 2개 지역에 대한 **어항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 웅구자 섬의 추이니, 펨바섬의 숨바음지니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24.3)에 따라 시르다라아, 지자흐 2개 지역에 대한 **내륙터미널 타당성 조사** 지원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신규 내륙터미널 개발로 타슈켄트(Tashikent)에 집중된 물류를 분산하고, 유라시아 운송 네트워크 핵심국의 입지를 공고화하려고 함

- (**우크라이나**) (한)해수부-(우)인프라부 간 **항만재건 MOU***('23.11) 등에 따라 **'우' 항만재건**을 위한 주요 7개 항만**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한-우 정상회담('23.7), 경제사절단 파견('23.9) 이후 '우' 항만재건과 개발 분야 협력 강화, 상호이익 증진 도모 목적의 MOU 체결

** 이즈마일, 미콜라이우, 오데사, 피브데니, 레니, 우스트두나이스크, 초르노모스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만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치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거의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워크숍,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등 종합적 정책효과 우수,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로 향후 기대효과 우수

7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Ⅰ-2-⑥)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안전 기준 보완 등을 위한 **STS 벙커링 동시작업 표준절차** 마련('24.12, 2건)

* ① 메탄올 STS 벙커링 동시작업 표준절차(안), ② 벌크선 LNG STS 벙커링 동시작업 표준절차(안)('24.12)

○ (**인프라 펀드**) 민간의 연료별 저장시설 구축과 벙커링 전용선 신조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조성*('24.12)

* (기대 효과) LNG 벙커링선 3척, 암모니아 벙커링선 1척을 신조 지원하고 LNG, 메탄올, 암모니아 항만 저장시설 지분투자를 통해 '30년 필수 벙커링 수요 대응

○ (**국제협력**) **BPA, UPA, 함부르크항만공사** 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친환경 연료공급 **글로벌 공조** 추진(9.25)

* 주요내용: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장려 및 벙커링 기술 표준화 협력 등

○ (**벙커링 실증·상용화**) '23년부터 PTS·STS 등 다수 실증을 거쳐, '24년 **LNG·메탄올**에 대해 선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STS***(선박 대 선박)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에 **성공**, 상용화된 벙커링 개시

* STS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은 시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선사들이 가장 선호
** (주요 실증) ① **세계 최초** 초대형 '**컨'선 그린메탄올 STS 벙커링**('24.2, 울산항), ② **국내 최초 LNG '컨'선** STS벙커링·하역 **동시작업**('24.8, 부산항), ③ **국내 최초 메탄올 '컨'선** STS벙커링·하역 **동시작업**('24.10, 부산항 / 싱가포르('24.5) 이어 **세계 2번째**)
***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적 확대** : (`22) 0건 → (`23) 3건 → **(`24) 25건**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 외항선에 공급되는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연 30~50만톤 규모 추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량공급제 최초 도입**

- 4대 정유사 별, 운송을 위탁한 급유선 각 1척에 **질량유량계**를 **설치·운영**해 도유가 없는 상황에서의 **운송료 원가 산출**을 **추진****

* 질량유량계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3.10 /해수부(총괄), 석유관리원(사업운영), GS칼텍스㈜(급유선 지원),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 '25년 질량유량계 보급(4척) 시범사업 신규예산 11억원 확보

○ (**저속운항 촉진**) 저속운항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입항 시→연 1회 신청)**하고 입항 시 저속운항 여부 **검증결과**를 **자동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9.2~)해 **저속운항 참여율 제고** 및 항만 대기질 개선 효과 향상

○ (**고위험선박 조치**) **부산항 고위험선박**(7척)에 대해 이동명령('24.9) 旣 완료, 자진폐선* 유도 중이며, 미이행 시 강제 집행 추진

* 7척 중 2척 자진이선 확정, 1척 자진폐선 확정, 4척 자진폐선 협의 중

○ (**기본계획 수립**)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시** 해운·항만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2차 '해운·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4.12)

* 해운항만 환경에 변화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운영규모 확대, 항만운영협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가필수도선사 역량 강화 등 추진계획 반영

○ (**도선안전 강화**) **숙련된 도선사 활용**을 위한 **정년연장 일원화**(만 68세) 및 **도선사고 예방**교육 등을 위한 **최첨단 도선시뮬레이터** 보급

○ (**포트미스 보안강화**) 관리정보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백업**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 수립**(25.12)

* 국정원 주관 '24년 평가결과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우수**, (보호대책 이행점검) **우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25.3)하고,

- 정책효과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항만물류산업 및 항만운영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계류선박 관리방안 마련('25.3) 및 '25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책효과가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개선·보완('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 중 일부를 일정대로 완수하지 못해 정책이행 노력도는 보통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실증 실적 달성률 지표는 제도개선이 내부 방침결정 정도에 해당하여 일부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박연료 체계 변화 등 성과와 발전이 기대되나 제도개선 진행 중임에 따라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는 우수정도

8	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Ⅰ-2-⑦)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만하역사(356개)의 자체안전관리 계획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총 1,601건**)하고, **사업장의 안전위해요소 발굴 및 시정명령*** 등 조치(**총 3,511건 중 3,283건 개선완료**, '24.1~11월 기준)

* (예시) 현문사다리 및 안전망 설치, 선박하역 시 관리감독자 2인 이상 배치, 보호구 착용 준수 등

○ (**안전 인프라 조성**) 중장비·24시간 작업 특성으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재해 발생우려가 높은*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150개)설치 지원**

* 사고재해율(%): (전산업 평균) 0.55 vs (항만하역) 0.81, ('23년 고용노동부 통계)

- 매년 50개 이상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보조사업시행('22) 이후 항만관련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민간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

* ('21) 5,119백만원 → ('24. 추정치) 16,345 백만원

- 「항만하역장 재해예방시설 우수사례집」 배포(5.8)를 통해 안전시설의 상향평준화 유도 및 안전투자 정보 민간에 제공

○ (**상생·협력**) 항만안전을 위한 노·사 협력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 자리로서 항만노사결의대회(8.1, 차관) 개최 및 '제2회항만안전대상(11.26) 수여로 항만하역업계 및 항만이용자(선·화주) 협력 증진 도모

○ (**보안사고 저감**) '항만보안 관리강화 방안'('22.8)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항만시설 보안사고*(외국인선원 밀입국 등) 감소

* ('18) 3건 → ('19) 1건 → ('20) 7건 → ('21) 9건 → ('22) 11건 → ('23) 5건 → ('24) 6건

○ (**안티드론**) 항만에 미인가 드론 등 침입시 전파차단장치 등을 통해 차단·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 부산·인천·울산항 실시설계 완료(10.25), 무허가 드론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드론 비행승인 검토 등 「국제선박항만보안법」 하위법령 개정(7.23)

○ (**사이버보안**) 하역장비 등의 **스마트화**로 인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6월), 관계기관 **합동점검**(7~8월) 실시

* (주요내용) 장비 도입 시 고려사항, 구축·운영 시 고려사항, 위협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등

- 4개 항만(부산·인천·광양·평택당진)의 **중국산 항만크레인** 대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보위협요인 진단·점검**(7.23~8.1)한 결과, **정보유출 사례**는 **없음**

○ (**장비기준 강화**) CCTV, 감지기 등 '**침입탐지장비 실증테스트**'를 통해 기존 **설치기준**을 **변경**('24.6)하여 야간 · 안개에 취약한 CCTV장비 보완

* (既) 지능형CCTV 설치 시 **감지기 면제** → (改) **감지기 설치 의무화** 및 **유예기간 부여**
항만공사 항만시설(**5개**, ~'25), 지방청 및 민간운영사 항만시설(**76개**, ~'26) **이행예정**

○ (**보안인력 처우개선**) 우리부 소속 **청원경찰 채용**(35명) 및 항만공사 소속 **경비인력 근무형태 개선**(교대제 개편)을 위한 **노사합의 지원***

* 3자(항만공사 · 자회사 · 노조) 협의체 구성 및 진행상황 협의(8차례, '24년) → 인천항만공사 4조2교대 전환('24.7) 및 부산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환 추진 중

○ (**검색장비 인증제**) 실효성 있는 항만 보안검색장비 인증제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24.12~'25.7,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선급) 추진

* (현행) 항만시설 **보안 검색** 시 **인증 검색장비 사용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제) **인증절차 복잡, 철도 · 항공** 보안검색장비 인증제와 **중복**으로 **인증체계 개선** 필요

○ (**지원 · 교육**) **항만보안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항만보안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보안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합동보안세미나**'* 개최(11.29)

*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국정원, 민간운영사,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 보안 담당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정책이행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정책효과 개선방안을 마련('25.2)하고,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현장 목소리 청취('25.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정책방향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완료시 효과가 기대되어 정책효과 보통 및 향후 효과 우수. 향후 민간참여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9	디지털 해상교통정보(바다내비) 제공 및 신산업 육성(Ⅰ-3-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콘퍼런스**)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9.10~11)해 **국내** 해양디지털 관련 **산·학·연 관계자***가 **국제 동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 참가자들에게 **홍보***

* IMO, IALA, 덴마크 해사청 등 국제기구·정부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관계자 17개국 210여명 참석

** 국내기업 홍보부스 운영(MRC, 에이브노틱스, 맵시, 엔에스원소프트 4개사)

○ (**수출상담회**) 해양디지털·기자재 관련 국내외 기업* 간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수출상담 100건**, 기술협력 **MOU 8건 체결**(460만불)

* △(해외바이어) 인도네시아 선주협회, Nihon Shipyard, BC Ferries 등 9개국 20개사, △(국내기업) 랩오투원, 빈센, 바다중공업 등 해양디지털 및 조선기자재 50개사 참여



< 제8회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9.10.~11. 부산) >



< 국내·외기업 해양디지털 수출상담회(9.10. 부산) >



< 해양디지털 수출·기술협력 MOU 체결식(9.10. 부산) >

○ (**산업육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세부 시행계획**('24.2.)' 수립 및 이행*을 통하여 산업계에 자금·인프라·홍보 등 지원

* (완료) 신산업 펀드 지원(2개사), 해양수산 인프라 지원(52건),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연구거점 마련(211개), 해양산업 클러스터 참여(20개사) 등

○ (**바다내비 서비스 확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소형선박용 **앱 배포** 등을 통해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 지속 **확대***

* (단말기) ('23) 7,181척 → ('24) 8,982척 / (앱 다운로드) ('23) 79,693건 → ('24) 99,720건

- 바다내비 **단말기*** 및 **앱****을 안전 항해, 수상레저활동 등에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홍보**

* (단말기 '최우수') 주변선박 위치정보, 어선 자동 입·출항 신고, 어구 위치 저장 기능을 어선의 안전 항해 및 효율적 조업 활동 등에 활용한 사례

** (앱 '최우수') 바다내비 앱의 수상레저활동 신고, 낚시금지구역 확인 기능을 활용한 사례 및 안전에 도움이 되는 주변 선박 정보와 구조요청 기능을 설명

○ (**해상무선통신망 품질제고**) **기지국 신·증설**을 통해 지형적 요인으로 통신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섬지역 어항·수로**에 대한 **통신품질 제고**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유지보수 사업자**(KT)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및 **시범운영**('24)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통신 서비스 품질(무형)을 지표화(유형)하여 측정·평가하는 방법

○ (**해양교통안전 플랫폼**) 바다날씨, 건강관리, 안전 수칙 등 **안전정보**를 바다(연안~100km)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서비스** 시행*

* 365일 10시, 17시에 바다날씨 등 정기 송출 / 해양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수시 송출

○ (**해상원격 의료지원**) **해상무선통신망**(LTE-M) 활용 **연안선박 선원**에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지원**

* 전담 간호사(2→7명) 증원으로 내항선 전용 24시간 응급처치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설명회**) **연안 여객선사** 등 이용자 대상 서비스 사용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운·해사 분야 디지털 전환에 맞춰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모두 일정대로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모두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바다내비 저변확대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10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Ⅰ-3-②)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 GPS 위치오차 5cm 이하 **보정정보 생성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처리국 구축**('24.11, 측위정보원)을 통해 **방송**(MBC) · **이동통신3사**(SKT·KT·LGU+)를 통해 **전국망 서비스**를 **개시**('24.12),

* 국제 해상무선통신위원회(RTCM) 기술표준으로 등재('24.1), 선박의 자동접안 등 관련 IMO 위성항법시스템 요구성능 기준(위치정확도 10cm 미만) 달성

-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를 자율운항시험선·드론에 적용하여 실제 해역 운항 등 기술개발 성과 검증('24.6/울산) 등

○ (**지상파항법시스템**) GPS 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지상파항법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대산항 권역까지 20m급 위치확보 가능토록 인프라 확충

* 위치정확도(오차 20m→10m) 및 시각 정밀도(시각오차 천만분의1→일억분1초) 향상 등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확보된 지상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 위성기반 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22~'32)

- 예비설계 검토회의(11.18), 진도점검(9.27, 10.4)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연례회의('24.10) 및 **한-일 PNT 실무회의**('24.10)를 통해 항법분야 협력 추진

○ (**국제협력**)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연례회의('24.10) 및 **한-일 PNT 실무회의**('24.10)를 통해 항법분야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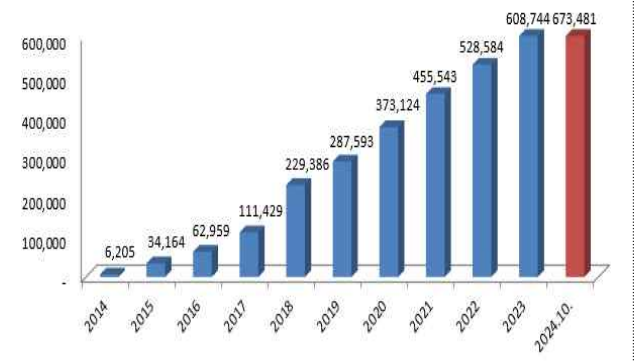
○ (**스마트항로표지**) 고효율의 경량 전용배터리 및 항로표지 기반 정보활용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항로표지의 기능 다양화** 및 **안전강화**

* 실시간 항로표지 정보, 해상안개 관측정보, 항해안전 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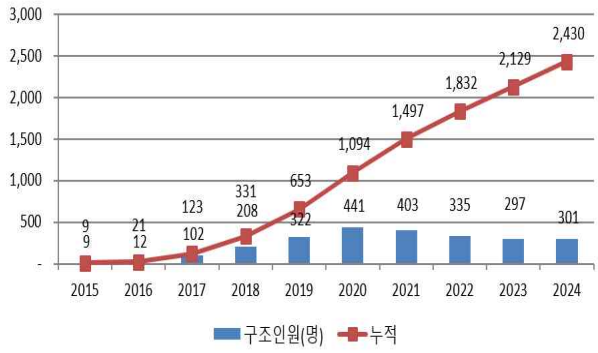
- **항로표지 스마트화**로 개발한 국제표준(S-200)을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표준지침**에 **반영**하여 국제표준 **선도**

○ **(해로드 앱 기능강화) 해로드 앱**에 **암초 접근알림 기능**을 **추가**해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의 **충돌사고 예방 등** 선박 안전강화

- 해로드 앱의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최근 5년간 1,777명**('24.10. 기준)을 **구조**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함



<해로드 앱 년도별 이용자 추이(누계)>



<해로드 앱을 통한 해양사고 구조 현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이행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성과지표부합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를 개선·보완('25.3.)하고,

- 과제이행의 충실성과 노력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정책효과 개선 추진('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지상파항법시스템, 스마트항로표지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는 보통이며, 향후 기대효과는 우수. 공공영역에서의 정책효과가 우수한 데 비해 일반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보임.

11	그린 쉬핑(Green Shipping) 생태계 기반 확충(Ⅰ-3-③)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을 위해 민간·공공선 49척 건조·개조 전환 지원

- (**내항선**) 영세한 **연안선사**의 **친환경 전환 유인**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 한도 상향*** 등 노력으로 내항선 **총 7척**(143억원) **건조 지원**

* ('24) 국내 친환경 핵심기술(LNG 화물창)을 적용하는 선사에 보조금 상향 지원(1척)
** **('21) 3척/40억원 → ('22) 5척/60억원 → ('23) 6척/143억원 → ('24) 7척/143억원**

- (**외항선**)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선가의 일부(최대 10%)에 대해 보조금 지원하여 **15척**(226억원) **건조 지원**

- (**공공선**)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7척 건조**를 **착수**하고,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기존 선박 20척**도 **친환경 개조**(DPF 설치) **추진**

○ (**친환경 전환 촉진**) 해운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인증선박 취득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4.1~)

* 동법 제64조 제4항 신설 / 인증 1등급 2%p, 2등급 1.5%, 3등급 1% 감면
** (적용예) 취득가 100억원, 1등급 선박 취득 시 2.02% → 2%p 감면 → 0.02% 부과, 2억원↓

○ (**친환경 인증제도 확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선박→선박+기자재), 신청자격**(화물·여객운송사업 등 특정사업자 → 특정사업자 + 선박소유자 + 조선소),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과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지원

* 「친환경선박법」 개정안 마련('24.9.20) 및 입법예고('24.10.10~11.20),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24.6.4~6.25)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24.9) 및 입법예고('24.11~12)
*** 해상여객운송사업,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 → 선박연료공급업자 등 추가

○ (**신기술 상용화**) 전기추진선박 충전에 관련된 이동식전원* 기술, 화재안전확보 기술 등 신기술을 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추진선박기준」 개정 추진('24.10, 행정예고)

* 전기추진선박에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배터리팩 또는 배터리시스템을 컨테이너 등과 같은 수납설비에 수납하거나 차량 등에 탑재하여 선박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전원

○ (**불합리한 기준 개선**) 도면, 조선소가 동일한 시리즈 선박은 위험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녹색해운항로**)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친환경을 위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방안*' 마련·발표('24.7.2, 국무회의),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 등을 위한 4대 전략* 마련

*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방안 4대 전략) ①한-미 녹색해운항로 협력, ②녹색해운항로 확대·연계, ③선박연료 공급인프라 조성, ④개도국 등 교육 및 지원사업 등

- 녹색해운항로 확대·연계를 위해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이행계획 등 공동 발표(11.11, 제29차 COP)

○ (**민간 소통**) 선사 대상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지원정책 설명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해운 전환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 이행방안 등을 논의

* 해양환경 정책설명회(3.28), IMO 중기조치 대응 설명 회(9.6), 중소선사 간담회(11.29)

○ (**국제협력**) 국제해운 탈탄소화 논의 주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해사주간 계기 해운 탈탄소 포럼 개최(9.11)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선박 관련 정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중 일부를 일정보다 늦게 완수하거나 미완수하여 정책이행 노력도 미흡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설명회,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하며,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12	Ⅰ-4-① 양질의 국적선원 공급 및 두터운 선원복지 제공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단체협약 체결**) 선원일자리 혁신방안('23.7), 정책 소통* 등을 토대로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역대 최초로 체결**('24.8.28)해, 선원노련(勞)-해운협회(使) 간 **한국인선원**의 **근로·복지 개선**을 합의

* 선원노련 의장단 간담회(1.23/**장관**), 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2.23/**차관**) 등

** 유급휴가 권리 발생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개월 → 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

○ (**선원기금**) '**선원기금재단**'을 **설립·운영**(노-사-정 공동 운영)으로 근로여건 개선, 장기승선 지원 등 선원 **양성·고용** 확대를 지원

○ (**제도 마련**) 소득 증대, 임산부 보호 등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선내 괴롭힘 금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유족 보상금 지급 제한('24.1),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도입,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24.10) 등

** 「외항상선 특별주택공급 운영기준」 제정('24.5),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고시」 제정('24.10)

○ (**선원 양성경로 다변화**) **非해양계열 전공자**의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집중 양성과정**을 **운영***해 보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

* '24년 총 340명 /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260명, 인천해사고 해기교육원 80명

- 현장 중심 교육, 해운선사 참여 채용박람회 연계 등 취업 지원으로 **취업률**은 **지속 증가, 해기교육원 취업률**은 **전년 대비 37% 증가**

* 해기교육원 수료생 취업률(%): ('23) 52.9 → ('24) 72.7 (※ '23년부터 운영 시작)
오션폴리텍 수료생 취업 유지율(%): ('21) 63.9 → ('22) 66.2 → ('23) 70.2 (취업률은 100%)

○ (**경력단절 선원 복귀 지원**) **육상 근무 경력 해기사**의 재승선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 (**기존**) 교육과정 분산 운영, 5~6개월 소요 → (**개선**) 교육과정 통합, **1개월 소요**

○ (**규제 개선**)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12.17/잠정)을 통해 상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단축, **선장·기관장 승진** 소요기간*을 **낮춰** 국제 경쟁력 확보

* (3급) 4년~9년→2년~6년 / (4급) 6년~13년 → 3년~9년

○ (**체감형 복지**) 해외근로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 → 500만원), 주택 특별공급 추진*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지원, 원격의료 확대** 등 체감형 복지를 확대해 승선 인센티브 제공

* 특별공급 추천기관 지정, 「외항상선 특별주택공급 운영기준」 제정(5.21),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건설사 협의 등

** 원격의료장비 설치 선박 확대('23. 160척 → '24. 180척) 및 전담 의료진을 배정

○ (**최저임금 인상**) **'24년 선원 최저임금** 육상 대비 0.4%p 높은 **2.1% 인상**하여 선원 **실질임금 보장**('25년 물가인상 전망치 2.1%)

* (해상) 2,614,810원, 전년비 2.1% 인상, (육상) 2,096,270원, 전년비 1.7% 인상

○ (**외국인 선원 인권**) 시민사회 등과 협업을 통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3.27), '**근해 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개선방안**'을 마련(3.26, 9.23)

* (원양어선) 시민사회,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이행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이행현황 등 점검 / (근해어선) 신규 입국자 교육장을 방문하여 송출비용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이탈보증금 징수업체 적발) 및 후속조치 추진 등

-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이행점검, 실질적 제재 조치** 등 추진,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상 최상위 등급 획득

○ (**선원 민원 간소화·디지털화**) 그동안 **수기 위주**로 처리되었던 **선원 민원 체계**를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시스템 구축 추진**

* **승하선 공인 제출서류 5종 감축**(종이 50만장 절약) 등 국민불편 해소 효과

-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승선 통보** 제도 **개선*** 및 **해기면허** 사항 **온라인 발급****으로 해기사 편의 대폭 증진

* 병무청 협업을 통해 예비역 지정여부 통보 채널 확대(카카오톡 알림톡 등)

** 행안부 협업을 통해 정부24 시스템 연계 온라인 발급 체계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선원의 양성경로 다변화에 맞춰 취업 지원 등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회의, 현장소통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임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원, 기업, 국제사회로부터 정책효과를 인정받는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3	항만 및 연안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조성(Ⅱ-1-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천항 재개발**) **착수**에 **난항**을 겪던 **1·8부두 재개발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자 지정 절차** 본격 추진

- **전시공간**(상상플랫폼) **개관**(7.19), **유휴부지 우선개방** 등 시민공간을 확대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관계기관·시민사회***와 지속 **논의**

* 인천항 내항은 역사적 상징성, 문화·관광 거점 기능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의 의견을 모아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회 출범·운영(4.16)**

○ (**영종도 부지조성**)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유휴공간***을 인천국제공항,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한 **해양관광, 교육연구 부지**로 **신규 조성**(3.19)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면으로 약 10km,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3만m^2)

-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캠핑장, 축구장, 야구장 등)은 **조성 완료**(3.19)하였으며, 그 밖의 **상업·레저시설**은 **분양절차 착수**(6.14)

○ (**광양만권 부지 공급**) 광양만권의 **부족한 물류·산업용지 제공**을 위해 **항만재개발**(2건*)로 **배후부지 644만m^2**(여의도 2.2배) **'30년까지 순차 공급을 추진****, **석유·화학·제철·조선** 등의 **국가기간산업 지원**

* (묘도) LNG, 수소 등 에너지 허브기능 확충 / (3투기장) 미래소재(석유화학) 기능 확충
**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비 「항만재개발법」 추진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기간 단축

- **기업**의 **입주시기**에 맞춰 **정부 지원 기반시설**(해상교량, 송·배수시설 등) **설치**를 추진,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LNG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6.20)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9.12) 등

○ (**안심해안 조성**) **침수·침식**에 **위험**한 **연안지역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시범사업 2건**)

* (**現**) 2개소(시범) 9만m^2 ➡ (**'25년**) 제3차 기본계획(변경) 수립 ➡ (**'32년**) 20개소 83만m^2
** (동해권) 강원 강릉시 순긋~사근진 지구 / (서해권)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 지구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국 적용**이 **가능**토록 **완충공간 범위***, **대상지 선정기준**, **공간활용 모델** 등 수립(12월)

* 사유지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 특성상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 설명회('24.5), 지자체 협의('24.8) 등 이해관계자 적극 의견수렴

○ (**연안정비사업**)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에 따라** 연안지역 **침식·침수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전국 77개소), **금년**에는 **강릉 정동진**해변(7.5), **전남 영광** 상하낙월지구(9.30), **충남 태안** 어은돌해수욕장지구(12.10) 등 **36개소 정비 완료**

* (국가 시행, 23개소) 부산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등(국비 100%)
(지자체 시행, 54개소) 강원 고성 거진1리지구 등(국비 50~70%)

○ (**침식대응 협력**) 연안침식 관리구역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한 **침식관리협의회**(5.20, 11.1)를 통해 **효율적 침식관리** 및 **개선방안* 모색**

* 연안 침식관리의 목표·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관리기준선 도입(관리해안선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엔지니어링사 등 설명회, 11.25)

○ (**침식대응 기술력 강화**)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연안 변화 경향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과학적·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연안침식 관리 시스템 개발****('23~'26)

* 드론영상 기반 근해 해저지형 계측 기술 개발, 위성영상 기반 장기 해안선 관측기술 개발 등('24)
** 연안침식 모니터링·예측·대응·평가 등 연안관리 전단계를 통합한 기술·개발('23~'26)

○ (**미래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강풍, 파랑 등 **잠재적 영향**의 **정량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3.4~)하고, **재해**(풍수해)·**환경**(기후변화)·**해양**(연안정비) 등의 분야에 **활용·지원**

* (연안재해 위험평가) 연안의 취약·위험지역에 대한 정량적 평가(진단) 정보 생산·제공 / 남해권역에 SSP 5-8.5 시나리오를 적용한 위험평가 등급(1~5)제시 ('25. 예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노후·유휴화된 항만의 재개발,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침식관리 강화 등 항만·연안공간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국민안심해안사업 추진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4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Ⅱ-1-②)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 활력 거점 마련**) 1단계 **친수·문화 부지조성**을 **최종완료**(12월)하고 지역 활력 거점 마련을 위해 **對국민 개방 확대 및 기반시설 구축**

*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수공원 내 6보도교 개통 및 부산역-친수공원-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새단장(4.12)

- **재개발 구역**을 **관통**하는 **중앙도로***(이순신대로, 5~8차선) **개통**(1.31)으로 **접근성 개선** 및 **부산역 주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

* 충장대로~대교로(2.3km, 5~8차로) / '13~'24년 / 1,334억원 / 최대 22,878(대/일)

- **해양관광산업의 핵심 시설**로써 **해양 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기반시설 중 하나인 **마리나시설의 2단계 착공***

* '24.5~'25.8 / 육상적층시설, 계류시설 1식

○ (**투자 유치**) 세계적 **해양관광도시 토대** 마련으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재창조**를 위해 **상업·문화부지**의 **상부 시설 투자 유치 전략** 마련

- **투자전문가 간담회**(1.25) 및 **공동협의회**(4.4) 개최, **공공콘텐츠 수립 용역**(5.23) 및 **투자유치 용역 착수**(8.6) 등 **조기 활성화 적극 노력**

○ (**인지도 개선**) **노후 항만의 시민공간**으로의 **성공적 전환 및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 행사** 개최

- **부산시민**의 **새로운 힐링공간**로서의 **대전환**을 **홍보**하고자 **걷기 챌린지**(5월, 3만명), **힐링버스킹**(8월, 1천명)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 **힐링 야영장 운영**(연중), **인플루언서 인스타**(4월~) **및 유튜브 제작**(5월, 조회수 58만명), **사진작가 팸투어**(11월) 등 **시민 향유 문화컨텐츠**도 마련

○ (**재개발 여건 조성**) 북항 2단계 예정지 내 **자성대부두*** 이전을 위해 **항운노조 생계지원 협의를 타결**하고, **물류 흐름 중단 없이 기능 이전(→감만 부두)**을 추진

* 항운노조 생계지원 협의 타결(7.27) → 듀얼포트 운영(7월~12월) → 항만 대이동(10월~12월)

- **항만대이동(자성대→감만) 성공**에 따라 **'24.12월 상부시설 철거공사 착수** 등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 여건 조성**

- **부두 이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화물처리, 취급 물량 이탈 방지**로 부산항의 **글로벌 허브 거점항 기능 유지,** 자성대부두 근로자 100% 전환배치로 **일자리 상실 우려를 해소**



<재개발 예정지(자성대 부두)>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합의(7.26)>



<안벽크레인 해상운송(10.30)>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및 달성도,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도 개선·보완('25.6)

- 정책 홍보 등 소통·확산 노력을 통해 정책효과 개선 보완('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했으나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를 제공은 조금 부족.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낮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추진율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함. 한편, 관계기관의 선행 행정조치가 연기됨에 따라 북항 2단계 재개발 추진율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사업계획 수립용역 재착수는 연내 달성하지 못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북항1단계 재개발 추진과 2단계 재개발 여건 조성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하나, 북항 1단계 공급부지가 사업계획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지속 필요

15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Ⅱ-2-①)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항만 설계기준 개정**) 우리나라 해역의 **기후변화 양상*** 반영, **설계파 재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 **설계기준**** 및 **신뢰성 설계법**을 **도입**한 **한국형 항만 기술기준(안) 마련**(10.21)

* (태풍) 최대강도 41년간 31% 증가, 빈도 연간 2.6개 증가 / (해수면) 연간 4.27mm 상승 등
** 국내 최초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5.17 턴키발주) 시 100년빈도 적용

- **항만시설물**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심해설계파**를 **최신의 태풍 데이터**로 반영하는 **연구 착수**(3.11)

* '24.3~'25.3 / 파랑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 심해설계파 보완

○ (**항만 외곽시설 보강**) 수출입 전진 기지인 **주요 무역항**을 **대상**으로 **상향된 설계기준** 적용, **외곽시설**(방파제 등) **보강***을 **순차 추진****

* 안전성 검토결과가 미흡한 경우 TTP 중량 상향 등의 보강공사 실시
** 30개항 43개소 약 2조 2천억원('23~'32) / 재정당국 협의 완료 후 순차 추진

- **항내 수면에서 작업가능한 파고의 확보**가 시급한 **외곽시설***에 대해 **100년 빈도 설계기준 적용하여** 시공, **재해위험도 저감**

* (대표사업)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사업('23~'27)

○ (**재해 취약지구 정비**)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항만 배후권역**의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 16개항 22개소('23~'32) / 관계기관 협의 후 순차 추진(현안장관회의, '23.2)

- (**마산항**) 태풍 매미('03)로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마산항 배후지역**은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5.2)**를 추진, '25년부터 **설계 착수가능**

* 경남 창원 / '25~'29 / 방호벽 5,390m, 잔교식 방재언덕 520m 등
**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최초**로 **예타 면제**된 건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국회 동의 완료, 11.14)

- **(목포항) 목포항 재해취약지구 정비***('25~'29)도 **예타 면제**(5.2)로 '25년부터 **기본설계**가 **착수**되어 **투명식·승강식 방호벽** 등 **설치 예정**

* 전남 영암 / 방호벽(투명식) 7,665m, 방호벽(불투명식) 4,330m, 방호벽(승강식) 545m 등

○ **(안전시설 확충)** 태풍·노후 등으로 손상·파손된 항만 내 **안전시설 보수·보강*** 및 **출입통제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 부산항, 인천항 등 국가관리항(26개항)의 노후·파손된 안전시설 정비('22~'24)

**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입하는 사례 발생(표시선, 로드아이, 위험경고판 등)

- 항만 내 **추락사고 위험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자**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

* ('20년) 6개소, ('21년) 24개소, ('22년) 44개소, ('23년) 48개소, ('24년) 64개소

○ **(안전문화 확산) 방파제 테트라포드구역 출입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영상 방영** 및 카드뉴스,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 KTX·SRT 객실 및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민원실 등 '방파제 안전이용수칙' 홍보영상 방영

- **항만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 미흡사항 **점검*** 및 **강평,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상반기) 3.04~6.28(117일간) 54개 현장 / (하반기) 9.30~12.04(66일간) 74개 현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및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하반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상향 제고 ('25.5, 11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회의, 교육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임 ㅇ (목표(지표) 달성도)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적 조치율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함. 재해안전항만 사업 집행률 성과지표는 기상악화 등 외부 장애요인 발생으로 인해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여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안전항만 조성, 항만 내 재해 예방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16	국가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선진화(Ⅱ-3-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종재난 훈련**) 선박 내 전기차 화재, 해양오염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신종재난에 대비**하여 울산항('24.5), 통영 여객터미널('24.10)에서 해수부, 행안부,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 시행

- 관계기관, 선사·선원 등 대상 **전기차 화재 교육** 및 질식소화 포등 전용장비를 활용한 전국 **민·관 합동훈련**으로 **화재 대응역량 강화**

* 울산(5.13), 인천(5.23), 여수(6.25), 완도(7.9), 제주(7.10, 2회), 동해(7.15), 대산(9.2), 평택(9.4), 목포(9.23, 10.21), 부산(9.25), 여수(9.30), 통영(10.15), 군산(10.23), 포항(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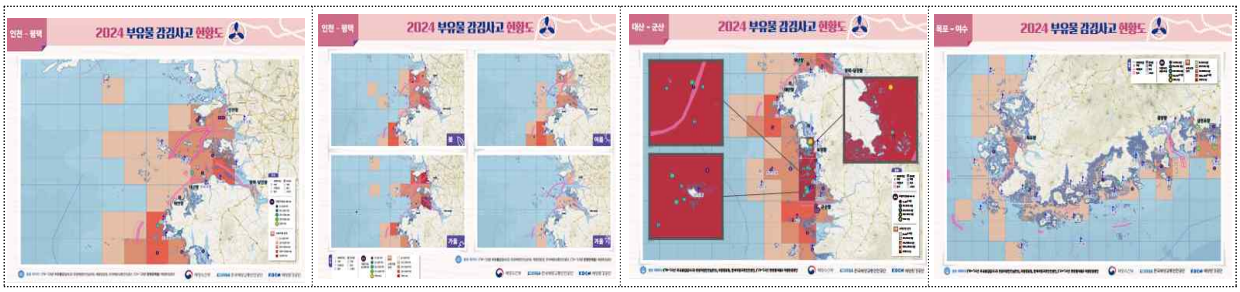
○ (**위험요소 발굴·개선**) **국민 참여점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해양수산분야 642개소 집중 안전검검, 310개 위험요소 발굴·개선****

* 민·관 합동점검 인력 증대('23. 1,362 → '24년 1,725명, 27% 확대) 등
** 가스 돌핀부두 소화배관 파공 등 위험요소 310개소 식별 및 개선조치 추진

○ (**재난대응 지원**) 여름철 태풍 내습 시 행동요령을 분야별(선박, 하역시설 등)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에 배포

-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물 감김사고 다발위치와 항행 장애물 정보를 분석하여 표기한 지역별(6개) 현황도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여객선사, 어민 등에 제공

* 바다내비게이션(앱) 및 GPS 플로터 표출, 우리부 블로그 게시 등



○ **(중대재해 예방 강화) 우리부 시설물 안전보건 이행 권역별 점검**(4~12월)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위험성평가*('24.6), 안전보건협의체 운영(매월) 등 23개 사업장(본부+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정기·수시 점검

  * 16,998개 유해·위험 식별 → 760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721개(95%) 이행 완료('24.9)

- **(공공선박 컨설팅)** 우리부 소속 · 산하 · 공공기관 선박(11척)에 대한 민·관 합동 컨설팅('24.8~9)으로 유해·위험요소 67건 발굴·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외부작업자 안전관리, 사전안전미팅 이행 등), 위험성 평가(선내 작업공정 등 구체화), 안전조치(안전보건 표지 설치, 위험설비 방호조치 등) 전반

○ **(안전문화 확산) 안전실천 다짐 서명**('24.6, 4,117명), **정기 위험성 평가**('24.6)와 연계한 안전보건 표지 설치(32종, 3,081개, 선박, 연구실 등) 등 안전문화 확산 집중 캠페인 전개

  *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ZERO, 안전실천 다짐' 행사(장관님, 5.27)

- 작업 전 **안전 회의**(TBM) 안내서* · 교육 및 집중기간 운영, **'작업 중지 요청'** 권리 안내 등 소통에 **열린 현장문화 조성**

  * TBM 개요, 단계별 활동 내용, 'TBM 리더' 역할, 시나리오 및 작업중지권 안내 등

○ **(안전문화 수준 진단)** 설문 조사·면담 기법,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우리부 **안전문화 수준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12월)

○ **(영세사업장 지원)** 설명회 개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 등 소개 및 법률 동향 안내

  * (일시/장소) '24.5.28, 부산, 247명 / '24.9.5, 부산, 168명 / '24.11.7, 서울, 87명

- 해양수산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맞춤 컨설팅**(5개소) 및 중대재해 매뉴얼 표준안 작성 가이드북* 배포('24.12)

  * (중대산업재해) 해운·항만운송, 어업·수산, 마리나·수중레저, 박물관 등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수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수산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재난관리 역량 확보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모두 일정대로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설명회, 워크숍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이상임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재난관리 업무평가 우수, 신종 재난 대비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현장재난 관리 강화의 기대효과가 우수함

17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Ⅱ-3-②)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기차 화재 대응**) 선박 내 전기차·배터리 **화재대응 종합 안전대책**('24.7)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수립(7.9)

* 전기차·화재대응 가이드('23.6.~) → 법·제도 개선, 기술개발 등 화재대응 종합대책('24.7)

** 여객선 전기차 충전금지, 화물운송시 전기차 충전율(50%) 제한 권고기준 마련 등

- **이해관계자 설득, 현장정착 노력**으로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하려던 연안선사들이 안전기준을 수용, **안전확보**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

○ (**해사 사이버안전**)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 물류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수립·발표(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10.31)

* (국외) 선박 운항통제권 10시간 상실, 선사 시스템 랜섬웨어로 3천억원 손실('17)
(국내) 선박 PC 랜섬웨어로 주요서류 삭제('19), 서해 전파교란으로 선박 GPS 장애('24)

○ (**해상교량 사고 대응**) 美 볼티모어 교량의 충돌·붕괴 사고('24.3.26) 계기, 국내 **무역항 인근 10개*** **해상교량**에 대한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및 **사고 대응훈련 실시**

* 충돌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전체(10개) 교량 대응훈련 실시 완료**('25.4~10월)

○ (**화물선 과적·과승 점검**) 여객선, 카페리화물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과적·과승 등 위법사례 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해경·검사기관 합동)

-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 **카페리화물선**(11척) 과적·과승 예방 및 해사안전감독관 집중점검 **위험물운반선**(135척)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수점검***(2~5월) 및 **상시점검**(6월~) 실시

○ (**구명조끼 보급확대**) **구명조끼 무상보급 사업** 대상을 기존 나홀로 어선에서 인명사고에 **취약한 소형(1~2인용) 일반선박까지 확대***

* 나홀로 조업어선(200척) + 1~2인 일반선박(163척)에 구명조끼 730여개 보급('24~)

○ (**안전취약선박 밀착관리**) **고위험·영세선박** 대상 안전장비(손끼임 방지 장갑 등) 보급, 선박설비 무상점검 등 **1:1 집중 안전관리****(~'24.12)

* 집중관리선박 확대 : ('21) 462척 → ('22) 597척 → ('23) 622척 → ('24) 650척

○ (**특별점검**)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명절·휴가철 **연안·국제 여객선 전수점검**(183척)으로 관리강화

* 연안여객선 총 160척(설·추석 연휴, 여름 휴가철), 국제여객선 총 23척(2~4월, 8~10월)

○ (**안전 투자 확대기반**) **선사의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3월)

*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참여희망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3월~11월)을 시작,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정식 운영('24, 8개[시범운영 '24.~] 선사 → '25. 82개[정식운영 '25.7~] 선사)을 추진

○ (**안전운항 지원**) 선장이 **위험·혼잡 해역**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한 항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해상교통 혼잡예측 정보'** 서비스를 **최초 제공**('24.1~)

○ (**안전교육 확대**) 교육부, 민·관 전문기관 등과 협업하여 **유아**와 **특수·대안학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24~), **全주기 안전교육** 실시

* 유아(4~6세)의 눈높이에 맞춘 구명조끼 착용법 '해양안전그림책' 교재 제작·보급 등

- 유치원, 초·중·고교를 방문하는 해양안전 교육과 **전국 해수욕장, 물놀이장** 등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시설*** 등 **확대**

* 구명뗏목 탑승실습, 해양생존체험, 해상사고 VR체험, 해양안전 전시 운영 등

○ (**교육시설 확대**)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신규 운영**('24.1) **등*** 전국에 위치한 **교육시설**을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선박탈출, 바다생존법 등) 확대

* 진도·안산 해양안전체험관, 인천·목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총 4개소

○ (**국민참여 확대**) 국민들이 직접 해양안전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엑스포 행사 등의 **참여형 콘텐츠** 확대

*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8월), 해사안전리더 선정(11월), 해양안전엑스포(9.10~12)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사안전대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회의, 간담회, 현장점검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취약선박 집중관리 추진실적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함. 해양사고 피해 저감실적 성과지표는 어선사고 증가 및 어선사고 인명피해 증가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선박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책 마련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해사안전정책의 효과가 민간, 국민에게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18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Ⅱ-3-③)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어선 안전관리 대책**) 어선 전복·침몰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복원성 강화 등을 포함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발표(5.2,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①조업 관리 강화, ②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③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④안전한 어선 건조 등 추진

○ (**위치통지 규제 합리화**) 어업인의 조업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을 보장하고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24.10)

- 일정시간 간격에서 **일정시간 이내**로 변경하여 어업인이 언제나 위치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상특보 시 추가 위치통지 횟수** 등을 조정

○ (**해상특보 사전예고**) **풍랑경보**의 **사전예고 최초 도입**('24.12~, 기상청 협업)으로 기상악화 시 **선제적 어선안전관리 기반*** 마련

*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이 예상될 경우 서해먼바다에 한해 최대 48시간 전 하루에 4번 풍랑경보 사전정보 제공을 통해 어선 대피시간 확보

○ (**어선검사증서 디지털화**) **법령정비*** 및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구축**·시행('24.6)을 통해 어선검사증서(9종) 검사 신청·발급·관리·재발급 등 온라인 관리체계 마련**

*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23.12),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에 관한 고시」 제정('24.6)

** 검사대상(35,000척)×증서종류(9종)×발급비용(교통비포함 약 10,000원) ⇒ **연간 30억원 비용절감**

○ (**항해장비 비치의무 완화**) **「어선설비기준」**을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장비 설치 시 기능이 중복되는 고가 아날로그 장비*의 비치의무를 면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

* AIS(자동위치식별장치, 10톤 이상 의무설치)로 어선의 위치와 방위 등 확인가능

** 단, 원양어선과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어획물운반선의 설치의무는 유지하고 면제어선은 장비 고장에 대비한 휴대용 자기컴퍼스를 구비하도록 하여 어선안전 공백 해소

○ (**어선건조업 등록제**) 영세한 어선건조업의 정부차원 육성·관리를 위하여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제의 법적 근거* 마련('24.12월)

* 「어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11) → 정부이송·개정안 공포('24.12)

- 최소한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을 **취소**

○ (**어선원 재해예방**) 관리체계 이원화, 안전보건기준 미비 등 사각지대에 있던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 마련(「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4.12)

- 어업설비 관리, 위험성평가 이행 등 작업환경 개선·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어선원 안전감독관) 배치('24.12) 및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신규 예산 확보**

* 사업장 지도·점검, 작업중지 명령, 재해사고 조사 등 어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자 최초 도입

○ (**저탄소 어선**) 어업환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전기+디젤), **LPG** 등 **에너지절감형 저탄소 어선 개발** 추진

* (하이브리드) 10톤급 시제선 건조 착수('24.2) 및 핵심 기자재 탑재·실증('24.11~)
(LPG) 엔진, 연료공급시스템 등 성능검증, 700마력급 시제선(어장관리선) 건조 착수('24.12)

○ (**친환경선질 어선건조**) 재활용이 어렵고 해양환경 오염 원인으로 지적되는 FRP어선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선질 어선건조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규정 마련**('24.8)

*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5.31)
** HPDE 적용대상, 구조기준 등을 포함한 「폴리에틸렌선 구조」 잠정기준 마련(8.9)

○ (**어업인 안전교육**) 전복·화재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 유발** 어선사고 시 어업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실습형·체험형 교육** 확대

- 사고 시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한 **가상현실(VR)** 교육, **퇴선훈련** 강화, **조난버튼(SOS) 작동** 및 **통신장비 활용실습** 등 교육방법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이행 노력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5.3)

○ 성과지표 목표 조정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5.4)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 중 일부를 일정보다 늦게 완수하여 보통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해상특보 사전예고 도입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19	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Ⅲ-1-③)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창업기업 집중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투자자금확보 프로그램 **통합**운영 및 성과 우수기업 연계지원*을 통해 운영효율성 강화 등

* 창업기획자 우수기업 블루스타트업 가점신설, 블루스타트업 우수기업 전용 IR 신설 등

○ (**초기창업기업 전용펀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가인 액셀러레이터도 해양모태펀드에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70억원 규모 전용펀드 신설·운용, '28년까지 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지속투자 예정

○ (**유망기업 보육**) 해양수산 전문 **창업컨설턴트***의 유망기업 발굴·보육 등 지원강화('23. 40개 → '24. 64개)로 해양신산업 저변확대에 기여

* (창업기획자) 기업발굴, 사업화, 투자유치까지 종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성장·확장 기업지원**) 성장·확장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민간 투자연계 **사업화지원,** 해양수산분야 난제해결을 위한 딥테크 분야를 발굴·선정하고, 딥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25~'28) 추진**

○ (**상용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을 국가기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달계약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제도 개선

- 신기술 인증 1차 심사 통과 후 2·3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을 거쳐 **1차 심사를 면제**하도록 간소화('24.10, 고시 개정)

○ (**공동 활용**) 연구조사선 7척,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197건을 외부 산·학·연에 개방, 100여건의 연구과제 지원**

- **공동활용시스템***(바다봄) **구축**(9.5)으로 공동활용 신청을 일원화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전문기관**** **지정 추진**('24.9~'25.3)

* (기존) 공동활용기관에 개별 신청 → (개선) 공동활용시스템에 사용 신청 후 승인

** (수행업무) 유휴 연구장비·시설 관리·임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추진

○ (**모태펀드**) 정책펀드의 마중물역할을 토대로 **22개 기업이 민간투자 203억원 달성,** 전년동기 대비 **투자실적 28% 증가**(누적 781억원 투자)

* 모태펀드 투자액: ('23.11) 14개 기업 158억원 → ('24.11) 22개 기업 203억원

○ (**ESG투자**) **해수부-신한은행간 MOU를 체결**하여, 신한은행에서 ESG 관련 **3개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 제품제작**에 **투자** 확정('24. 약 7억원)

○ (**네트워크**) 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 등 민간투자기관 53개사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 및 유망기업 IR** 실시, **투자기관 피드백으로 기업 역량 강화**

* 총 4회 개최(5.28, 7.2, 9.3, 11.6) / 유망기업 19개사에 대한 투자기관 피드백 실시

○ (**예비오션스타**) 예비오션스타 지원프로그램을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전면개편해 연매출 100억원이상 성장기 이후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홍보, 투자유치, 수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달성이 기대되는 해양수산 벤처·스타트업

○ (**취업박람회**) 해양수산분야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지원, 일자리 홍보 및 채용 제고를 위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 온라인(8.5~9.10) 및 오프라인(9.10) 박람회를 개최하여 3,775명의(온라인 943명, 오프,라인 2,832명) **해양수산구직자의 취업면접·상담 등 지원**

* 채용면접 참여자 306명(전년대비 12%증) 중 46명은 현장에서 2차면접 대상자로 선정, 이후 기업별 절차에 따라 총 181명 취업 성공

○ (**인력 양성**) 연구자 성장 주기별 실습교육·채용·연구 연계 지원을 통해 해양 신산업* 분야 청년연구자를 글로컬(Glocal) 인재로 양성 추진

* 친환경·첨단선박, 블루푸드·바이오, 해양공간·자원, 해양레저관광 4개 분야
** 해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 프로젝트 / '25~'29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산업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초기창업 전용펀드 조성,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신규 R&D 예산 확보, 취업박람회 개최 성과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20	해양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Ⅲ-1-①)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플랜트**)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실적, 정부간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총 **5,611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 수주**

* 한-인니 고위급 위원회(6.12), 실무급 위원회(11.28)

-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 인증 교육**,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

○ (**해양심층수**) 일반 생수 업계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이용한 제품정보 표시** 및 **제품명 외국어 단독표기**를 허용하여 산업 활성화 촉진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 개정(1.29)

- 「해양심층수법」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여 **신고절차** 관련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규모 확대** 도모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해양심층수법」에 관련 규정 부재로 지자체 및 업계에서 유통전문판매업 법제화 요구

○ (**해양무인이동체**) 단위모듈 시험장인 **수조**^{포항}에 **장비 구축**, 실해역 **외해 시험장**^{포항}**·내해 시험장**^{새만금} **상세설계 추진 등** ROV, AUV, USV 등의 성능인증을 위한 **공인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

○ (**극지 연구**) **남극해빙 예측** 기술개발 신규 추진*, 서남극 스웨이츠 빙붕을 녹이는 새로운 기작을 세계 최초로 제시**, 빙하 질량 변화의 정밀 관측에 성공 등 융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 개선

* 남극해 급격한 온난화 대응 남극 해빙 예측기술 개발(R&D, '25~'30) 사업 신규 반영
**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4.11) 게재

○ (**기후변화 연구**) **韓美 공조**를 기반으로 **인도양 수온약층 해역의 해양환경 변동**이 우리나라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명 연구를 추진, 대기**부터 **해저면**에 이르는 **시계열 관측**에 성공(인도양 연구 국가 중 최초)

○ (**연료실증 선박**) **세계 최초**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한 공간**에서 **실증***이 가능한 **선박**(TRL 8~9단계) **건조**(10.31, 진수)

* LNG가 선박의 주된 추진 동력원이나 추진연료별로 엔진을 선택하여 실증 가능

○ (**전기 선박**) **세계 최초** 이동식 전원 공급시스템을 적용한 **전기추진 차도선**(TRL 8단계)의 **실증운항**(18회)을 통해 **성능·안전성 검증**

○ (**저탄소 엔진**) **아시아 최초** 개발한 **LNG-암모니아 혼소엔진**(TRL 6~7단계)의 성능·안전성 검증(6월~), **국내 조선사 기술이전** 추진('25~)

○ (**해양에너지**) **파력발전** 설비 **실해역 실증 구조물 설계**, 국내 최초 **조류발전실해역 시험장 조성**(진도), 해양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실해역 실증시설 설치**(제주) 등을 통해 민간의 해양에너지 실증을 지원

○ (**해저공간**) 민관 협업*으로 **수심 30m**에서 **3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해저공간을 **세계 2번째로 조성** 중**('22~'27)(TRL 6단계)

* 현대건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원구원 등 6개 민간기업, 7개 대학, 5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
** 설계(~'25.上) → 착공('25.5) → 테스트베트 제작 완료('26.12) → 해저 설치('27)

○ (**심해저 자원탐사**) 구리, 아연, 코발트 등 전략금속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양 열수광상 및 서태평양 망간각 탐사**

○ (**연구거점 확대**) 기존 태평양 연구거점* 외 **대서양 연구거점**(한·ACS**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해양과학 영토**를 확대

* 인니, 중국, 페루 **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25개국 가입)

○ (**공동연구**) **미국 및 해양과학 국제기구**와 기후변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방사능 공동연구 수행 및 극지 등 **해양과학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술 경쟁력** 확보

*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매년 30여개의 해양과학 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친환경연료 실증선박 건조, 해양에너지 민간 실증 지원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 조성, 해양심층수 표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등 성과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함

21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Ⅲ-1-②)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유용자원 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 촉진**을 위해 **활용가치 중심**으로 **자원조사 체계**를 **개편***하여 **유용자원 확보**

* (기존) 우리나라 해역별 자원 서식현황 조사 ⇨ (개선) 산업적 활용자원 중심 조사

- 동해 및 제주해역에서 **유용 해양생명자원 40종**을 확보하고, 독도 주변해역 등 **미탐사 지역** 조사를 통해 **신종·미기록종 12종** 확보

○ **(관리 강화)** 확보한 자원을 **국가자산**으로 **등록**하고 자원 종목록화(기록종 15,796종, 확보종 9,999종) 및 등급화(131종), 기탁등록보전기관* 공동발굴조사 등을 통해 관리 강화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율 제고, 자원 분산 보존 및 중요자원 소실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서울대 등 27개 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운영 중

- **해양수산바이오 연구데이터**를 지식·자산화하고, **산업화 원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MOBiDIC) 구축(시범 오픈, '24.10)

○ (**소재 고도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소재(6종)에 대한 **국산화 공정 개발**하고, 기능성 원료에 **고부가 제형**을 적용한 **전문원료 개발*** 추진

* 나노파우더, 마이크로캡슐 등 제형기술 적용을 위한 소재 생산공정 및 순도증진 기술 확립

- **연어 부산물 상용화 소재 개발**을 통해 기능성 **제품 출시** 및 **수출 달성***, **해조류** 유래 기능성 **효능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발

* 연어멀티밤 출시('24.5월), 수출 등 매출 성과 창출(국내 3.3억원, 수출 50만$)
** 논문 게재, 식약처 개별 인정 신청, 기술이전 2건

○ (**유망소재 확보**) 해양동·식물 등으로부터 **항염·항산화·주름개선** 등 기능성 소재(650건)를 확보하고 연구기관·산업계 등에 **올해 350건**을 **분양**(연평균 24%↑)하였으며 산업계 분양도 증가세('22. 29건 → '24. 40건)

○ (**산업생태계 조성**) 해양바이오박람회*, 기업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계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망소재 활용 **기업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

* 해양바이오 기업, 관련기관 등 85개 전시부스 운영, 해양바이오 포럼, 해양수산 기술이전 설명회(9건) 및 심층상담(28건) 등 실시

○ (**제도개선**) **자원 무상분양 용도**를 **확대***하고,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절차 간소화, 기탁등록기관 관리 등 **제도 정비****

* (기존) 시험·연구용 → (개선) 교육용까지 확대(「해양생명자원법」 개정, '24.1월)
** 자원 분양승인·재분양 절차 및 심사기준('24.4), 기탁기관 재지정 신청서류 간소화('24.9)

○ (**해양바이오 인프라**) 서해·서남해·동해 지역별 산업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조성**을 추진, 올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완공('24.11)**을 통해 국내 영세 해양바이오 기업 지원

○ (**국제협약**) **BBNJ 협정* 발효 및 국내 비준**에 **대비**해 체계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24.11)

* 국가관할권 바깥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UN해양법협약下 국제협정('23.3월 채택, '23.10월 정부 공식 서명)

○ (**홍보·교육**) **심해 생명자원**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씨큐리움**(No Plastic)' 운영 등 해양생물 가치 홍보

* 국립프랑스자연사박물관 특별 교류전 : 'Ocean, Diving into the unknown'('24.4~'25.2)

- **'해양생물 탐구대회'*** 개최, **해양생물 콘텐츠**를 활용한 **늘봄학교**** 및 고교학점제 참여 등을 실시해 해양자원 관련 교육 강화

* 국제행사로 국내 43개 시군, 국외 6개국(중국, 대만,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미국) 139팀 참가
** 초등 저학년용 프로그램 2종 개발(① 바닷속 나의 비밀공간, ② 수상한 바다 손님) 및 운영(3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를 개선·보완('25.3.)하고, 해양바이오 확보·관리·이용 분야 핵심정책의 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간담회, 협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유용생물 자원 확보 증가 및 제공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상용화 촉진으로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하며 과제 추진의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22	권역별 해양관광명소 조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 확산(Ⅲ-2-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도 마련**)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1.9)해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 관광자원 보호 관리, 실태조사·통계 작성**, 기관·단체 육성 등 체계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복합거점 조성**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23.4~'24.4)을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24.4)하고, '25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2개소, 20억원) **반영**(향후 5개소 확대 추진)

○ (**해양레저관광거점**) **사계절 수중레저**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거점 8개소** 조성을 추진 중,

- 올해 **1개소**(경남 창원)를 **신규 선정**하고, 실내 서핑 시설 등을 갖춘 **1개소**(전남 보성)를 **착공**(3.13)해 해양레저 접근성 개선을 기대

* 기존 7개소: ①(수도권/도시위락형) 시흥, ②(서해안권/레저휴양형) 군산, ③(서해안권/레저휴양형) 보령, ④(다도해권/체류형) 보성, ⑤(동해안권/수중레저형) 강원 고성, ⑥(제주권/수중레저형) 서귀포, ⑦(동남권/친수문화형) 경주

○ (**크루즈 관광**) 기항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방한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6.17)

* 항만·관광 기반 확충, 관광상품 고도화, 기항지 유치 확대 및 홍보 강화, 산업 친화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문체부와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입국편의 도모,** Fly & Cruise 추가 운영(유럽-인천, 2회) 등을 추진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 81만명 돌파**('24.12월 기준, **전년非 54만명↑**)

* (크루즈 방한 관광객) '23년 27만명 → **'24.12월 81만명(약 300%↑)**

○ (**해양스포츠**)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을 **보령머드축제**와 **동반 개최**해 관광객 참여(약 40만명)를 활성화, **지역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새만금컵 요트대회-부안 문화재야행, 전국드래곤보트대회-삼척 동해왕이사부, 리갓타 대회-여수 마린페스티벌 등

○ (**해수욕장**) **테마 해수욕장*** **운영,** 폭염 일수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장기간 연장** 등 해수욕장별 운영을 특성화해 이용객 증가***

* 향토 체험, 레저 복합, 생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테마 해수욕장 전국 53개소 운영(6월~9월) / 매년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포상 및 표창 수여

** 강원 고성군 3개 해수욕장 개장기간 연장(8.18 → 8.25(봉포) / 8.31(천진,아야진)

*** 전국 266개 해수욕장 개장기간(6.1~9.8) 동안 4,114만명이 방문(전년 대비 이용객 8%↑)

-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안전요원 2,292명**을 **배치**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해경, 소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대표 해수욕장 20개소** 방사능 조사* 실시한 결과(10월 기준 898회)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공표**

* 조사주기: 개장 전(격주), 개장 후(매주) /조사구역: 물놀이구역 인근 수심 2~3M 등

○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자원**(갯벌, 소금, 경관 등)의 특성을 활용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치유센터* 5개소** 조성 추진

* 완도('23.11 준공), 태안('24.12 준공예정), 울진('20~'25), 경남 고성('20~'26), 제주(신규)

- 지난해 최초 개관한 **완도센터**는 올해 **4만 6천명**이 방문(10월 기준), 연말까지 예약 완료로 해양치유 웰니스 산업 발전에 청신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운영 및 콘텐츠 개발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관광거점 착공, 크루즈관광객 최대 유치, 관광콘텐츠 해양레저관광법 마련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23	해양교육문화 콘텐츠 확충 및 향유기회 확대(Ⅲ-2-②)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장기 비전)** 학교·지역·기업·시민사회를 연계한 해양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 수립('24.11, 사회관계장관회의)

○ **(생애주기 교육) 영유아 해양교재 최초 개발·보급,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교육부 협업) **참여**, 고교 해양교과목 **최초 개설***, 중학 **청소년 올림피아드** 개최*, 대학강의 제공 등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축**

* 통합해양교과서 「인간과 해양」(`24.3.1 발간), 완도수고·한국해사고 등 2개교

○ **(전문기관) 지역별 해양교육센터** 시범운영('24.9) 및 **해양교육전문기관 고시안** 제정('24.12), K-오션MOOC('23. 18개→'24.30개) 등 해양 관련 **교육컨텐츠 신규도입**을 통해 **해양교육 확산 노력**

○ **(해양문화 확산) 국가기념일**인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5.31, 화성)과 바다주간 행사(전국 100여개) 개최(100만명 참여), 바다동요대회 등 예술창작 지원 및 체험행사 개최를 통해 **해양문화 컨텐츠 다양화**

- '해양교육 네트워크'의 **참여기관 확대***, '해양전시관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해양문화 체험 기회의 다각화**

* ('23) 9개(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수산과학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재단,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수산개발원) → ('24) 12개(+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 **(해양력 강화) 인천해양포럼**(7.4), **세계해양포럼**(9.24) **등** 오피니언 리더층 대상 다양한 **강연·포럼**을 통해 **해양력 강화 비전·발전방향**을 제시

○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해양교육문화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12.11), **청주해양과학관 건립**('24.2 준공) 등을 추진

○ **(여수박람회장)** 전문성, 재무안정성을 갖춘 항만공사를 통해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

- 박람회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을 통해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 추진(6월 착수)

* ❶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50만명, 5~6월), ❷2024 썸머뮤직 페스티벌 Y(1만명, 8월), ❸2024 여수밤바다불꽃축제(18만명, 11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국립해양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24.5~11), 국제전시 참가*('24.8~10) 및 국외협력전시**('24.12~'25.3) 등을 통해 관람서비스 질 향상

* 인도네시아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전통선박전에 참가하여 거북선, 판옥선 등 전통한선 소개
** '항해와 시계'를 주제로 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대여 등 협력

- 학술총서 발간(2권),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학술 페스티벌(8.30~31) 및 한국 해전사 재조명 학술대회(11.1) 개최, 학술강연 운영(5회, 4~9월) 등 학술연구 역할 강화

○ **(국립해양과학관)** 다양한 전시기획*, 학교밖 **체험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확대 등을 통해 **해양과학 대중화 선도**

- 제1회 해양사랑 교육 페스티벌***(9.21~22, 2천여명) 및 동아시아 해양과학 청년 포럼(4.15~19) 등 **지역·국제 협력 강화**

* 국제협력 특별기획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7~10월), 해양과학 이슈 팝업전시(5회, 4~12월), 보이는 해양로봇 연구실(7~10월) 등 전시 기획
** 전시 연계 융합 교육(연중), 특성화고 해양캠프(8~9월), 발명대회(7월), 탐구교육(연중) 등
*** 경북도교육청, 경북문화관광공사, 울진해양환경에너지교사연구회, 국공립기관 등 45개 기관 협력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이 더 가깝게 해양교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효율적 운영, 해양콘텐츠 다양화 등의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설명회, 간담회,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교육문화 컨텐츠 개발, 체험기회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해양문화 및 해양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여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함

24	독도 등 섬 관리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Ⅲ-3-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무인도서 제도개선**) 그간 보전 등 규제 위주의 무인도서 관리 정책을 무인도서 유형에 맞게 개선*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

* (준보전 무인도서)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 설치 허용, (이용가능 무인도서) 토지소유자 시설물(소규모 축사, 농막 등) 설치 허용

- 영해기점 무인도서와 영해기준점 시설에 대한 체계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영해기점 특별관리계획(안) 마련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실태, 이용계획 및 관리현황, 점검계획, 보전·관리 방안,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등

- 「무인도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할 무인도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 물리적 기준(면적 1,000㎡ 이상, 해안선 길이 200m 이상)을 충족하거나,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 표지가 설치된 무인도서 등

○ (**무인도서 환경개선**) 권역별 34개소 무인도서에 대해 해양쓰레기 현황조사* 후 31개 무인도서를 선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확대

* 위성영상 탐지 알고리즘 기반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 효과 제고

** ('23) 11개 도서 80톤 → ('24) 31개 도서 147톤 수거

○ (**소통·홍보**) **국민 참여 캠페인** 및 방송·언론 매체 활용을 통해 **무인도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가치 재발견, 정책홍보** 등 추진

- "상왕등도" 및 주변 유(6개)·무인도서(24개)의 해양영토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4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하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23년부터 행안부와 협업하여 7개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하여 매년 1월 공동 홍보 중('24년 올해의 섬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상왕등도)

- 매달('24.2~12월) 이달의 무인도서를 선정하고 관련 포스터, 카드뉴스,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및 최신자료 활용 DB 구축, 관리자 시스템 기능 추가 등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 배경지도 및 미니 맵 기능 추가 >



< Open-API 신청페이지 >



< 기선·영해 한계선, 타 법률에 따른 구역 >



< 해안선 길이 중심 통계 기능 >

○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독도 관리, 독도 주변 해양조사 및 연구, 독도 탐방·홍보 등 관할권 행사를 통해 **해양영토 주권 공고화** 기여

- '24년도 독도 지속가능 이용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 독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강화,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역대 최다 규모로 해양조사 완료*

* 출현·방송 횟수 : 총 30회 조사 중 총 10회 출현 및 방송

** 조사현황('17~'24) : ('17)18회 → ('18)22회 → ('19)24회 → ('20)26회 → ('21)27회 → ('22)26회 → ('23)28회 → **('24)30회**

○ (**독도 연구**) 독도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 논문 발표(14건 : 해외 6)와 학술지에 등재(3건 : 국내 3), 특허출원(4건, 국내 4)

* 독도 지속가능 이용연구(해양물리, 해양 생태계, 독도 형성기원 등 연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무인도서 보전·이용·관리, 독도 관련 연구 등 섬관리 강화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에 성과가 있어 종합적 정책효과 우수, 향후 기대효과는 보통

25	해양영토의 과학적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Ⅲ-3-②)	보통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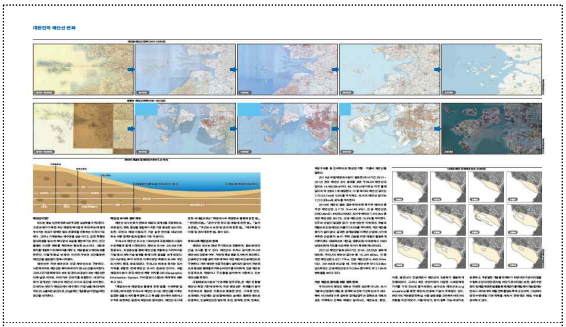
□ 주요성과

○ (**해양과학기지**) 기존 과학기지와 연계·차별화*하여 동해 **해양생태·환경 기후변화 연구 전초기지** 역할 수행할 동해(왕돌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 착수('24.1)

* 수중 구조물 에 인공 생태암반 등을 설치, 해양 생태환경 모니터링·생지화학 연구 강화
** 수심·높이 23·30m / 경간 10×10m / 면적 570㎡ / 무게 988ton / 설치장비 32종 48점

- 과학기지 운영·활용·체류연구 기관 간 기지 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상·하반기 해양과학기지 활용협의체 회의를 개최

○ (**국가해양지도집**) 해안선의 변화 과정, 항만개발 계획 등 다양한 시계열 정보를 포함한 국가해양지도집을 이해하기 쉽게 지도, 삽화 형태로 제작·배포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

○ (**국제학술회의**) 「제12회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를 개최(11.4~5)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해양법 관련 네트워크 구축,** '신진학자들의 아고라' 세션을 통해 **신진학자**들의 **학술활동** 지원 등

* ICJ, ITLOS, PCA 재판관 및 변호인, 그 외 영향력이 높은 국제해양법 학자·교수 등

○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해양영토에 대한 중·고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지식 습득을 유도, 미래 해양인재 양성의 기초 마련

※ 총 56팀(중등부 38팀(114명), 고등부 18팀(54명)) 참가 / 본선 : '24.8.31., 고려대학교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모의재판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미래 국제해양법 전문가 양성

* "일국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 타국의 200해리 이내로 연장될 수 있는가"
※ 총 18팀 64명 참가 / 본선 : '24.8.23., 고려대학교

○ (**실무자 해양법 역량강화**) 실무자의 **국제해양법 관련 지식 함양** 및 **이해 제고**를 위해 실무 수요를 반영한 해양법 교육 실시*

*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11.11) / 조약의 해석(12.6) / 해양공간별 특징·법적지위(12.17 실시 예정)

- **해군사관생도 대상** 해양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해양법과 해양안보를 주제로 '**제3회 국제해양법·해양안보 아카데미**' 실시

  * (일시/장소/참석) '24.5.20.~21. / 해군사관학교 / 사관생도 및 교원 120명

- 해양법 분야 대표 학회인 국제해양법학회와 '**국제해양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신 학계동향**(플라스틱 협약, '24년 주요 국제판례 등) 논의·토론

  * (주최/주관) 해수부, KIOST / 국제해양법학회, (일시/장소) '2412.2. / 부산

- **유관기관* 해양법 업무 담당자** 대상 '**해양법·정책 포럼**' 개최(12.3.)

  * 해수부, 외교부, 해군,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KIOST 등

○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증가하는 해양법 관련 현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전공자 지원**) 학위연구*(6명),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2명), 국제기구 인턴쉽(1명), 박사후 연구자 공동연구(1명), 해양법전문가 공동연구(3명) 지원

- (**국제해양법 아카데미**) **국제해양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국내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현안 및 이론 강의**(상반기 8강·하반기 9강) 실시

  * (상반기 : 서울권) 연세대 / 4.13~5.22, 104명 수강, 63명 수료
  (하반기 : 부산권) 동아대 / 9.4~11.27, 92명 수강, 58명 수료(전 강의 출석자에 한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해 해양과학기지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법 인력 양성, 해양과학기지 구축 추진 등의 성과가 있어 종합적 정책효과 우수, 향후 기대효과는 보통

26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Ⅲ-3-③)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한-조지아 FTA**) **한-조지아 EPA**의 **성공적인 첫 체결**으로 향후 EPA 협상의 **선례** 및 **초석 마련**(**'24.11.27 타결**)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체계에 협력요소를 가미한 신개념 FTA

-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우리측 **민감품목 시장개방 제외**, **조지아측 수산물 전품목 관세철폐**로 수산물 **수출 시장 확대, 수입 재료 사용 시에도 원산지 인정**하여 **수산제품 수출 활성화 기대**

○ (**한-몽골 FTA**) 제3국 수산물을 우회 수출하는 경우 또는 편의치적으로 어획한 수산물은 **협정 관세 혜택**에서 **배제**하여 **국내 수산업 보호**

* 편의치적 방지를 위한 선박지분율(자국민 50% 이상 소유) 조항 제안→ 몽골측 수용

○ (**WTO**) WTO 제12차 각료회의('22.6)에서 수산보조금 협정 채택 시 합의되지 못한 면세유·원양보조금 등 **민감쟁점 관련 후속협상** 대응

○ (**IPEF**) **공급망협정(필라2), 청정경제협정(필라3)** 타결 후 **비준 추진**('24), 우리 **유관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태지역 진출 기반 형성**

* 무역협정(필라1)은 농업章 등 일부 조항만 부분 타결

- 우리 수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산보조금 , 선원인권보호, 수산물 위생·검역 등 대응 추진

* 수산보조금(환경章), 선원인권보호(노동章), 수산물 위생·검역(농업章) 등

○ (**탄력관세 연장**) 관세심의위원회('24.11) 적극 대응을 통해 '25년에도 탄력관세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수산업계 보호**

○ (**긴급 할당관세**) 김·고등어 등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하여 **긴급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 고등어(1.19~6.30, 2만톤·10%→0), 김(5.10~9.30, 마른김·700톤·20%→0, 조미김 125톤·8%→0)

** 냉동고등어 소비자가격(마리) : ('23.1~6월) 4,423원 → ('24.1~6월) 4,148원(△6.2%)
마른김 소비자가격(10장) : ('24.5~9월) 1,313원 → ('24.10~12.9) 1,384원(5.4%)

- 김 할당관세 수입업체의 재수출 방지, 원산지 표시 철저 등 할당관세 제도 **이행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노력**

* 김 가격 상승에 따라 할당관세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내수용으로만 사용(가공 후 재수출 불가) 조건하에 추천서 발급

○ (**일본 김 IQ 협상**) 김의 수출량 증가로 국내 김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국내 김 수급 상황과 수출 상황을 모두 고려한 '25년 김 IQ 쿼터 확보

* 우리 수출업계에 유리한 수요자 할당 비중 상향('24년 50.6%→ '25년 50.9%),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른김·김조제품 할당량 증량(75백만장씩 ⇧)

- 대일 김 입찰상담회를 **8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역대 최대 계약액***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김 수출시장 확보**

* ('22) 650억원→ ('23) 1,050억원→ ('24) 1,838억원(전년비 75%⇧)

○ (**수산협력**)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의 어촌 청소년 **현지 체험 5년 만에 재개**, 글로벌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과 어촌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학기준 완화, 추첨제 선발** 등 **제도 개선**

* (**개선**) ❶어학연수 취약계층 지원 확대(10% 우선선발), ❷우리 부 정책대상자 지원 강화(15% 우선선발), ❸선발시 어학기준 완화(공인어학성적 필수 ⇒ 대체어학강의 수료), ❹추첨제 선발방식 도입(성적순선발→ 기준 통과자 대상 추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 소통·확산노력도, 정책효과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기별 추진계획 개선·보완('25.3), 정책 소통·확산 방안 제고('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FTA, WTO 수산보조금 등 협상에서 수산업 이해 반영, 탄력관세 운용으로 물가 안정, 김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하여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27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Ⅲ-3-④)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ODA 확대**) 단순 물자 지원 위주에서 상대국 역량강화 및 국제 공동가치 실현 위주의 사업으로 **ODA 지원 확대('23년 대비 1.5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지원**[**]

* 해양수산 ODA 지원 규모 : ('23) 287억원, 30개 사업 → ('24) 436억원, 39개 사업

** 지역별 중점추진분야 : 아시아(수산양식기술 증진 해기인력양성), 태도국(기후변화 역량강화), 아프리카(영세, 여성 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 (**국제기구 협력**) FAO, GGGI 등 **다자협력 국제기구**와 **연계**한 **수산양식,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협력사업 확대 추진('23, 4개→'24, 6개[*])

* ('23) FAO·IUCN·IMO(국제해사기구)·PEMSEA(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 ('24) FAO·IUCN·IMO ·PEMSEA·GGGI(글러벌녹색성장기구)·WMU(세계해사대학)

- WMU와 개도국의 **IUU어업 근절 관련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FAO와 협력하여 부산을 아·태지역 **PSMA 교육 허브**로 육성[**]

* 태평양 개도국 공무원 대상 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개최('24.11.11.~.22, 피지) / ** **항만국 검색(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24~'26)**

○ (**ODA 추진체계 개선**) 사업 발굴·기획, 타당성 조사, 집행관리, 평가, 환류 등 **전주기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질적 성장 추진**

- **전문기관**(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센터)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점검 강**화, 객관적·전문적 있는 평가체계 등 구축

○ (**ODA 발굴**) **BADA 프로그램**[*]('24.6.4., 6.6) 및 **한-아프리카 국제협력 콘퍼런스**('24.6.5) 등을 통해 신규 ODA **발굴, 아프리카 연안 3개국**과 해양수산 **협력 MOU**를 **체결**하고, **'25년도 신규 ODA 사업** 예산 반영

* BADA(Best Achievements in oceans and fisheries oDA): 수원국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발굴

○ (**권역별 양자협력**) 미국, 일본, 아프리카, 아시아 등 권역별 교류·협력 강화로 글로벌 해양수산 협력체계 확대

- (**미국·일본**) 미국과 "**한-미 IUU 근절 협력 MOU**" 체결 및 일본과 **IUU 의심 선박 정보공유 및 항만국 검색** 협력 합의

- (**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 계기 **부대행사**를 **개최,** 탄자니아, 세이셸, 케냐와 **해양수산 협력 MOU 체결***(4건)

  * 한-탄자니아 청색경제 협력, 한-세이셸 수산양식, 한-케냐 해사, 수산협력(총 2건) MOU 체결('24.6)

- (**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세안 주요국**과 **해양수산 회의*** **개최·참석** 등을 통해 **유대관계** 및 **국제위상 강화**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24.3), 제4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24.6), 제2차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24.11), 제3차 한-필리핀 해양대화('24.11)

○ (**OOC**) '25년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개최 확정**으로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 국제규범 논의 주도를 통한 **우호적 국제사회 여론 조성** 및 해양 ESG 활동 홍보로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OOC(Our Ocean Conference) : 100여개국 정부, 400여개 NGO·기업, 국제기구 등 약 3,000명이 참여하는 고위급 국제회의(9차의 경우 10개국 정상, 40개국 장관 참석)

○ (**APEC**)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 확정('24.10), '25년 OOC와 연계 개최 및 APEC **해양장관회의 재개**를 추진

○ (**UNOC**) **UN회원국 합의**로 창설된 정상급 다자회의이자 세계 최대 해양회의인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추진**

  * 4차 UNOC 개최계획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24.7), UN총회에서 유치 공식화 및 교섭 활동 전개('24.9)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 소통·확산노력도, 정책효과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분기별 추진계획을 개선·보완('25.3)하고 정책 소통·확산 방안을 제고('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희의,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외국 정부와의 해양수산 분야 협의회 횟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해양수산 ODA 사업예산 성과지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기조로 인해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ODA 추진체계 개선, 신규 ODA 발굴·확대 등으로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28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상력 강화(Ⅲ-3-⑤)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제규범**) **지역수산기구**(RFMO)*에서 어업관리(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관리 강화 등에 관한 **우리나라 제안 총 23건 제출, 11건 채택**

* 특정 수역의 어업규범과 주요 어종 어획량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전세계 20여개)

- (**어업관리**) 참다랑어 어업 감시·감독·통제 조치에 대한 **사무국 보고 의무**, 옵서버의 어종별 **전재량**(선상간 어획물 이동량) **기록 의무** 등 신설

- (**해양환경**) **친환경**(생분해성) **FAD**(어류군집장치) **사용** 의무, 폐어구·유류·폐기물 등 **해상투기 금지**, 폐기물 **처리내역 기록** 의무 등 신설

○ (**전문역량 강화**) **협상 전문관** 대상으로 국제법, 통상, 수산자원 정책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대표단 협상력 강화**에 기여

○ (**국제 어획쿼터**) 주도적인 제안서 발의를 통해 국제 어획쿼터 약 5천톤 확보

- (**참다랑어**) 우리나라 연안의 참다랑어 회유 상황 등을 적극 설명, 협상하여 **우리나라 성어 쿼터 약 500톤 증가, 총 쿼터 1,219톤 확보***

* 전년(748톤) 대비 약 63% 증가

** '02~'4년 기준으로 쿼터 협상을 진행되어 참다랑어 대형어 어획한도가 그간 30톤에 불과하여 참다랑어가 어획되더라도 쿼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근해 선망, 정치망 업계 애로 해소

- (**이빨고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제안서 및 추진계획 등 8건의 문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나라 이빨고기 **최다 입어척수**(10개국 30척 중 우리나라 10척) 및 **쿼터 200톤 추가** 확보

○ (**정책소통**) 주요 국제수산기구 **회의 전 사전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향 수립 및 제안서 마련

- 국제수산기구 회의 종료 후 **결과설명회**를 진행하여 유관기관 관심사항, 조치 제·개정 내용 등을 안내하고 원양선사에 설명 국문본·비교표 제공, 발효일자 알림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

○ (**국제회의 유치**) **남인도양수산위원회(SIOFA) 국내 개최**(서울, 6월)로 불법 어업 근절 및 남인도양 수산자원(이빨고기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크릴 관리 심포지엄**(인천, 7월) 개최로 해양보호구역-크릴 어업 간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논의에 기여



<SIOFA 회의 국내 개최 1>


<SIOFA 회의 국내 개최 2>


<크릴 심포지엄 국내 개최>

○ (**영향력 확대**) **6개 기구***에서 총회 및 하부위원회 **의장·부의장**으로 활동하여, 우리나라 대표단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

* ('24.12월 기준) SPRFMO·IOTC·SIOFA 총회 의장, NPFC 총회 부의장, SEAFO 이행위 의장, WCPFC 기술이행위 부의장

- **CCAMLR 크릴 관리 심포지엄**(인천, 7월)에서 미국과 **공동의장직**을 수행하여 남극 크릴 관리 논의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획쿼터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주요 국제수산기구 참여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였으나, 해수부 누리집을 통한 정책자료를 제공 실적이 없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미만.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국제수산기구 제안서 제출 비율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국제협상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 참여율 성과지표는 필수교육 중 일부를 미이수해 목표치를 거의 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참다랑어, 이빨고기 쿼터 확보, 원양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수산분야 국제협상력 강화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29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Ⅲ-4-①)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폐기물**) **관계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발생원별(육상기인, 해상기인) 발생예방, 수거 등 전주기 관리체계 정착 및 대응역량 확충

- (**발생예방**) **하천**을 통한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저감**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력* 강화, 해상기인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 관리대책**** 마련(9.26)

* 재해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12.12), 주요 하천 권역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협의체 운영, 해양폐기물관리위 하천쓰레기 분과위 개최 등

** 어구보증금제 확대,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불법어구 즉시 철거 등

- (**수거·처리**) 항만구역 등 국가관할 해역의 부유 및 침적폐기물 **총 10,623톤 수거, 방파제 구역**(테트라포드) 등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일제수거 **시범사업**(제주권역)을 통해 **방치폐기물 약 83톤 수거**

* 한림·제주항('24.5~6, 52톤), 애월·서귀포·성산포항('24.11~12, 31톤)

- (**재활용**) 선박에서 사용한 **폐로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집하장***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 ('24) 부산신항·목포항 2개소 → ('25) 인천·군산·광양항 3개소 추가 운영

** (사례) PE재질의 선박 폐로프를 재생원료로 가공, 에어캡 포장재로 업사이클링

- (**협업거버넌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등 정례화된 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관 협업체계 공고화**

○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해양자원 이용·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개발의 **다양성·복잡성** 등을 고려, **전문성·공정성**을 **강화**

- **평가대행자 선정 위탁*, 평가항목 사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등 마련을 추진

* 사업자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해양환경 조사·분석기업)를 선정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통해 평가항목을 사업유형·대상지역에 맞게 중점 평가, 평가제외 등으로 사전에 조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규칙 8종(①평가서·②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③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④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 규정, ⑤평가대행 비용산정 기준, 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⑦평가 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 ⑧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미세플라스틱**)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지구를 순환하는 과정을 최초로 밝힌 과학적 조사 결과를 제시, SCI급 학술지 게재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 '22~'26

○ (**오염퇴적물**) 오염퇴적물 정화사업*(3개 해역) 실시 및 **원인자부담 원칙 시범사례 발굴** 등 새로운 방식의 해양환경 위해요인 제거방안 구축

* 부산북항(4년차/5년), 울산 온산항(1년차/4년), 포항구항(1년차/3년)

- 오염원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원인자 부담원칙 시범 적용사례를 발굴(거제 옥포항), **오염원인자의 자발적 정화 유도**(11.20, 추진계획서 제출)

○ (**선저폐수**) 선저폐수를 수거·처리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12.31)평택·통영 및 착공(12월)군산·서귀포,

- 유창청소 오염물 등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신규 수요**에 대응하여 항만내 **민간시설 개방 설치 기준 마련**

○ (**괭생이모자반**) 유입상황 관측 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5.2~7.1)하여 **총 957톤** 수거·처리, 지자체·해경청·수과원·조사원 등이 참여하는 **모의 가상훈련** 실시(11.27~29) 등을 통해 대응능력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보완 필요,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위과제인 주요정책과제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 추진계획 작성(~'25.5) 및 법령 제·개정 완료 건수 등으로 대표성 있게 성과지표를 보완 (~'25.5)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해양쓰레기 수거량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거의 달성* * 목표치 중 하위법령 제·개정은 완료했으나, 행정규칙 제·개정은 법제처 심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내부 방침결정까지 완료해 일부 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 정착,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이용 여건을 확보해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30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환경안전망 구축(Ⅲ-4-②)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방사능 감시**) 해양방사능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 정점**을 127→**165개로 확대***

* (23년) 남해·서해남부·제주 등 5개권역(75개) → **(24년) 23년 + 동·서해 등 9개 권역(105개)**

- **긴급조사 대상**을 동·서해 포함 **전 해역**으로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8개 정점)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10개 정점) 조사 실시

○ (**해양오염 관리**) 새만금 이차전지 배출수 **해양방류** 추진(새만금청)에 따라 **국장급 정책협의회**(6.19, 환경부)를 구성, **배출수 관리 제도** 등을 정비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진행 상황 **상시 소통**

○ (**침몰선박 관리**) 최초로 **항공드론**을 침몰선박 실태 조사에 **활용, 총 164척**의 침몰선박 **위치조사 완료**(전년대비 126.6%↑)

* 조사척수 : (19~21) 각 5척 → (22) 15 → (23) 12 → **(24) 164(조사선 14 + 드론 150)**

○ (**잔존유 제거**) 현장조사 및 위해도 평가를 통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선박 2척의 잔존유를 확인**하고, **77.8㎘ 제거(7.23 / 누적 8척 완료)**

○ (**대규모 훈련 확대**)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 강화 훈련** 확대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 대폭 향상

- 행안부, 해경청, 민간 방제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합동훈련(6회, 전년대비 100%↑), 악천후 훈련(4회, 전년比 100%↑), 해양사고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출동 **단계별 선박 행동요령*** **마련**

* 엔담호 기술운영 매뉴얼 개정(6.7): 준설구역 축소(동서남해→남해권 限)로 국내 36시간 방제대응

○ (**안전점검**) **해양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름저장시설부터 해수 취·배수시설, 유어장 등 소규모 시설까지 **안전점검 확대**(6.7~7.31, 1,242개소)

* 일정규모 이상 기름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등 286개소(23) → 전체 해양시설 1,242개소(24)

○ (**연안하구**) 낙동강 부근 연안하구역 생태계 모니터링 **현장의견 수렴** 및 연구 **현장 점검**(8.30)을 통해 **하구역 환경**·생태변화 **대응정책 수립 기반** 구축 및 최종보고서 공유를 통해 관련업무 지원

○ (**환경관리해역**)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정된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4차('24~'28)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3.29)

○ (**연안오염총량관리**) 개발계획 관리, 오염물질 삭감사업 추진 등 **지자체**의 **총량관리 계획 이행 여부 점검, 실효적인 관리** 지속

* 특별관리해역 중 오염이 심한 해역(울산, 부산, 마산, 시화호)에 대해 배출오염물질 총량규제

○ (**해양오염사전조치**) 장기 계류·방치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 대상 **긴급조사 근거**를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11.28)

○ (**제도개선**) **환경관리해역제도 활성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유지 요건** 등 해양환경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마련('24.12)

○ (**데이터 확대**)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해양방사능분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양방사능 관련 자료**(해수욕장, 선박평형수 분석 결과 등) **확대** 제공,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결과 DB 등 **신규 구축**

- **국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모바일웹 기반 해양환경정보 지도 서비스** 구축(10.31)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모바일 환경에서 해양환경정보지도 이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

○ (**해양환경교육**) **일반인 대상 실시간 특강** 운영(8회),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수족관근무자 교육(최초) 등 법정교육 과정 **온라인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 **이동교실 차량**(4대)을 활용하여 **소외지역 특별교육**(도서·벽지) 및 **주요 해양 관련 행사** 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환경교육박람회,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 등 주요행사 지원(15회, 전년대비 50%↑)

○ (**초미세먼지 저감**) 선박 **저속운항**, **운행차량 제한** 등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 추진,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하락**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역량 강화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국내 관할해역, 일본 근해, 태평양 도서국 해역까지 방사능 감시영역을 넓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매우우수함

31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Ⅲ-4-③)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관할구역 획정**)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양관할구역획정법」 제정 추진

○ (**해상풍력특별법**)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을 방지하고, 수산업 보호방안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안) 발의('24.11월, 의원발의)

- 국가 주도 **계획입지, 해양환경성 검토** 강화, **어업인 이익공유** 등을 반영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산업부 등)와 **적극 대응***

* ①계획입지(해수부·산업부), ②환경성 검토(육상-환경부, 해양-해수부 검토), ③어업인 이익공유 우대, 수산업 영향조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수부) 등

○ (**어업인 소통**) 해상풍력 사업 지역에서 **어업인 반대시위** 등 **갈등 빈번**, 어업인과의 **소통 횟수·경로**를 **확대**하여 해상풍력 추진으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

* 해상풍력 난개발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생태계 피해에 대한 어업인 우려

- (**민관협의회 구성 협의**)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구성*** 시 업종을 대표하는 **지역수협·어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지자체 협의****

*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 설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업부에서 집적화단지를 선정하며, 어업인 등 포함된 민관협의회 구성 필수

** 이미 구성이 완료된 2개지역(전북 서남권('20.9), 전남 신안('23.10)) 외에, 추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해 충남 태안('24.8), 전남 여수('24.9) 협의

- (**TF, 간담회 개최**) **차관 주재 TF, 어업인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수산업계** 등의 **의견 반영** 채널 확대

* TF(3회 / 2.7, 3.12, 10.11) / 간담회(5회 / 3.5, 6.28, 7.18, 8.27, 11.25)

○ (**해양공간 이용질서**) **국가 주도**의 **공유수면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자체·지방청의 철저한 공유수면 관리를 **정책적으로 지원**

* (1단계, '23) 경기·인천·충청 → (2단계, '24) 전라·남해 → (3단계, '25) 부산·동해안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사후 관리하여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기여**

○ (**제도 개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 해양이용·개발행위 시 이해관계 조정 체계 검토 연구('24.9~'25.2) 추진 중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약 3개월 단축**하여 **사업 조기 추진 지원**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기존 공정을 탄소배출 없는 수소환원 제철 설비로 전환하는 정부 중점 친환경 추진사업을 적극 지원 / ** 포항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용지(135만㎡) 조성사업'

○ (**수요 맞춤형 데이터**)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적극 수집·분석·제공하는 One-stop 데이터 제공창구 구축·운영(3~12월)

- 해양개발 사업 사전협의·허가 및 해양환경 관측·예측 정보 등을 융합한 표준DB 구축·제공을 통해 **정책*** 및 **민간산업**** 활동 지원

* 사전 협의절차 누락 여부 파악, 중요 검토 대상사업 사전파악·대응
** 사업 예정지 해양환경·생태 현황, 기존 인허가 및 규제현황을 활용한 입지 적정성 판단

○ (**선도 기술개발**) 3차원 기반의 해양정책 영향예측 및 대국민 서비스 기술(디지털 트윈) 개발을 추진하여 **해양 환경요소**(수온, 해수 유동 등) 및 **지형**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를 **국내 표준*** 등록 완료(12.6)

* '3차원 해양공간 데이터구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번호 TTAK.KO.10.1507)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성과지표 부합도 및 상대적으로 저조한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연안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실시('25년 연중)

○ 부서차원 미션·비전을 재정립하여 과제 목표와 연관성이 높고,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검토·반영(~'25.5)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협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다만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부진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법령제정 관련 불확실성이 높고 해양관할구역 경계 획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종합적 정책효과는 보통. 공유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등의 향후 기대효과 우수

32	해양자산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Ⅲ-4-④)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최초 수립**(4.18.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추진기반 마련**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계조사 기본 플랫폼으로써 전국 해역 대상 연안·갯벌·암반·바닷새 10년 자료 축적('15~'24, 격년 5주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조사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

* 11.21(군산, 금강하구), 11.22(포항, 영일만) / 지자체, 지역연구소, 지역대학 등 참여

○ (**UN생물다양성협약**) **제4차 SOI***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로 지역 해양 및 수산기구 협력의 장을 마련

* Sustainable Ocean Initiative :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로 격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4년 제4차 회의 개최

** 6.11.~14. / 서울 / CBD, FAO, UNEP, 기타 국제기구, 지역해양기구 및 수산기구 등 국외 60여기관 참석

○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3개소(여수갯벌, 호미반도, 무안갯벌) 신규·확대 지정

○ (**갯벌세계유산 통합관리**) 5개 지자체*에 걸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21.7등재)」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신안)' 설계용역 진행 중('23.12~)

*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 세계유산등재기준의 모니터링 및 지속적 달성을 위해 '**유산지역 내 바닷새 모니터링' 용역 등 추진**('24.7~)하여 **데이터베이스 확보**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연계하여 **해양생태·문화 거점으로서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11.1)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지역을 중심으로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24.11.~12.)

* 갯벌 패션쇼(고창), 갯벌 세계유산 홍보관 운영(서울), 갯벌 가족캠프 운영(서천)

○ (**갯벌복원사업 확대**) 갯벌복원사업 신규 대상지(8개소*)를 발굴('24.7)하고 갯벌복원 신유형으로 '철새서식지복원형' 도입 및 관련자 교육* 실시

* 신규대상지 복원규모 : 염습지 조성 1.18㎢, 갯벌 복원 2.6㎢
**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공무원, NGO 등 교육(9.4~6)

○ (**블루카본 연구·협력 강화**) 신규 블루카본(해조류, 비식생갯벌 등) 등재를 위해 국제행사(회의)*에 관련 내용 의제화,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공동연구' 국제 심포지엄 개최('24.10)를 통해 해조류의 블루카본 활용방안 모색

* IPCC Scoping Meeting for CDR'('24.10.), UNFCCC COP29('24.11.) 등

○ (**해양생물 인공증식**)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전을 위해 인공증식에 성공한 바다거북(4개체), 남방방게*(300개체), 산호류**(300개체)를 방류

* 세계 최초로 남방방게의 2세대 인공증식 기술 개발
** 유성생식 기술을 적용하여 산호류(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에 성공

○ (**구조·치료 활동 강화**) 바다거북(4개체), 폐어구 피해를 입은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2개체) 등 **총 37개체/5종***을 구조·치료

* 구조 28개체·인공증식 9개체 방류(고래류4,기각류4,바다거북류15,어류및기타14)

○ (**수족관 관리 강화**) 수족관 **허가제 전환**('23.12)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검사관·의무 교육** 도입 및 **업무처리지침** 배포(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국민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복원, 해양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토대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균형달성 등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33	해양 기후변화 대응 강화(Ⅲ-4-⑤)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전담조직**) ‘**기후환경국제전략팀**’ **신설**(1.2), 기후변화 감시예측, 국가온실가스 통계산정, 탄소중립 이행, 국제협력 강화 등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정책 종합·조정을 통해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추진

○ (**감축목표 관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의 **’23년 추진성과 점검·관리**

* 해양수산분야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120만톤(’18년 대비 70% 감축)

○ (**온실가스 통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조사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 및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 2022년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3,713천톤 CO2-eq로 전년대비 3.6% 감소

- 연안습지부문 비식생 연안습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 연구·개발

○ (**정책소통**) **기후변화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전문가와 **해양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5.29)

○ (**제도기반 마련**)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정·시행**(해수부·기상청 공동, 10.25)으로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감시예측 기반 마련**

○ (**추진계획**)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해양·극지 감시예측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추진계획 수립**(12.27)

* 3대 전략(①감시, ②예측, ③공동활용·거버넌스) 및 10대 과제로 구성

○ (**협력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 효율성 확보**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4.19)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후요소별 담당기관*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대표정보**를 **통합생산**(1~3개월 정보)하는 방안 마련

* **국립수산과학원** : 해수온, 염분, 영양염(질산염), 엽록소a, 일차생산력, 동물플랑크톤 / **국립해양조사원** : 해수면, 해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파랑, 해빙, 엘니뇨 등

○ (**기후변화 시나리오**) 장기적인 미래 해양 기후정책 수립에 필요한 **우리나라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1983~2100년) **제작 추진**, 해수온, 염분, 영양염, pH 등 10여종에 대한 예측모델 개발 및 정보 생산

* 단계적 추진 : ('24) 과거 30년치 재현자료 생산, ('25~'26) 2100년까지 전망 생산

○ (**온실가스 국내감축**)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외부사업 기술컨설팅 제공** 및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의 의무감축 관리·지원**

*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굴패각 재활용) 및 설명회 개최 등 기술컨설팅 제공(5건),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안내교육 등 기술컨설팅 제공(5건) 및 목표관리제 예비관리업체(16개) 지정·관리(6.20)

○ (**온실가스 국제감축***) 국제감축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기업 대상 **사업발굴 예비타당성조사 지원**(3건)** 등

* 국내 기업이 국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수행(국내 NDC 달성에 기여)

** 이집트 맹그로브 복원사업, 인니 양식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베트남 어항 지붕 태양광 설치사업

○ (**CCS**)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CO_2를 해저에 저장하거나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해수부·과기부·산업부 공동, 2.6) 및 하위법령안 마련(10.10일 입법예고, '25.2월 시행 예정)

- 실증사업 관련 **CO_2 누출 등 해양환경 평가·감시** 기술개발 및 **CO_2 수송-주입 복합기능선박** 기술개발 추진

○ (**국제협력**) **COP29***에 참여해 국제기구, 미국, 싱가포르 등과 협력하여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양 기후변화 협력 방안** 논의**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아제르바이잔 바쿠/11.11~22)

** **갯벌·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필요성 공론화**('25.3. IPCC 총회에서 신규 블루카본 방법론 작성 여부 상정 예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양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및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 정책 지속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포럼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해양수산부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법률, 조직, 감시예측체계를 개선하여 '24년도 종합적 정책효과는 보통.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측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향후 기대효과 우수

34	어촌·어항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Ⅳ-1-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연안·어촌 톡(Talk)」) **해수부장관**과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귀어인,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기탄없이 **연안**과 **어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3회)

* 제1차 남해권 돌아오는 연·어 토크콘서트(2.28, 경남 통영) : 귀어귀촌 확대
제3차 서해권 돈이되는 연·어 토크콘서트(4.18, 전남 신안) : 수산업 부가가치 제고
제4차 함께만든 연·어 토크콘서트(6.20, 부산)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발표

⇒ 연어톡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85개)*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5.13.)하고, 청년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타파**하는 등 **차별화**된 **어촌정착 지원**

* ①주거 여건 취약, ②어업면허 신규 취득 제약, ③엄격한 어촌계 가입 자격조건 등

○ (**귀어 통계**) '17년부터 추진해 온 **귀어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11.5, 승인번호-146009) 받아 **공신력** 및 **활용도 제고**

○ (**어촌대회**) 29개국 어촌공동체가 참여하는 **세계 어촌대회**('24.12)를 개최하여 인구소멸, 기후위기 등 **전세계 어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논의

○ (**주거지원**) 귀어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귀어인의집*) **18개소**를 **운영**하고, **귀어인 544명**의 **창업·주택구입 융자 금리 인하**(2→1.5%)

* 10평 내외의 1인용 임시 주거시설('24, 18개소)

○ (**직장인 귀어교육**) 도시에서 귀어를 고민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주말 귀어 탐색과정**'을 **신규**로 **개설**해 **예비 귀어인 지원**('24~)

* 이론교육과 현장체험을 한꺼번에 교육하여 수료생 만족도 높음(4.95점, 5점 만점), 총42명 수료

○ (**귀어학교**) 수산업 교육을 제공하는 **귀어학교 추가 개설**, 수산물 **유통·가공과정 신설** 및 **교육기간 확대** 등 교육과정도 확대

* (귀어학교) ('23) 7개소→ ('24) 8개소, 인천 / (교육기간) ('23) 4~6주 → ('24) 5~9주

○ (**기초생계 지원**) 귀어초기 고정적 수입이 없는 귀어인의 정착지원을 위해 **청년어업인정착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원조건**도 **완화****

* 청년어업인정착금지원규모 : ('23) 227명 → ('24) 290명 → ('25) 355명 확대 예정
** 어한기 어업·양식업 외 경제활동 가능 기간 확대 : ('23) 3개월 → ('24) 6개

○ (**숙박 특화**)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개발('24.6.)하고, 표준관리매뉴얼, 어메니티·인테리어 등을 표준화('24.6.)하여 **숙박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 (**어촌관광**) **스탬프투어, 漁케이션 등** 어촌이 가진 자연조건과 특색있는 체험거리를 접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홍보하여 11월 기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소득 204억원** 달성

○ (**어업유산**) 어업유산 **3개소***를 신규지정(12.6.)해 총**16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유 및 지원, **해녀어업유산**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국해녀협회 창립지원** 등 어업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발전 토대 마련

* 강릉 창경바리어업, 삼천포 죽방렴어업, 광천 토굴새우젓가공업

○ (**어항 조성**)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10개항)***의 **선정**을 통해 **수산업 기반시설** 및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중심**의 **국가어항 조성**

* 삽진항(전남 목포), 율포항(전남 보성), 가력항(전북 부안), 대명항(경기 김포), 북신항(경남 통영), 생낌항(전남 신안), 방아머리항(경기 안산), 전곡제부항(경기 화성), 하리항(부산 영도), 유계항(경남 거제)

- **수산·관광·레저** 기능과 **지역 특색**을 갖춘 **다기능어항** 개발 등 **지역사업과 연계**한 기존 **어항시설 정비** 및 **개발 추진**

○ (**어항 관리**) 국가(지방)어항에서 **20,497톤**의 **부유·침적폐기물** 및 **항행 장애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어항 조성** 및 **어선 통항안전 확보**

- 인력 중심의 어항관리체계의 한계 극복 및 효율성·정확도 향상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어항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추진

* 드론을 활용한 어항 시설물의 3D관리모델 해역별 3개항 시범구현 완료('24.8월)
** 대상항(3개 항) : 무창포항(서해), 호미곶항(동해), 다대포항(남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조성 등의 추진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연어톡, 어촌관광, 귀어학교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

35	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기반 확보(Ⅳ-1-②)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접안시설 확충**, 선착장 **주변 항포구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접근성 대폭 개선**

*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누적) : ('19) 27개 → ('20) 60개 → ('21) 71개 → ('22) 77개

- 제주한림-비양도 어항 노후화로 이동으로 불편, **접안시설 개선(50m)** 등으로 인한 **여객이용객 증대**(44.1%)효과

* (여객이용객) ('19) 170,539명 → ('23) 245,736명(44.1%) 증가

○ (**여객편의 증진**)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개선해 국민들의 **해상교통 이용 편익 증진**

* 주요여객선 이용객수(45개소): ('19) 226만명 → ('23) 254만명
** 여객복합시설(누적) : ('19) 18개 → ('20) 48개 → ('21) 57개 → ('22) 63개

-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 사량도 여객선터미널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성을 개선***하여 **이용객수 증가(22.7%) 효과***

* 여객선 이용객수 : ('19년, 사업 전) 243,168명 → ('23년, 사업 후) 298,316명(22.7%증가)

○ (**매력성 제고**) 경관개선, 친수시설·관광시설 조성 등 어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어촌뉴딜 완료지역 135개소 **관광객 669만명 증가***

* 유동인구수(만명, 완공 135개소) : ('19) 92,645천명 → ('23) 99,332천명(7.2% 증가)

- 여객선 편의시설 개선, 스토리텔링 등 **접근성 및 집객력**을 **강화**하여 **섬 어촌 관광객 1.8%* 유입 증가**

* 섬지역(완공지 33개소) 관광객수 : ('19) 11,452천명 → ('23) 11,658천명(206천명)

○ (**소득사업**) 다양한 어촌 관광자원을 **활용**해 **해양수산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4개* 소득사업에서 신규 **일자리 35개, 소득 14.3억원** 창출

* 경주 나정항, 경주 연동항, 순천 화포항, 부산 하단항

○ (**특화지원**) 전국 10개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한 **전문가 컨설팅, 마을 브랜드·특화상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 전남, 경남, 강원, 충남, 부산, 인천, 경기, 전북, 경북, 제주

○ (**재해·안전**) 상습 월파 및 태풍 피해 지역[*]에 월파방지 시설 등 안전 시설을 보강하여 금년도 태풍('24.8 종다리) 등과 같은 **대형 태풍 내습**과 같은 **악천후** 시에도 **'無 피해', 재해에도 안전한 마을 조성**

* 경주 수렴항, 경주 연동항, 여수 죽포항, 제주 하예항

○ (**어업 안전·효율 개선**) 노후화되어 어업안전을 위협하거나, 부족한 작업 시설 보완 등 **어항 작업 안전성 개선 및 효율 증대**

- 영광 법성포항 부유식 계류시설을 보강하여 간조시 어선의 갯벌 좌초 문제 해결, 작업시간 단축, 출어기회 확대

○ (**어촌·어항재생**) 집행률 제고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개선[*], 사업관리 우수지자체 선정(6개소) 등 맞춤형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집행신호등 개편 및 사업부진 지자체의 신규사업 신청 개소 수 제한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3.28)

- 방문인증 이벤트, 인플루언서 협업 등 **SNS를 활용한 다방면 홍보를 통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방문**을 **유도**

○ (**어촌신활력**)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4년도 대상지 **33개소 선정**(3.20)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지의** 성과관리, 성과효과 분석,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

*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24년 1차년도 성과평가(98개소)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시, 지역활력타운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어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지원, 특화지원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하나 투입노력에 비해 제시된 성과가 다소 일반적임

36	어업인의 생활·복지 지원 강화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Ⅳ-1-③)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어선원보험**) **산재보험** 성격인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전체 어선으로 확대**(현재 3톤 이상) 추진, 3톤 미만 선주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국비 지원(70%) 등을 병행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12.3.)

○ (**양식보험**) 하절기 양식어업 **고수온 피해 보상에 총력 대응**

- (**보험금 선지급**) 어업인 신청 시 피해 조사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여 양식업 피해복구 신속 지원

- (**가입기한 연장**) 고수온 취약 품목 **가입 기한 연장**(7.1.→7.8.), SMS 등을 통한 양식어가 개별 안내(약 1.8만 건) 등 결과 고수온 보장 가입 건수 21% 증가 : '23 1,361건, 18.4%→'24.9. 1,650건, 22.4%

- (**품목 확대**) 전복종자·향어·메기 **고수온 보장을 신규 도입**, '**보급형 상품***' 도입(멍게), **방어·흰다리새우** 신규 보험 도입(28→30개 품목)

* 보험료를 할인하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영세어가 가입 유도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서류 **7개 국어 번역*** 등을 통해 외국인 가입 60% 증가('23.9. 1,667 → '24.9. 2,667건), **가입 연령 확대**(87 → 90세)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중국어 등

○ (**외국인력 공급**)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업분야 외국인력** 쿼터를 **약 30% 확대**('23 12,663명→'24 16,461명)하여 어촌지역 일손 부족 완화

* (고용허가제, E-9) '23 7,620 → '24 10,000명 / (계절근로제, E-8) '23 5,043 → '24 6,461명

-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4.12.), **제1차 어업고용인력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24.8.~) 등 어업분야 외국인력 **관리 체계 정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24.2. 시행)」에 따라 공모, '수협중앙회'를 지정 → 기본·시행 계획 수립, 실태조사, 외국인력 활용 지원(수요조사) 등 지원 업무 담당

○ **(어(촌)복(지)버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섬·어촌 어업인 대상** 의료, 생활, 행정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시행**(3~5월)

* (비대면의료) 20개 섬 294명, (이미용·목욕) 20개 섬 334명, (노무·세무) 10개 어촌계 161명

○ **(비대면 섬 닥터)** 섬·도서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7.19) 후 **"비대면 섬 닥터"** 대상 확대* **추진****(8~12월)

* 어업인 삶의 질 개선 사업 부재 → 어복버스 시범사업(섬 20개) → 비대면 섬 닥터 본사업(섬 100개)

** 실적 : **전국 86개 섬 1,136명 진료**('24.12.06.기준)

○ **(건강관리)** 어촌(낙도)지역 등 **의료지원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추진, **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 확대 추진

- 일회성이 아닌 **'마을형 건강관리 지도자'** 양성으로 **고령어업인** 대상 신체활동 증진 교육(보행, 근력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 **(건강검진) 맨손·나잠어업 종사**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질병발생률: 여 53.5%, 남 42.5%) 검진을 위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추진

- **검진병원 2.5배** 확대('23. 12개소 → '24. 29개소), **병원선 검진도입, 찾아가는 검진버스 운영 등을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 **(어업활동 인력 지원)** 지자체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대체 **일손 지원**(연간 3,600명)

* 1일 기준 최대 8만원 지원 / 연간 최대 30일 지원(단, 임신·출산 등은 최대 60일 지원)

○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어촌지역 외국인력 증가 속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어촌 이탈을 방지하여 어업인 고용안정 도모

○ **(건강·연금보험)** 어업인 **건강보험료**(최대 28%)·**연금보험료**(월 최대 4.6만원)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어촌사회 안전망 확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의료 등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복버스, 비대면 섬닥터 등 적은 예산으로 민생현안 해결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 매우우수, 향후 기대효과 우수

37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Ⅳ-1-④)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직불금 지원 확대**) 전체 직불금 **지원규모**를 **129억원**(전년대비 14%↑)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24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 단가 인상, 수산자원보호 직불 지원 어선척수 증대 등 **직불금 지원규모 확대**('23. 933→'24. 1,062억원, 14%↑)

• (**소규모어가·어선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영세한 어업인 및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23. 120 → '24. 130만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 개정('24.1)

• (**수산자원보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보호 정책**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 대상 어종·업종에 대해 어기별 어획한도량을 설정·운영하여 적정 수산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제도
** 예산규모: ('23) 119억원 → ('24) 152억원(28%↑)

○ (**제도개선**)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을 '어촌'으로 인정**하여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편입**(「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 개정, '24.10)

* (당초)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제외 → (**개선**) 상·공업지역이라도 어항 근처에 거주시 지원
** 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을 통해 영세 어업인 372명(5억원)에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 또한, 전년도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지급 기준 개선**

○ (**진입장벽 완화**) 기존의 조업일수 기준 및 참여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수산자원보호 제도 참여 유도**

- TAC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경우 **조업일수 기준**(60일→**30일 이상**)을 **완화**, 어선세력이 부족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해 **단체구성 요건**을 **완화**(근해10척, 연안20척 이상 →**근해 5척, 연안 10척**)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 개정('24.1)

○ (**홍보 강화**) **우리부 자체 홍보**와 **관계기관**(지자체, 수협, 선원노련 등) **연계 홍보**를 병행하여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관련 홍보 노출 확대

○ (**맞춤형서비스**) 기존의 직불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맞춤형 간편서비스 구축**으로 **직불금 신청·접수 체계 개선**

- 신기술(AI 등)을 적용하여 **어업인 정보**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직불금 사전 안내, 제출서류 제로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 (**민간개방**)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한 출입항신고 및 승선자명부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우리부 낚시 시스템**(낚시海)의 **민간 개방 확대 추진****

* 어복황제('23.8~), 선상24시('23.1~), 피싱노트('21.1~), 더피싱('20.8~), NICE('25.3~)

** 우리부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을 OPEN API방식으로 개방하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낚시 예약 앱·웹에서 정보연계·활용

- 민간앱 서비스 개방 확대(4개→5개)를 통해 **접근성**을 **증대**하고, 전자신분증과 연계하여 승선객의 실물 **신분증 확인절차 간소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 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가 소득 기반 강화 등 과제 목표 내용을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25.5.)

○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으로 정책효과 개선·보완('25.1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설명회,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직불제 지원확대, 진입장벽 완화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 보통, 향후 기대효과 우수.

38	연안해운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Ⅳ-1-⑤)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외도서 제로화**) 여객선, 도선 등이 들어가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 14개소**에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24년 신규 4개소 추진)

○ (**운임지원**) **최대 7천원**으로 섬-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 **차량운임**은 **20~50% 지원**(비영업용 차량 대상)

○ (**생활필수품 운송지원**)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기초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필수품**(유류·LPG 등) **해상운송비 지원**(약 6만명)

○ (**추가 택배비 지원**) 택배요금 부담이 높은 **섬 지역 주민**(제주도 등 322개 도서, 77만명)을 대상으로 **육지 대비 추가**되는 **배송비**(3천원 또는 실비)를 **지원**(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 (**여객 편의 증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상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개발·제공**('24.12)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관광객 등** 편의 제고

*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까지 실시간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

○ (**운영방식 개편**) 現 29개 국가보조항로의 **항로단절 방지** 및 **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 추진('25년 신규 예산 4.4억원 반영)

- 민간 선사가 **안전·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국고여객선 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25년)

○ (**국고여객선 관리**) **신규 국고여객선 건조**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설비 1,324개소**를 교체하여 **이용객 편의 제고**

- 신규 보조항로 지정 시 **사전에 항로 여건/주민 의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적합한 선박**이 **적기에** 건조되도록 **제도 개선**

○ (**편의 개선**) 보조항로 "**도초-우이**", "**군산-연도**"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 등을 통해 **연간 2만 6천명**의 **이동 시간/화물 선적** 등 불편 해소

* 기존 선사의 여객선 매각으로 사치도(43가구 74명) 기항 여객선 단절('24.1.21~), 신안군 행정선(1일 6회 왕복)은 차량·농기계 운송 불가→ 섬사랑6호를 기항하여 단절 극복

○ (**안전 점검**) **연 5회 특별점검**으로 **개선 필요사항 1,151건** 발굴 및 **100% 조치** 완료, 선령 20년 이상 선박 **24척 현장 밀착 점검** 추진

○ (**안전문화 확산**) **9개 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 대상 **캠페인** 추진, **여객선 관리·감독자 245명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안전의식 내재화**

○ (**전기차 화재 대응**) 전기차 수송 관련 **선사/이용객 불안 해소**를 위해 **종합대책 수립** 및 **현장 정착 관리**(부서간 협업과제)

○ (**모니터링 강화**) 여객선 **운항 예측 정보** 제공 서비스 '**내일의 운항예보***' 확대개편(54개 항로→**101개 항로**), **수중드론 운용**으로 사고 예방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가 지역별 바다 날씨와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 선박 정비 일정 등 상황자료를 분석해 다음 날 운항 여부를 예측,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23.8~)

○ (**선박 현대화**) 선사 영세성·수익성 부족 등으로 안전투자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선박 현대화 추진**

* 평균선령: ('16) 12.7년 → ('24) 12.3년, 20년 이상 선박비율: ('16) 27.5% → ('24) 23.2%

○ (**교통약자 편의 확대**)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확충지원***을 통해 노약자 등이 많은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 해소**

* ('21년) 설치율 16%(26척 설치) → ('22년) 52%(46척 설치) → ('23년) 91%(155척 중 141척 설치 예정)

○ (**준공영제 확대**) 민간선사가 운영 중인 **일반항로의 단절 방지**를 위해 연속 적자항로 대상 적자 만회계획 평가를 전제로 **운항**

- 백령-인천, 가거도-목포 항로를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선정하여 도서민 해상교통권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노력이 정책효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다소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함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 이행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회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는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율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운항 통제일 증가로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거의 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네이버 지도상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 개발·제공, 소외도서 제로화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39	수산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체계 고도화(Ⅳ-2-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어업관리체계 전환**) 과학적인 수산자원 평가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관리 대상을 **연근해 어업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7월~)

* **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업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어획가능한 총량을 설정

- '24년 연근해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하고 '28년부터 전 어선 적용, 근해중심의 TAC를 **연안어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TAC 관리 세분화**(준비-연습-정착) 등 고도화된 TAC 시행계획 수립('24.7)

* ('23) 근해어선 위주 적용 / 15개 어종, 17업종 → ('24) 일부 연안어선까지 확대 (붉은 대게, 꽃게), 고등어 다년제 TAC 등 / 16개 어종, 19개 업종

○ (**TAC 고도화**) 어종, 업종(연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년제 TAC 운영(고등어) 및 어기변경(꽃게)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개선**

○ (**자원조사 확대**) 기존 근해 중심의 **수산 자원조사**를 **연안 전 해역**으로까지 **확대***('24.1)하여 과학적 자원관리 체계 기반 구축

* ('23) 근해 500개 정점 → ('24) 연안 400개 정점까지 추가하여 총 900개 정점

- 첨단 과학조사장비와 탄소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수산자원조사선 2척**(탐구 2·8호)을 대체건조하여 조사역량 강화

○ (**자원평가 고도화**) 자원평가 주요 **대상종을 확대**('23년 65 → '24년 70종)하고, 생태계 변화까지 고려한 **자원평가 모델**로 **해역별 심층평가*** 확대

* ('22) 동해권역 → ('23) 남해·제주권역 → ('24) 서해권역 → ('25) 한국 근해 전체

- **첨단 탐지기술***로 주요 회유성 어류(멸치·고등어)의 연속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을 추적하고, 디지털 기반 전망으로 **자원평가 신뢰도 향상**

* 과학기반 어군탐지기, 연속 어란채집, 환경DNA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활용
** (바이오로깅) 내만에서 참문어 등 산란한 어종에 대한 연속 자료 획득 기술 개발 및 운영

○ (**바다숲 조성**) 바다 생태계의 먹이 공급처이자 은신처, 산란장 기능을 하는 **바다숲 18개소**(29.99㎢, 누적 347.2㎢) **신규 조성**

- 바다사막화 현상인 **갯녹음** 면적은 바다숲 조성 전('21) 대비 **절반 이상 해소**(△52.6%)되고, 해조류 생체량은 **106%**, 종다양성은 **43% 증가**

○ (**민관협업**) 그간('09~) 국가 주도 사업에서 '24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국비 50%, 민간 50%)로 바다숲 **4개소 7.85㎢** (73억 원) **신규 조성**

- 바다숲 기능 유지를 위한 **바다숲 사후관리**(쓰레기 수거, 조식동물 구제 등)에 지자체 외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 및 시행

* '24년 실적: (롯데마트) 군산 장자도, (롯데칠성) 태안 의항리, (한국전력공사) 무안 성내리

○ (**블루카본**) 바다숲(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인증**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외 석학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 개최(2회)**

* 포럼(5.10, 10.30) 참석: 2050탄소녹색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WWF, FIRA, 카를로스두아르테(세계 대표기후학자 12위), 피터 매크리디(블루카본 논문 135편 이상), 국내외 학자, 민간기업 등

○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자원 회복·관리가 필요 품종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전년 대비 **36.6%**, 비조성해역 대비 **127.3% 증가**

* ('23) 4.26kg/척 → ('24) 5.82kg/척 / ** (조성해역) 5.82kg/척, (비조성해역) 2.56kg/척

○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매년 7개월(4.1 ~ 10.31) **곰소만·금강하구** 일대 모든 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 전면 해제**

* 어선 3,061척의 어업이익 94억원(1,500톤) 추가 소득 기대

○ (**소비자 참여**) 어린물고기 판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생산·유통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소비** 유도

* '착한낚시선 인증 스티커' 배부, '치어럽 캠페인' 연계 금융상품 개발 등

○ (**정책 홍보**) 대국민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정책 개정안(해루질) 본격 시행**에 따른 **대국민 홍보** 등 **이해도 제고**

* 자체 제작한 '착한 해루질 캠페인' 영상 홍보(KTX, 엘리베이터 송출, 인터넷 뉴스 배너광고 게재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산자원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AC 확대 등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협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TAC고도화, 바다숲 조성, 산란·서식장 조성 등 종합적 정책효과 보통, 향후 기대효과 우수

40	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Ⅳ-2-②)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감척 확대**) ’24년 수산자원 회복과 근해업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9개 업종 근해 어선 86척**으로 역대 **최다 감척 추진**

* 근해어선 감척(척) : (’20) 53 → (’21) 86 → (’22) 65 → (’23) 76 →(’24) 86

- 오징어를 주로 포획하고 타 업종 전환이 어려운 **근해채낚기* 44척** 및 **부설형 어구**를 사용하는 **자망·통발 어선 28척** 등을 집중 감척

* 오징어 자원 급감에 따른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23. 12)” 결과를 적극 반영

○ (**어구관리 강화**) 국정현안장관회의(9.24)에서 논의된 “어구순환 관리대책” 중 하나로 “**폐어구 관리와 연계한 감척**”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

-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우선 감척하고 감척되는 어선을 폐어구 수거 사업에 공공 활용, 무허가 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시 발생하는 불법 방치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마련(어구실명제 미이행 등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

○ (**감척제도 개선**) 선순위 감척 포기 시 후순위 감척 절차 속행할 수 있도록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도입**, 감척 대상자의 50% 이내 예비후보자 선발, 사전감정평가 실시 등을 통해 감척률 제고

- 어획량 급감으로 사실상 조업이 어려웠던 업종(근해채낚기, 연안복합 등)도 감척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 1년간 60일 조업 또는 2년간 90일 조업한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포함

○ (**폐업지원금 개선**) 현재 감정평가된 폐업지원금 또는 업종별·규모별 최소기준가 중 **어업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관리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 개선**) 국내 선원의 근로여건*을 반영해 생활안정자금 **지급기준을 변경**, 감척 등으로 인한 미조업 국내외 어선원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 **농어촌지역 인구 유출 예방**

* 외국 어선원은 주로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내 선원은 주로 어획 수익에 따른 임금 분배해 조업중단 기간의 급여 확인 불가

○ (**감척어선 활용**) '24년 감척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하여 수리·정비 후 **불법 범장망**을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조업시기와 무관하게 중국 불법조업 **상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 선박(89~130톤급)을 활용하므로 **근해어장 어구 수거**에도 투입 가능

○ (**생산량 회복**)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집중 감척, 자원관리 등을 통해 '23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2년**(88.9만톤) **대비 7.54%** 증가한 **95.6만톤**으로 회복되었으며,

- **어선 척당 어획량**은 근해 척당 240.8톤, 연안 척당 10.6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6.5%, 10.4%** 증가

* 연근해 척당 어획량: ('92) 21.5 → ('04) 16.29 → ('08) 22.47 → ('22) 22.7 → **('23) 24.5**

○ (**정책만족도**) 어업인, 공무원,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의 전체 평균 만족도(정책·감정평가·관리기관)가 89.7점('23)에서 94.6('24)으로 4.9점 상승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추진계획 충실성 향상을 위해 주요정책과제 등 상위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 과제와 성과지표가 부합될 수 있도록 보조 성과지표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며, 이와 연계하여 정책의 다양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임('25.上)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워크숍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감척제도 개선, 감척 확대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보통. 어선임대사업에 유휴선박을 활용은 어선감척사업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추진시 고려 필요

41	어업 안전 보장 및 조업질서 유지 역량 강화(Ⅳ-2-③)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규어장 확보**) 현장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조업 대책**을 **마련**하고, **조업금지 규제 해제***로 서해 5도에 꽃게 어장 등 **신규 어장**** 169㎢을 확보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E어장 신설, 연평도 주변어장 확장, '24.4.1) 시행
** 어장 신설(E어장, 144㎢) 및 확대(연평어장, 25㎢) → 꽃게 성어기(4~6, 9~11월)에 조업 가능

○ (**불법조업 감소**)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등 강력 대응으로 **중대위반어선**** **단속건수**(19건, 11월 기준)가 **'23년 동기**(23건) 대비 **17% 감소**

* 봄철 산란기(5월)·가을철 성육기(10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경·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합동단속 추진(5.1~31, 10.1~31)
** 무허가어선,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조업 등으로 불법조업 강도가 높은 위반어선

○ (**입어규모 축소**)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규모를 줄여**('16. 1,600척 → '24. 1,200척) 남획 방지

*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어획량(18,550톤)이 `23년 동기 대비(19,684톤) 5.8% 감소

○ (**제도개선**) 연근해어업 불법조업 예방·관리, 불법어획물의 국내·해외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추진*

* (추진계획) 법률안 국회 제출('24.6) → 법률 제정('25) → 법률 시행('26)

○ (**인프라 강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을 연근해 조업감시센터(FMC)로 확대·**개편***, 어획증명앱('24.7)** 개발 등을 통해 **실시간 조업**(어선위치·어획량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 **구축**

* 직관적 모니터링(멀티비전)을 통한 상황관제 등 인프라 구축('24.7),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선 대상 시범운영('24.8~) / ** 어획부터 양륙보고까지 어획확인서 발급이 가능

○ (**불법수산물 유통·판매 감시**) **TF*를 구성, 상시 감시**를 통해 온라인상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의심 **수산물** 및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 발견시 조사를** 진행, **게시물 수정·삭제 및 고발 조치**

* 지도교섭과에서 총괄하고 어업관리단내 온라인 감시반, 현장 점검반으로 TF 구성

○ (**법집행 강화**) '24년 신규 조업조건(AIS 설치·작동, 국제총톤수 서류 비치 의무화)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4.26)

- 법무부(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3.25) 및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추진**

○ (**조사확대**) 중국어선 대상 **승선조사 확대** 등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어획할당량 조기 소진 유도 등 **불법조업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

- **AIS 설치·작동 현황** 등 '24년 신규 조업조건 시범기간(1~4월) 내 **이행실태 점검**으로 정식 실시(5월) 이후 **신규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 (**불법어구 퇴출**) 제주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어구(범장망*) 25통(155톤)**을 **철거**하고, 조기·갈치 등 **어획물 약 99톤**을 **현장 방류**하여 **약 27억원**** 규모의 우리 수산자원 보호

* '싹슬이 어구'로 불리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로 어린고기까지 포획하는 대형 그물

** 어구제작 비용: 25통×0.6=15억원 / 어획물 방류 : 99톤×0.12=12억원(참조기 12천원/1kg당)

○ (**한·중 협력**)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행사** 개최(6.19, 화성)를 통해 **서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협력체계 강화** 도모

* '24년부터 '한·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정례화를 통해 공식 기념행사로 격상

- 한·중 및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9.24~25)를 통해 상호 의견교환으로 동북아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방안 모색

○ (**입어협상**) 한·중 어업협정('01.6)에 따라 매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 논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불법조업 합동 단속 순시, 불법·폐어구 상시 수거 체계 구축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우수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매우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법집행 강화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매우우수

42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Ⅳ-2-④)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후변화 대응**) 최근 **기록적인 수온 상승**과 **어획량 감소·양식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발표('24.12, 국정현안장관회의)

-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30년까지 수산물 ①생산량 370만톤 유지, ②어가소득 65백만원 달성, ③소비자물가지수 2% 유지 달성 목표 제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책 핵심전략

○ (**어업규제 개선**) **현장수요를 반영해** 실뱀장어안강망·새우조망·안강망 어구 규모 확대, 근해채낚기·근해연승 이중갑판 허용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23. 5개업종 487척→'24. 12개업종 16개 규제 1,180척)

* 전자어획·양륙보고, 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등 일정한 의무 이행 시 수산관계법령 개정 없이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수산업법」 제86조)

- 업종 간 갈등 최소화하기 위해 TAC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일부 어업인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추후 결과분석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절차로 추진

○ (**ITQ 시범사업**) 오징어 자원을 둘러싼 근해채낚기·근해자망 간 어업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상생 협약** 체결

- 쿼터소진률이 낮은 근해채낚기와 쿼터배분량이 적은 근해자망 양 업계 간 상생 모색 및 오징어 자원이용 효율성 증대

○ (**제도기반 마련**)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제도 전환을 위해 어획·양륙 보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의무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운영 등을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마련('24.6.28, 국회제출)

- 현장 소통을 위한 지역 설명회 7회(강원·전남·제주 등 7개 권역) 추진

○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수산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등)를 거쳐 '**수산물 고부가가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24.下)

○ (**어선임대 확대**) 초기 진출 시 평균 3억 원의 어선 25척을 어선업 진출 희망 **청년**에게 **매칭**하고, 임차료 50%(월 최대 250만원) 지원 확대

* ('23) 4.5억원, 10척 → ('24) 11억원, 25척

- 청년어업인이 계약만료 후 어선을 구입 또는 어업을 지속 영위하는 등 **어촌 정착률 53.8%** 달성

○ (**어선임대 제도개선**) 매입임대 도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맞는 임대용 어선풀 확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등 고도화 방안 도출

- 향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총괄기관으로서 "**어선은행**"을 설립하여, 어선임대·리스·매입 등 **어선어업 진입퇴출 패키지** 지원

○ (**홍보·역량 강화**) 청년어업인과의 소통과 정책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실습·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어업인 **역량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어선임대사업 등 수산분야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기후변화 대응. 어업규제 개선, 어선임대제도 도입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43	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Ⅳ-2-⑤)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MSC인증) **정부**의 **적극적인 MSC인증*** **지원**으로 어획 투명성 및 이력 추적성을 강화하여 **우리 원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 세계식량기구(FAO)와 '지속가능성 표준을 위한 국제협회(ISEAL)'에서 정하여 모범지침을 충족한 어획활동에 발급하는 유일한 인증

- 전년 대비 MSC 인증 **원양업체수 100% 증가**('23. 4→ '24. 8개), 통조림용 **MSC 참치수출량 58% 증가**('23. 27,831 → '24. 43,846톤)

○ (IUU 어업 근절) 원양어선에 승선·활동하는 옵서버* 프로그램의 발전 및 개선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 △수산자원 과학조사, △어획보고, △국제조업규제 준수 감시·감독 등 수행

○ (**어선원 인권**) 원양어선원 인권·노동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NGO·산업계** 논의를 통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공동 수립·발표**(3.27)

- 美 **국무부** 「2024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이 **3년 만에 인신매매 대응 최고등급인 "1등급"** 국가로 **복귀**(6.25)

○ (**수급 안정화**) **오징어 수급 불안**('23년 생산량 △35%)에 **대응**하여 초도물량 1.5만톤을 시작으로 **전년대비 78.1% 상향**된 **5.7만톤** 국내공급

* 원양 오징어 국내 반입량수출 제외 누계('23.11) 3.2 → ('24.11) **5.7만톤**(↑78.1%)

○ (**쿼터 확대**) CCAMLR 보존조치 이행 준수, 과학적 기여도 확대 등을 통해 '24-'25어기 이빨고기메로 **조업 10척*** **승인**('23-'24어기 8척), 조업 **쿼터 200톤 추가** 확보(10.25)

* **CCAMLR 회원국** 총 12개국 30척 중 **최다 승인 척수**

○ (**공급망 안정**) 국가간 **어업협상**, 어장 보유국 **ODA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수요가 큰 **명태**, **참치** 등의 국내 **수급·물가 안정**에 기여

- (**명태**) 러-우 전쟁에도 **제33차 한-러 어업협상 타결**(3.27.)로 유일 **명태어장**서베링해 확보하여 **명태 28,353톤**(~12.1.)을 **국내로 안정 공급하고,** 제34차 협상 타결(12.6.)로 '25년 명태 **공급망 사전 확보**

- (**참치**) 참치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해 핵심 참치어장*인 키리바시 **ODA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입어**하고, '25년 입어료 절감

○ (**공급망 확대**) 해외수산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케냐 수산협력 MOU**"를 **체결**(6.5.)하고, 협력 구체화 및 **공급망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ODA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4.24~12.16)

○ (**인력난 완화**) **적극적인 정부 중재**를 통해 기존 선원 고령화, 신규 선원 기피 등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참치연승 업종(106척)에 **외국인 기관사**(1명/척) **도입**키로 **10년** 만에 **노·사·정 합의**(11.27)

○ (**사고 대응력 강화**) 원양 선박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조업 감시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점검**(3.21., 장관), **합동 현장점검**(연 3회), **선내 자체 교육훈련**(3.26.~4.15.)으로 사고 사전예방 및 사고 대응력 강화

○ (**제도 안정성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원양어선 안전펀드' **출자금 조성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 사업의 **제도 안정성 강화** 및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 「원산법 시행령」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신설('24.10.25. 시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25.3) 및 추진

○ 성과지표 설명 구체화 및 목표치 등 개선·보완('25.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MSC인증지원, 원양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 수립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과제 전체의 성과가 성과지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인과성, 대표성 보완 필요

44	첨단·친환경 양식산업 육성(Ⅳ-3-①)	미흡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 (**스마트전환**)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준공**('24.3)을 기반으로 전량 수입 중인 **대서양 연어**를 **생산**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본격 착수

* GS계열 에코아쿠아팜에서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순환여과방식으로 대서양연어를 생산할 계획이며, '26년 최초 출하 예정(연간 500톤)

○ (**one-stop 창업지원**) **청년창업, 귀어인** 등 양식업 진입희망자 대상 **단계별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진입장벽 완화**

○ (**스마트양식시설**)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시설 보급을 위해 연구시설(2개소) 및 양식어가(11개소)에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 은어스마트예방시설신축(경북), 흰다리스마트양식실증연구시설(전북),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경남) 등 **13개**소 **지원**

○ (**인증직불금**) 친환경 인증직불금을 전년보다 **51억원 확대**('23. 94→ '24.145억원)하여 **875어가**에 인증수산물 생산에 추가 소요되는 **경영비 지원**

* 인증건수 : ('23) 214건 → ('24) 292건, 인증품목 : 16개 → 19개
** 친환경양식장 면적 : ('23) 9,758ha → ('24) 13,368ha (+3,610ha, 37%↑)

○ (**어가맞춤형 직불제**) **인증품 출하 확대**를 위해 인증품 출하량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제 지급기준 변경('24.11)

* 양식장 **면적기준** → 어가별 **인증품 출하량**에 따른 인증 직불금 **차등 지원**

○ (**친환경수산물 홍보**) 소비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 **인증품종별*** **홍보** 추진, 인증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제품 카탈로그 공개** 및 **구매처 연계**로 소비 촉진 도모

○ (**기본계획**)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인증 활성화 및 친환경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제3차 친환경어업 기본계획**('25~'29)」 수립('24.12)

○ (**인증기준 강화**) 인증기관 등급제 시행, 재심사·사후관리 강화 등 인증제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전면 개정**('24.3), 친환경 관련 국내외 인증 시차 단축을 위한 **전환기간* 도입**

* 해외 시장, 코스트코·대형체인, 호텔 등은 입점조건으로 친환경 국제인증을 요구하는 추세이나 국내인증과의 기준 차이로 장기간 인증 취득 시간·비용 소요

○ (**내수면 정책방향**) 내수면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첨단·고부가가치 양식 전환 등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 수립('24.12)

○ (**내수면 인프라**)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불량어도 개보수('24. 24개)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류·접안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

○ (**내수면 양식**)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양식단지**(충남 당진)* 및 청년창업 수요자 맞춤형 **교육-창업-임대 원스톱 지원센터**(전북 김제)** 조성 추진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기준·산정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과 하위법령 개정('24.1)**, 보상신청 공고(5.13.) 등 통해 **내수면 가두리 어업인에게 손실보상 추진, 총 85건(총 198억)** 보상 대상 결정

* 수산물 증산을 위해 정부에서 장려('75~)한 내수면 가두리가 "맑은 물 공급정책('89)"으로 사실상 금지(면허연장 불허) 됨에 따라 입은 피해를 보상

** (이전) 면허연장이 불허된 자가 시설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 (개선) 면허연장이 불허된 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단가로 보상

○ (**전기료 지원**)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사용(을) 전력 사용 **양식어업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24년 신규, 56억원): 어가당 전기료 최대 44만원 감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위 정책과제와 연계 정도, 전년도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25.4)

○ 내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방안 발표('25.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협의회, 세미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스마트양식산업 육성, 내수면 등 정책취약 지역을 위한 지원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 보통, 향후 기대효과 우수

45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Ⅳ-3-②)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배합사료 지원**) 배합사료 가격 상승을 고려, 양식어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규모 **확대**①, 배합사료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② 및 **지원규모 확대**③ 등을 통해 **수혜어가 증가**④

① 지원규모: 1,000억원 → 1,500억원, ② 지급단가: 9,680원/1포 → 10,360원/1포
③ 지원규모: 185억원 → 200억원, ④ 대출건수: 889건 → 967건

○ (**어분 공급망**)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따라 **배합사료 주요 원재료(어분)**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24.8)

*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 중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사업자(선정 시 금융·세제상 혜택 부여)

○ (**공급 관리**) 사료공장건립 지원으로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을 6천톤 확대(증축)**하고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해 안정적 사료 공급 지원

* (양어사료전문생산시설 건립) 제주 / '22~'24 / 장비 26종 및 공장 증축
(친환경배합사료 공장건립) 신안 / '24~'26 / 공장 1개소 신축

○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양식업 위한 배합사료 사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자발적 정책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24.11)

① 지원대상: 4개 어종(넙치·가자미·볼락·돔류) → 전체 해산어 양식어종(20종 이상)
② 지원조건: 배합사료 전주기 사용 → 전주기 사용+생사료 혼용 가능

○ (**방어양식**) **방어**를 국내에서 완전양식으로 생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국내 방어 양식산업 육성방안**」 마련('24.5)

○ (**종자산업육성**) '제2차 수산종자산업 기본계획('24~'28)'을 수립(1월)하고,

- **해상축제식 종자생산업** 신설, **미신고*** 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할 수 없도록 「수산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25.1) 등 종자의 **품질·유통관리** 정착 및 **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추진

* (현행) 생산·수입 시 신고만 규정 → (개정) 미신고 시 소지·보관·판매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해조류 종자관리**) **해조류 우량종자**의 개발·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해 출원품종에 대해 재배심사를 실시하고 **품종보호권에 등록**(4품종)

* 품종보호권 현황('24년 기준) : 출원 49(김 39, 미역8 등), 등록 36(김 29, 미역 6 등)

- 김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빠른 성장 등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소유 품종(9종)의 보급·분양 확대**

* 보급량(g) : ('20) 10,748→ ('21) 5,510→ ('22) 5,345→ ('23) 5,670→ ('24) 6,442

○ (**수급예측**) 주요 양식수산물(넙치·김·전복) 종자의 체계적 수급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판매가·생산량)를 **활용**해 **수급 예측 모델** 개발('24.6)

○ (**스마트 종자기술**) 넙치·연어 등의 유전형질(내병성 등) 분석을 통한 **예측모델 최적화** 및 넙치·전복·김 등의 **품질지표(질병 등) 발굴**

*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22~'28)

○ (**관상어산업 육성**) 해·담수 관상생물의 **품종개량** 및 **담수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산업화 기반기술 확보('24.12)

- 관상어 연구·생산·유통·전시 **전주기를 관리**하는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내수면관상어센터**(경북 상주, 충북 단양)를 **건립, 창업자 대상** 지원교육도 추진

○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수산부산물을 토목·연안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안선을 **친환경 소재로 복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채움재, 양빈재 등 5개 유형 확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7.25)

- 양식어가에 수산부산물 전처리 시설을 보급하고 대량의 수산부산물 집하 및 중간처리가 가능한 지역거점 자원화 시설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이행 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25.6)

○ 굴산업 발전을 위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발표('25.1)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국제회의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 수산부산물, 관상어, 종자 등 연관산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배합사료 지원, 관상어 산업 육성, 종자산업 육성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하며, 고부가 양식품목 개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

46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경쟁력 확충(Ⅳ-3-③)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종합대책**) 직접 동·서·남해권 어촌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5.13,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남해권(경남 통영 2.28), 동해권(강원 양양, 3.13), 서해권(전남 신안, 4.18), 종합보고(부산, 6.20)

- "**바다생활권(어촌+연안)**"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해양레저·어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어촌 방문·체류 관계인구 확대 및 어촌 유입을 촉진**

○ (**김 생산면적 확대**) **김 신규면허**를 **2,700ha 확대***하여 **주부, 외식업계, 소상공인** 등 **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

* 면허양식장 규모: ('17~'23) 64,040ha(면적 동결) → ('24) 66,740ha(지난해 대비 4.2% 증가)

- **연안**에 **과밀**된 **해조류 양식**을 '**외해**(수심 35m 이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김 외해 시험양식 1,000ha 최초 도입**('24.11~)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개정('24.11.26일 시행, 외해양식 대상에 해조류 추가)

○ (**과학적 수급예측**) 공급 부족 등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품목별** 중단기 **수급예측 모형 개발**(~12월, 오징어, 갈치 등)

* 양식수산물 품목별 수급상황 전망을 연, 월 단위로 요인별·상황별에 따라 세분화하여 예측

○ (**정보제공**) **15개 주요 양식 품목***에 대한 **생산·가격 동향**과 **전망**을 **제공**하여 입식·출하 조절 등 **합리적인 생산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적정시장 가격 유지토록 관리

* 김, 미역, 다시마, 광어, 강도다리, 우럭, 전복, 굴, 홍합, 가리비, 멍게, 새우, 뱀장어, 송어, 가두리

○ (**양식 임대제**) 높은 **시설 투자 비용** 등 청년·귀어인 등이 겪는 **양식업 창업·귀어귀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 임대제를 도입

○ (**피해복구**)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한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고수온 해제 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어가 대상 **재난지원금(139 억원)** 지원

* 재해복구계획 확정까지 지난 5년 평균(19일) 대비 13.5일 획기적으로 단축

- 이후 피해가 확인된 어가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78억원)**을 **지급**하고,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41억원)**도 지원

○ (**지원금 상향**)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 가입률**과 **형평성 제고**('24.5~)

- 피해규모에 비례해 복구지원액이 현실화되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의를 이끌어 **복구단가 항목 신설**(5종) 및 **단가 인상**(3종)

* (신설) 참조기 치어·성어, 부세 치어·성어, 범가자미 / (인상) 조피볼락·감성돔·뱀장어

○ (**사전대비**) 고수온 **대응장비**(액화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및 해수열원을 활용해 **양식용수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히트펌프) 확충

-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지자체 등에 **실시간**(30분 간격) **수온 정보** 안내(누리집, 문자메시지 등)

* ('21) 140개소 → ('22) 160개소 → ('23) 180개소 → ('24) 190개소

○ (**재난대응**) 권역별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장비 가동 현황, 사료량 조절 안내 등 양식장 현장지도 실시 (누적 6,347개소 방문)

- 고수온 특보기간(7.24~10.2, 71일) 동안 **비상대책반·본부**(본부장: 해수부 장관)를 24시간 운영, **재해 발생 단계**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12회)하여 재해발생 전망, 행동요령, 복구계획 등 **신속 안내**

○ (**정보관리**) '**양식장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58개 지자체, 약 40,000건의 양식장 면허 관련 정보를 표준화·디지털화, **어업재해** 및 **수급관리** 등 **주요 정책 판단, 사업 개발** 등에 활용

○ (**자조금통합관리**) **수산자조금**의 **투명한 회계**와 **경영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어업인 참여 촉진**을 위한 **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재해 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복구, 청년·귀어인의 양식업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마련, 양식임대제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47	깨끗하고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기반 조성(Ⅳ-3-④)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면허·심사 평가제**) 양식면허 발급시 모든 양식품종 **어장환경 평가** 등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양식업 심사·평가제를 도입**

○ (**청정어장 재생**) **만(灣)단위 해역***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기 위해 오염퇴적물 제거, 해양환경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 올해 사업이 완료된 **여자만**(2,498ha)은 **퇴적 유기물 농도****가 **감소**하여 사업의 **생태계 회복 효과** 확인

* 4개소→ '24. 2개소 추가(전남 함평군 함평만, 경남 남해군 강진만)

** TOC(총유기탄소함량) : 12.8→6.7mg/g, COD(화학적산소요구량) : 12.2→7.5mg/g

- 청정어장 재생사업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새꼬막 비빔면' 등 상품, **자체 브랜드 개발***

* (여자만) 여자만새(꼬막 떡볶이, 비빔면 등) / (진동만) 해품은(미더덕 비빔면, 미더덕 육젓 등)

○ (**질병진단 표준물질**)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세계 최초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로 지정*(5.30), 수입수산물 검역 중 **질병진단 오진***으로 인한 **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회수·반품비용) 예방에 기여

* (의의) 우리나라 수산동물질병 유전자 진단분야의 **국제적 전문성 인정** 및 세계 최초 질병 진단 표준물질의 **국제적 보급 및 표준화를 위한 역할**을 **부여**받음

○ (**청정국**) 주요 양식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국 지위획득 질병: ('23) 5종 → ('24) 1종 추가

○ (**전염병 대응**) 전파력이 강한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시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 해수부-수품원-지자체 합동 도상(모의) 훈련 실시**

○ (**방사능 검사**) 생산유형별 특성(연근해·양식·원양산 수산물)에 따른 **맞춤형 방사능** 검사 **15,000건 이상 달성 전망**

- 식품 **방사능 대표검사 핵종***인 요오드, 세슘 외 **삼중수소,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방사능 안전 지도'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제공**(9월~)

* 검사건수(건) : ('22) 5,441→ ('23) 12,012 → ('24.10) 13,357 → ('24 목표) 14,500

** (검사결과) '11년 이후 **모든 수산물 검사결과 '적합'**, (적합기준)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이하

○ **(동물용의약품 관리) 처방대상 항생제**(성분명 처방)를 **전체 항생제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전자처방시스템** 구축·고도화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4.7.19.)

- 수산분야 항생제 내성 감시권역을 확대*하고 넙치의 항생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안) 마련('24. 1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해설집(개정판)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올바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촉진

* 동해권, 서해권, 남해권 + 남동제주권('24 추가)

○ **(안전사용기준 확충)** 항생제 내성 방지, PLS 대응을 위한 품종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확충(~'27, 10종/년)

- 어종별 약품 **안전사용기준 확대***로 **제약업체**에는 **기술이전**, **어민**에게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수산물** 공급

* 넙치(옥소린산·플루메퀸), 조피볼락(옥소린산·플루메퀸·플로르페니콜), 뱀장어(플루메퀸), 무지개송어(플로르페니콜), 참돔(플루메퀸), 향어(플루메퀸·플로르페니콜) 총 10개 안전사용기준 확대와 기술이전 완료

○ **(의약품 재평가)** 안전성 부적합 성분(트리메토프림 등) 휴약기간 재설정, 약품사용 실태 반영한 취급자 주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 **(지도·점검)** 오·남용 없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어민**에게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지도·점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청정한 어장환경 조성 노력 등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거의 일정대로 완수하여 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설명회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양식장 면허·심사 평가제 도입,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48	수산물 수급·물가위기 관리체계 구축 및 안심 유통환경 조성(Ⅳ-4-①)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물가안정**) 적극적인 **정부 비축** 등 **철저한 수급 관리** 추진, '24년 **수산물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5%**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균인 2.4%보다 낮아 **안정세 유지**

○ (**수급관리**)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국민이 선호하는 수산물 비축**을 **37%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

* 비축 예산/물량 : ('23)1,750억원 / 3.2만톤 → ('24) 2,065억원 / 4.4만톤

- **기후변화, 자원변동** 등 불가피한 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김, 고등어 등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로 **공급가격 인하 유도**

* 고등어(2만톤, 1.19~6.30 / 관세 10→0%), 김(825톤, 5.10~9.30 / 관세 8~20→0%)

○ (**수급예측**) 수급 상황을 **연 단위**로 **전망**할 수 있는 중기 예측(오징어·갈치) 모형과 월 단위 전망이 가능한 단기(오징어) 모형 개발(~12월)

○ (**소비촉진**) 수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총 9회**(총 189일간)의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 전국 **531개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4만건), 20% 先 할인된 **수산물 구매 전용 상품권**(제로페이 상품권)** **720억원 발행**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30% 환급) 8회 531개 시장 지원

○ (**소비활성화**) 제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매월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홍보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대축제**(11.2~3) 등을 개최

○ (**천일염 수급안정**)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와 생산자 간 연간 약 **2,560톤**(평년 생산량 1%)의 천일염 **사전 출하약정 체결**(4.1), 김장철 천일염 수요 급증 대비 **비축물량 5,000톤**을 **적기**에 **방출**

○ (**저온·친환경 위판장**) 충남 서천, 강원 고성, 제주 등 지역별 **수산물 위판장 5개소**의 **낙후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전환** 지원('24~)

* 필수시설(경매장)과 부수시설(냉동·냉장·제빙·오폐수처리시설 등) 현대화 지원

○ (**거점위판장**) 위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영권**부터 현대식 시설을 갖춘 **권역별 대표 위판장 구축**('24년 통영수협 위판장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24~'26) /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25~'27)

○ (**부산공동어시장**) 건립('73년) 이후 약 **50년** 동안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본격 착공('24.10)

○ (**어상자 보급**) 비위생적인 목재 어상자를 대체하기 위한 **재순환 어상자 692만개**를 보급하고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편 방안** 마련

* '24년 전체 어상자 사용량 2,930만개 중 **재순환 어상자 692만개 보급(23.6%)**

- 재순환 어상자 구매 방식의 **효율적 개편**(임대→직접구매), 일시보급 확대 등을 반영 '**물류환경 개선사업 개편 방안**' 마련('24.12)

○ (**어상자 회수**) 해양환경 보호, 어상자 폐기·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표시**, 어상자 세척기 연구('22~'25), 순환물류 시범사업 등 추진

○ (**이력관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 구축**을 위해 '24년 이력제 **관리 수산물 물량 33%* 확대**('23. 32.7 → '24.11 43.5만톤)

* 붉은대게 통발(2월), 부산공동어시장 고등어 물량(4월), 해조류 물량(10월) 등 편입

○ (**민간참여**) 기업의 자체 안전관리기준을 정부 이력제품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증기준 개발 및 대형유통사 대상 **시범사업**(도상연습)* 실시('24.10)

* (참여) GS리테일,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NS홈쇼핑 등

○ (**유통혁신**)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 활동**을 기반으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발표**(5.1, 관계부처 합동)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도매거래 개시**(7.1)

-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하고, **보관·저장성**이 **높아** 온라인 거래에 적합한 냉동·건어물 등 **11개 품목***에 대해 **온라인도매거래**를 **개시**

* 건멸치, 마른김, 전복, 조기, 천일염,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고등어, 건멸치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 여건에 따라 수산물 수급·물가 안정적 관리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미흡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다소우수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보통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수산물 물가안정 대응, 안심 유통환경 조성 등의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49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Ⅳ-4-②)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김 수출**) 생산-가공-수출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통해 **수산식품 단일품목 최초 '김' 수출액 2년 연속 1조원 달성***

* 김 수출액 : ('22) 6.5억불 → ('23) 7.9억불 → ('24.10월) 8.5억불

- (**수출기반**) 수출주력품목인 **김**의 품질향상,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및 **'김산업 전문기관'**** 확대(7.22)

* '23년 3개소(전남 해남군·신안군, 충남 서천군), '24년 2개소(전남 진도군·장흥군)
** '22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연구·개발), '24년 한국수산무역협회(수출·마케팅)

- (**경쟁력 강화**) **가공공정 현대화***, 맞춤형 **바우처 확대****(27.2억원↑)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품질·프리미엄 경쟁력** 확보

* 김 건조에 필요한 전력량을 최대 65%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수출 경쟁력 향상
**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마케팅, 국제인증 취득 등 기업별 2.2억원 내 맞춤형 사용

- (**홍보**) 국제박람회*(35회)·무역상담회(11회), 앵커숍, 해외 외식업계 매칭 지원(3억원↑) 등을 통해 **K-김 브랜드 홍보** 및 **판촉 지원**

* 총 463개 기업 참여, 총 352백만불 수출계약 성사

○ (**수산식품 인프라**) **생산-가공-수출**을 **원스톱 지원**하는 전남권, 부산권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블루푸드 산업**의 **구심점**으로 활용

* (전남 목포) '20~'26 / (부산 서구) '22~'28

- IoT·자동화 기반 전북·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가공 혁신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 (전북 군산) '22~'26 / (경북 영덕) '23~'26

○ (**비관세장벽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운영**('24.5~)해 통관·수출절차, 수입규제·현지 이슈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소**

○ (**무역지원센터**) 유럽시장 수출 확대 및 수출기업 무역 애로 해소, 마케팅 등 현지 밀착 지원을 위해 프랑스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

○ (**국제박람회**) 수출거래선 개척을 위한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 참여 지원, 후속으로 해외바이어 한국 현장실사 및 현지 판촉 비용 등 지원으로 참여 지원기업 수출계약 성사

* (국제박람회) '23년 39회, 212개사, 12백만불 → '24년 36회, 197개사, 25백만불
(무역상담회) '23년 7회, 115개사, 6백만불 → '24년 11회, 202개사, 22백만불

○ (**맞춤형 바우처**) 수출기업 단계별로 제품 디자인,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통·번역,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

* (지원업체) '23. 35→'24. 62개 업체(77%↑) / (수출실적) '23. 233 → '24.10. 334백만불(43.2%↑)

○ (**온라인 홍보**) 수출업체-해외바이어 간 **온라인 쇼케이스·구매설명회 개최*** 및 해외 온라인쇼핑몰(아마존 등)에 개설된 **K-씨푸드관 운영** 확대**,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추진**

* 미국, 캐나다 등 7개국 개최, 해외 바이어 102개사 및 국내 수출업체 16개사 참여
** ('23) 6개국 7개소, 195개사 → ('24) 7개국 8개소, 219개사
***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활용 온라인 홍보콘텐츠(제품사진, 홍보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

○ (**인력양성**) 가공분야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경상국립대) 신규 개설('24.9~)하고 수산식품업체 종사자·예비창업자 대상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마케팅 등 현장교육 실시

○ (**미래대체식품**) 채식, 친환경 등 新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미래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수산식물 활용 **대체육 및 수산배양육 기술개발**(R&D)

* 해조류 활용 대체수산식품 및 수산물 세포배양식품 기술 개발('24~'28)

○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중견 식품기업과 영세 중소 **식품기업 협업**으로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지원***(5개 시도, 25개 기업)

* 새싹기업 도약지원('24 신규)

- 중기부-해수부 협력 패키지 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한 **수산식품 가공공장 생산공정 스마트화 지원**사업 발굴('25년 신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규 품목 발굴, 신흥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수출전략 다변화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보통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높음 ㅇ (목표(지표) 달성도) 수출전략산업 육성 추진율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 수산물 수출 다변화 및 수출 확대 추진율은 성과지표는 통상환경 등 대외여건으로 인해 목표치인 수출국가 수를 거의 달성
③ 정책효과 (35점)	미흡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김 수출, 다양한 수출지원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기대효과 보통. 수출품목 다양화를 통해 정책효과 다변화 필요

50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 지원 강화(Ⅳ-4-③)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김 수급 안정화 방안**) 김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민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단기 수급대책**(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24.4)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학·연·관 협의체'('24.6~)를 통해 도출한 양식면적 확대, 마른김 거래소 설립, 등급제 도입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기반으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24.10)

* 해수부, 지자체, 한국김산업연합회, 한국김수출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전문가 등 참여

- 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김 가격 상승세 둔화***, 또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수급안정 기반 마련

* 김 CPI(전월비, %) : ('24.1)△0.8, (2) 2.0, (3) 2.2, (4) 3.8, (5) 6.6, (6) 8.0, (7) 1.9, (8) 0.9, (9) 0.9, (10) 0.7

○ (**정책자금**)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전년 대비 **7,000억원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4.1조)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어업인 등 약 **3.9만명**에게 1인당 연간 **약 284만원* 이자 경감 효과**

* {일반자금(5.1%)과 정책자금(2.3%) 간 대출금리 차 2.7%p × 정책자금 신규 공급액 4.1조원} / 정책자금 이용자 3.9만명

○ (**긴급 유동성 공급**) **고수온, 흉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자금 **190억원 공급, 지원한도**를 **어가당 1억원**(+7,000만원)으로 **확대**해 **유동성 공급의 실효성***을 **제고**

* 대형선망의 경우 어업 경영에 드는 비용이 평균 24억원으로 기존 지원 한도(3,000만원) 내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유동성 공급 역할에 한계 존재

○ (**보증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어업인 등에게 **신용**을 **보증**하여 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주 2.2만명 대상 보증금액 32,149억원 지원(인당 평균 1.4억원)

○ (**상환 기준금액 상향**) **어업경비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여 어업경영자금 **재대출** 시 **상환 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2억원)

○ (**세제혜택**)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를 상향(3000→5000만원), **1.1만 양식어가** 대상 **연간 330만원*** 소득세 **추가 감면 지원**

* 비과세 한도 상향분 2,000만 원 × 세율 16.5%(지방세 포함) = 330만 원 [세율 16.5% 가정]

- 약 4.6천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및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세제 지원

* 조합원 1인당 1.2 → 3천만원 / ** 1인당 출자금 1 → 2천만원

○ (**창업아이템 발굴**) 해양수산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4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 **11개 아이템 발굴**

- 수상팀 대상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대출 보증 지원, 수산모태펀드 투자 유치를 위한 IR 지원 등 **후속지원 연계**

○ (**신규펀드 조성**) 블루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블루푸드테크펀드(202억원)**와 수산모태펀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펀드(151억원)*** **조성** 등 수산분야 투자 기반 확장

* 기존 펀드가 보유한 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의 펀드로, 기존 수산펀드 투자금의 회수와 재투자를 도와 안정적인 투자 생태계 구축을 기대

○ (**정책소통**)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수산정책 현장 민생투어**를 개최해 올해 수산정책을 설명하고, 어업인 등 **요구사항 수렴**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간 **자율적 개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조건 완화**(가입금·거주기간 등) 및 **신규계원 가입**이 우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장비 등 지원) **제공**

*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 18개소 선정 후 시설·장비 구입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 현안을 발굴하고,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정책추진 노력(30점)	보통	ㅇ (추진계획 충실성) 상위정책과의 연계, 분기별 추진계획,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반영 등 계획의 충실성이 우수 ㅇ (정책이행 노력도) 과제별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여 매우우수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현장방문, 정책협의 등 현장의견 수렴계획을 일정대로 모두 완수하고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료를 제공해 정책소통을 위한 노력도 우수. 보도자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노력도 매우우수
② 목표(지표) 달성도 (35점)	미흡	ㅇ (성과지표의 부합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극성, 이해관계자 대립과 관련한 난이도 등 성과지표 부합도가 보통 ㅇ (목표(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함
③ 정책효과 (35점)	다소우수	ㅇ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성과, 김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종합적 정책효과와 향후 기대효과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다소미흡, 미흡, 부진과제 작성)

관리과제번호	등급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4-① 해양쓰레기 전(全)주기 대응 및 보전·개발이 조화로운 해양 관리 강화 (해양보전과)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상위과제인 주요정책과제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 추진계획 작성 ('25.5월) ㅇ 법령 제·개정 완료 건수 등으로 대표성 있게 성과지표 보완 ('25.5월)
Ⅲ-3-④ 해양수산 ODA 확대 및 양자협력 증진 (국제협력총괄과)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 ('25.6월)
Ⅳ-1-④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연계한 어가 소득 기반 강화 (수산직불제팀)	다소미흡	ㅇ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어가 소득 기반 강화 등 과제 목표 내용을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 ('25.5월) ㅇ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으로 정책효과 개선·보완('25.12월)
Ⅳ-2-② 어선어업 구조개선 추진 (어업정책과)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추진계획 충실성 향상을 위해 주요정책과제 등 상위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 과제와 성과지표가 부합될 수 있도록 보조 성과지표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며, 이와 연계하여 정책의 다양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임('25.上)
Ⅰ-2-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스마트해운물류팀)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 소통·확산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구체성 보완('25.4월) ㅇ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25.8월)
Ⅱ-2-① 기후변화 대비 등을 위한 안전항만 구축 추진 (항만기술안전과)	다소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부합도 및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ㅇ 상·하반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률 상향 제고('25.5·11월)

관리과제번호	등급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Ⅲ-1-② 해양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미흡	ㅇ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개선·보완('25.3월) ㅇ 해양바이오 확보·관리·이용 분야 핵심정책의 효과성 확산 방안 제고('25.12월)
Ⅲ-3-③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분야 통상협상 대응 (통상무역협력과)	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 소통·확산노력도, 정책효과개선·보완 필요	ㅇ 분기별 추진계획 개선·보완 ('25.3월) ㅇ 정책 소통·확산 방안 제고('25.12월)
Ⅳ-2-⑤ 지속가능한 국제 수산물 공급 여건 조성 (원양산업과)	미흡	ㅇ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부합도 개선·보완 필요	ㅇ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25.3월) 및 추진 ㅇ 성과지표 설명 구체화 및 목표치 등 개선·보완('25.3월)
Ⅳ-3-① 첨단·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양식산업과)	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상위 정책과제와 연계 정도, 전년도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추진계획 수립 ('25.4월) ㅇ 내수면산업의 발전을 위한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방안' 발표('25.2월)
Ⅳ-3-② 고부가 양식품목 전략적 개발 육성 및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양식산업과)	미흡	ㅇ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25.6월) ㅇ 굴산업 발전을 위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발표('25.1월)
Ⅰ-2-⑦ 선진형 항만안전 및 항만보안시스템 구축 (항만안전보안과)	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이행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과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정책효과 개선방안 마련('25.2월) ㅇ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현장 목소리 청취('25.3월)
Ⅰ-3-②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및 디지털 위치정보 제공 (항행정보정책과)	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정책이행 노력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부합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개선·보완('25.3월) ㅇ 과제이행 충실성, 노력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정책효과 개선추진('25.12월)

관리과제번호	등급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Ⅱ-1-② 부산항 북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미흡	ㅇ 추진계획의 충실성, 성과지표 부합도 및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이해관계자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개선·보완('25.6월) ㅇ 정책 홍보* 등 소통·확산 노력을 통한 정책효과 개선 보완('25.12월) * 별도 홍보용역 시행으로 정책효과 확산노력 예정
Ⅲ-4-③ 개발과 보전의 상생 및 공존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체계화 (해양공간정책과)	부진	ㅇ 정책 소통·확산 노력도 및 정책효과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부합도 및 상대적으로 저조한 달성도 개선·보완 필요	ㅇ 연안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실시('25년 연중) ㅇ 부서차원 미션·비전을 재정립하여 과제 목표와 연관성이 높고,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검토·반영 ('25.5월)
Ⅱ-3-③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체계화 (어선안전정책과)	부진	ㅇ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ㅇ 성과지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이행 노력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5.3월) ㅇ 성과지표 목표 조정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25.4월)
Ⅰ-2-⑥ 항만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 (항만물류산업과)	부진	ㅇ 정책이행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ㅇ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개선·보완 필요	ㅇ 과제별 추진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 수립('25.3월) ㅇ 효율적인 항만물류산업 및 항만운영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계류선박 관리방안 마련('25.3월) 및 '25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정책효과가 드러나도록 작성방식 개선·보완('25.12월)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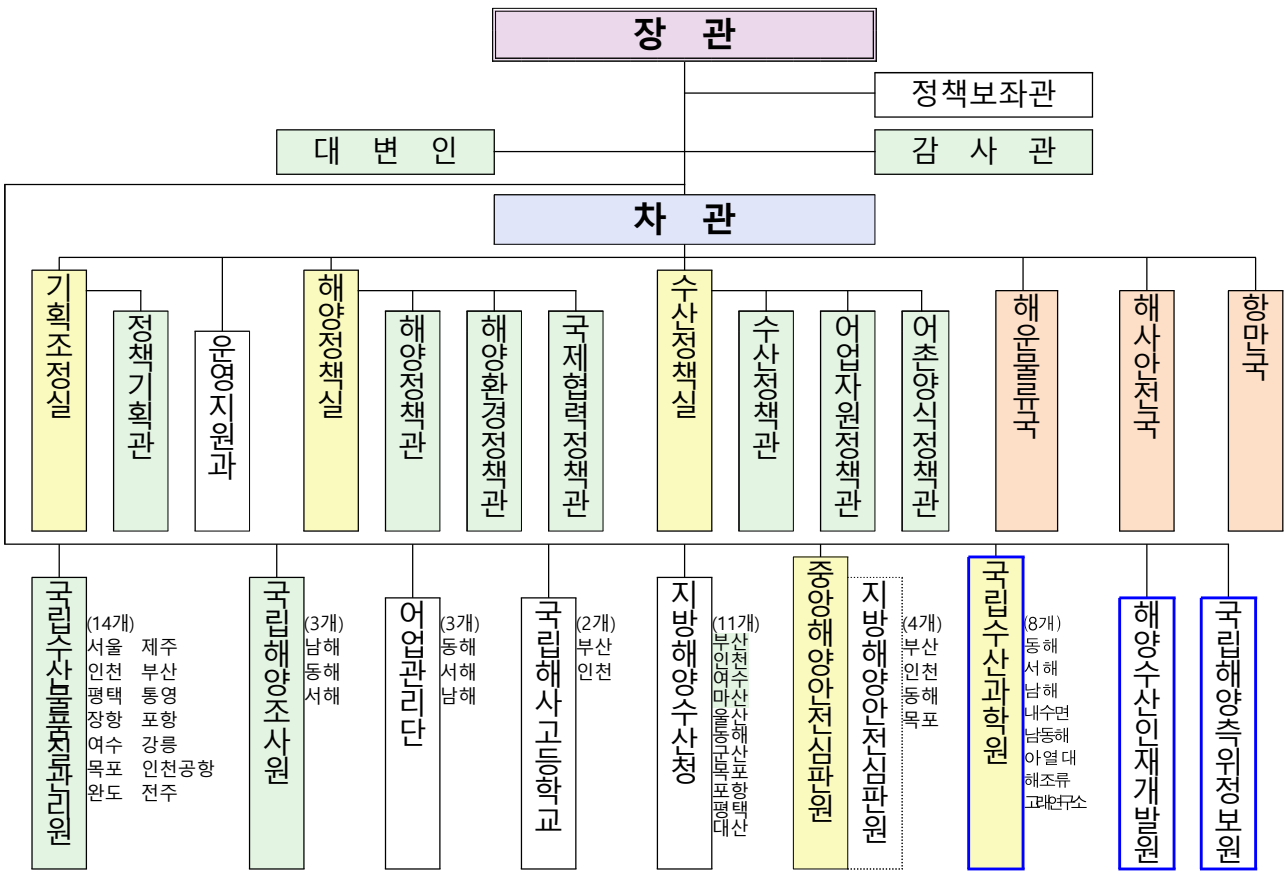
◇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관장

□ 핵심기능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구축
◈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 조직도

◆ (본부) **1차관 3실 3국 9관** (51과 6팀, 자율기구 포함)
◆ (소속) **68개** (1차 22개, 2차 41개, 3차 5개)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해양영토**(44만㎢, 육상면적의 4.4배)의 **보전·이용·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을 **진흥**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통합 해양행정 구현**

비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전략목표·성과목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국적 선대 확충 및 선화주 상생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수송망을 구축한다. 2.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하고 항만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한다. 4.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을 양성한다.
Ⅱ	안전하고 국민 친화적인 해양·항만을 조성한다.	1. 연안·항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2. 재해·기후위기에 안전한 연안·항만을 조성한다. 3. 해상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Ⅲ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행복을 키우는 해양공간을 구축한다.	1. 해양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여 해양선도경제를 조성한다. 2. 국민 행복을 위해 해양레저관광·해양문화 강국으로 도약한다. 3.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경제영토 확장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4. 해양환경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Ⅳ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활력넘치는 어촌을 조성한다.	1.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어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3. 친환경·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생산 환경을 조성한다. 4. 신선수산물 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Ⅰ.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한다.

1 원양 선복량(만TEU)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20ft(6.1m) 표준 컨테이너 박스 1개를 1TEU로 하여, 우리 원양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적재능력을 나타냄
- 조사기관 : 전문 조사기관(Alphaliner社)
- 조사대상 :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미주, 유럽 등 / 동남아 등 연근해 제외)
- 조사방법 : Alphaliner社 선사별 선복량 확인
- 측정산식 : 연도별 국적 원양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합

□ '24년 측정결과

○ '24년 12월 기준 국적 원양선사의 수송능력 **105.1만TEU**(신조발주 포함)으로 한진사태 이후인 **'17년 대비 2.5배 증가**한 수준

- HMM 대형 컨테이너선 12척 투입 등 선대확충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4번째로 국가 해상수송능력* 1억톤(DWT) 돌파

* 해상수송능력: 국적선사가 운용(소유·임대) 중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

□ 성과분석

○ (**금융지원**)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보다 55% 많은 **2조 3,679억원**(34개 선사, 40척) 규모의 **정책금융(투자·보증) 집행**

* ('21) 1조 9,683억원 → ('22) 1조 4,341억원 → ('23) 1조 5,191억원 → ('24.10) 2조 3,679억원

- 해운·항만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을 위해 유럽·아시아 등 대상으로 **14.8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외화 조달('24.4~7, 3차례)

* 해진공 외화조달규모(억달러) : ('22) 0 → ('23) 7.1 → ('24) 14.8

** 외화조달 리스크에 대응하여 최초로 스위스프랑(1억프랑) 공모채권 발행(10.1)

- 해진공은 **설립 이후** 선박 도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선박 유출 방지 등 수송능력 확충에 **총 11조 3,276억원**붉은박스 합계 지원

< 해진공 설립 이후 지원 현황('24.9 기준, 억원) >

자산확보 지원						경영안정 지원		합계
선박 금융*	친환경 설비	**친환경선 보조**	'컨'박스	물류시설	국가필수	**S&LB****	**자본 확충 등**	
55,489	5,717	**992**	6,682	5,024	235	**23,550**	**33,245**	130,934

* 선박금융 55,489억원 = 투자 29,239억원 + 보증 26,249억원

** S&LB(Sales&Leaseback) : 선사보유 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

○ **(친환경 전환지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컨설팅·금융·보조** 등 지원패키지를 신청부터 집행까지 **全과정 원스톱 지원**(5.23)

* 최대 5.5조원 규모(선박금융 5.4조원, 보조금 0.1조원, 금융·친환경·시황 컨설팅)

- 지원체계 구축 후 **3개 선사**(중견 2개, 중소 1개)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 추진 중**

* ▲한전발전자회사의 혼소발전을 위한 암모니아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액화 이산화탄소 캐리어 도입 금융 지원, ▲메탄올 DF 케미컬운반선 건조 금융 지원

< 친환경 선박 신조 원스톱 지원 흐름도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방안	규제대응 진단	►	비금융 지원	►	금융지원
세부내용	· 정보제공, 동향분석 · 규제대응 안내		·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선박건조 보조금 지원		· 선박 신조금융 지원 (투자/보증, 펀드 등)

○ **(선가 보조) 3개** 국적선사의 **15척** 친환경선박(총선가 2.4조원) 도입 지원을 위해 **총 226억원 지원**('23년 대비 지원규모 70% 증가)

* ('23) 130억원 보조(3개 선사, 12척 지원) → ('24) 226억원 보조(3개 선사, 15척 지원)

○ (**민간투자 저변 확대**)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6.25, 장관)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운 분야 민간금융 네트워크 조성

- **민간 금융투자 협의회*** 정기 개최(분기별/ 7.24, 10.29)를 통해 정부-공공기관-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

* 민간은행(신한, 국민, 우리, 수협, BNK), 운용사(세계로, VI), 해진공 등이 참여하여 선박 금융 정보 제공 및 해진공 보증 강화 방안 논의 중

- 민간의 해운·항만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업종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소개하는 ’**마리타임 컨퍼런스**‘ 개최(10.29, 부산)

* 해진공,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내외 민간금융기관, 리서치기관 등 500여명 참석

□ 향후 추진계획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지원**, 해운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28년 원양선복량 170만 TEU 달성** 예정

○ 중소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중소형 선박에 맞는 **별도 지원기준** 마련

* (예시) 1만톤 이하의 선박은 KOMSA의 친환경 예비인증등급이 아닌 친환경 설비 장착 여부 등 별도기준으로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지원

- 친환경선박 신조 **지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편** 추진 및 **중견선사**가 **투자**한 **친환경 선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추진**

* (개요) 친환경 선박 신조 시 선가의 30~50% 지원, 해진공·산은·수은·캠코 공동조성(소진율 26%)
(개편안) 최소 투자기관 축소(4→2개), 기관별 투자비율 유연화(25%→기관별 협의로 정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기재부 협의)

○ 美 무역정책 변화,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 대외여건 변동을 반영한 **「제6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26~’30)**」** 수립 추진(’25.12)

- 불황 시 국적선사 선대확보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 선주사 육성을 도모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25.上)

2 해양사고 인명 피해(사망 · 실종, 명)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관련 사망·실종·부상, 해양시설 손상, 선박 충돌·좌초·전복·침몰 등의 사고 발생 건수
- 조사기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사대상 : 당해연도 해양사고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인원 수
- 조사방법 : 해양사고 발생현황 통계자료 요청(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측정산식 : 해양사고 발생현황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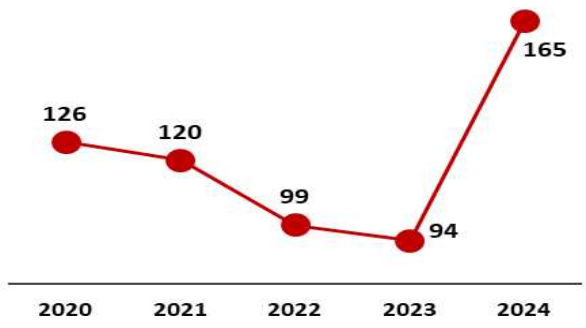
□ '24년 측정결과

○ **사망·실종 총 165명** 발생, 최근 5년('19~'23) 평균(107명) 대비 55% 증가, 전년(94명) 대비 76% 증가

* ('19) 98명 → ('20) 126명 → ('21) 120명 → ('22) 99명 → ('23) 94명 → ('24) 165명

○ **(선종별)** 어선(119명), 유조선(15명), 기타선(11명), 일반화물선(8명), 수상레저기구(6명), 예인선(4명) 순으로, **어선**에서 **72%** 차지

○ **(유형별) 안전사고**가 **85명**(5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뒤이어 **전복·침몰** 58명(35%), **충돌·접촉·좌초** 20명(12%), 화재·폭발 2명(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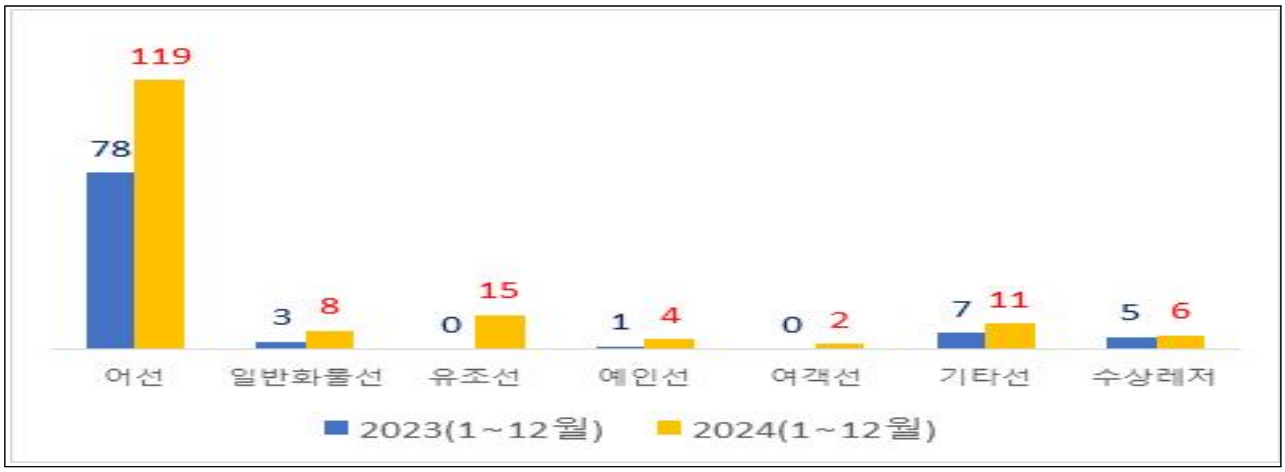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사망·실종 추이>



<최근 5년간 사망·실종 사고 현황>

□ 선종별 인명피해 추이(전년대비)



□ 사고 유형별 인명피해 추이(전년대비)



어선+비어선 사망·실종

□ 월별 인명피해 추이(전년대비)



어선+비어선 사망·실종

□ 성과분석

〈 지표 하락원인 〉

○ 연해 자원 고갈로 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 증가**, 선사의 **안일한 안전관리**와 **무리한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인명피해 지속

- 특히, **'24년 3월**에는 전년대비 **높은 파고 발생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전복·침몰 등으로 인한 **대형**(3명 이상 사망·실종) **해양사고**도 **증가***

* '24년 3월 : 전복·침몰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 최다 발생(4건, 26명)



최대파고 3미터 이상 발생현황('22~'24, 기상청 파고부이 데이터)

□ 향후 추진계획

○ (목표)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예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35% 이상 저감** 추진

* 해양사고 사망·실종: **165명**잠정('24) → **107명**('19~'23, 5년 평균) 이하로 관리

○ (주요 실천방향)

- (주요 사고 예방조치) 인명피해가 큰 (총 165명('24, 잠정) 중) **전복·침몰**(58명(35%))/**안전사고**(85명(52%) 중 해상추락 56명)에 대해 **심층분석**(중해심 재결서 등) 및 **주요 발생요인 제거·보완*** 등 추진

* (**전복·침몰**) 해수 선외배출 저해로 사고원인이 되는 목갑판, 개구부 덮개 등 점검·보완 / (**안전사고**) 해상추락 난간·미끄럼방지 설비 점검 등, 양망기 끼임 안전설비·보호장비 보강

- (**현장 이행력 강화**)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12종)* 배포 및 이행독려, 인적과실 저감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 컨설팅**** 등 추진

* 해상추락, 어구 신체가격, 양망기 끼임 등 12종 / 5개 언어 번역본 / 1만부 배포
** 정부 어선안전감독관(9명) 및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담 지원인력(10명) 확보

- (**현황 특별관리**)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및 **인명피해** 현황과 **대책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평가**(매월/분기별)** 실시

* 사고원인 기반 실효성 있는 예방책 논의 / 수산실, 중해심, KOMSA, 수협 등
** 소속·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이행력 강화를 위해 본부 주관 이행실태 점검 추진

3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남·북극 및 대양 주요 연구 조사 정점 목표('26년 1,250점) 대비 탐사 진척도
- 조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남·북극해, 아북극-서태평양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연구 정점 수
- 조사방법 : 연차별 성과보고서, 탐사보고서, 관측 데이터 등 확인
- 측정산식 : 실제 조사 정점 수(누적)/ 조사 목표 정점 수(%)

□ '24년 측정결과

○ '24년 극지 및 대양 조사 정점 수는 369점(누적 1,958점)으로 최종 목표('26년 누적 1,250점) 대비 156.6%로 '24년 목표(95%) 초과 달성

< 6년간('21~'26) 목표 및 실적 >

구분		'21	'22	'23	'24	'25	'26
목표	극지 및 대양 탐사 진척도(%, 누적)	57.4%	90%	92.5%	95%	97.5%	100.0%
	연도별 정점 조사(점, 누적)	718	1,125	1,156	1,188	1219	1,250
실적	극지 및 대양탐사 진척도(%, 누적)	80.6%	90.3%	127.1%	156.6%	-	-
	정점 조사(점, 누적)	1,008	1,129	1,589	1,958	-	-

* 23년 성과측정 결과 최종 목표치를 초과하여, 26년 기준 최종목표치 재설정 필요

□ 성과분석

○ 남·북극해 및 대양 정점 조사('24년 369점)를 통하여 해양·생태·지질 등 주요 관측정보를 확보*하고 해양과학 연구영토 확장

* 북극해 해저지질 조사, 인도양 중앙해령대 심해열수공, 아북극 및 북서태평양 등

□ 향후 추진계획

○ 연구 선도국과 공동탐사 네트워크 확대, 북극 미답해역에서 해빙-해양-해저지질 조사를 통한 환경변화 연구 등 극지 및 대양 탐사 역량 강화

4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발행 수(건)

□ 성과지표 개요

〈 극지 및 대양연구 분야 논문 발행수(건) 〉

- 개념 :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 분야 논문 발행 수
- 조사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조사대상 : 극지 및 대양 연구분야 관련 사업 소관 과제
- 조사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성과 확인
- 측정산식 : 극지 및 대양분야 연구 논문 발행 건수 집계

□ '24년 측정결과

○ '24년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사업 SCI논문 발행 59건 달성

- 최근 5년간 동향과의 비교

성과지표명	'20	'21	'22	'23	'24	'26 (최종목표치)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사업 SCI 논문 발행수(건)	54	65	62	101	59	60

□ 성과분석

○ 극지 및 대양연구 관련 과학적 현상을 실험 및 관측을 통해 규명하며 그 연구성과로 59건의 논문 발행

- 태풍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북서태평양에서 슈퍼태풍이 연중 강하게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2024, Nature Comms)
- 서남극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녹고 있는 스웨이츠 빙붕의 융빙 원인을 지역 해류의 역할에 주목하여 규명함(2024, Nature Comms)

□ 향후 추진계획

○ 극지·대양 탐사를 통한 미개척 환경의 자원 정보 및 기후 예측 능력 확보 등 연구 역량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문제의 해결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기여

4 수산물 수출액(억불)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수산물 수출액 확대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
- 조사기관 : 관세청
- 조사대상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실적
- 조사방법 : 수산물 수출 통계자료 요청(관세청)
- 측정산식 : 수산물 수출 통계

□ '24년 측정결과

○ ' 24년 수산물 수출실적 30.3억불 달성

-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전년 대비 1.2% 증가한 30.3억 달러를 기록

* 수산물 수출(억불) : ('20) 23.1 → ('21) 28.3 → ('22) 31.5 → ('23) 29.9 → ('24) 30.3

□ 성과분석

○ 김 산업 육성 및 가공 기업 지원으로 **김 최고 9.97억불**(전년대비 25.8%↑) 및 **2년 연속 수출 1조원 달성, 참치 5.9억불**(전년대비 4.7%↑) 기록

- 김 산업 진흥구역 2개소(전남 진도·장흥) 추가 지정, 김 산업 전문기관 1개소(한국수산무역협회) 추가 지정
-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최초 개설('24.9), 수산식품업체 종사자 대상 식품 개발·마케팅 등 가공분야 전문교육 추진(37명 수료)
- 우수 중소 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위해 식품기업 협업 상품개발 및 판매 지원 '새싹기업 도약지원' 사업 '24년 신규 추진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람회, 상담회 지원,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로 수출기업 **천만불 수출기업 62개사** 달성

-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지원 확대('23년 327 → '24년 411개사)로 55백만불 최대 계약 성사
- 기업에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23년 35 → 62개사)로 4억불 수출 실적 창출('23년 2.3억불)
-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시범 운영('24.5월)으로 수출절차, 수입규제 등 수출기업 애로 해소 적극 지원(총 113건)

○ 해외 진출 마케팅 추진으로 **일본 6.6억 달러**(전년대비 3.4%↑), **미국 4.8억 달러**(전년대비 11.7%↑), **유럽 2.3억불**(전년대비 16.4%↑) 기록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리 무역지원센터 신규 개소('24.11) 및 프랑스 파리 올림픽 계기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24.10)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중심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K-씨푸드관 운영 확대(6개국 7개소 → 7개국 8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해외시장 개척** 및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을 통해 '25년 **역대 최고 수출액**(31.5억불, '22년) **초과 달성** 목표

-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社 대상 수출바우처**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
-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現중화권→改편미주·중동), 해외 대형유통망 입점 지원
- **방한관광객** 대상 **마케팅** 실시(신규), 부처합동 K-박람회 확대(1→3회)
-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인증** 및 **수출보험 가입**(업체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김 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 지원(융자)**' 선정 시 우대 지원(2월~)

* 우대지원액 검토/'25년 지침 개정(1월) → 사업자 모집공고·선정(2월)